



제주대 재직 중 기록

아라生活 32.5年

姜 起 春 지음

도서출판 신아



아라生活 32.5年

01 | 경제칼럼

02 | 제주일보 시론

03 | 제주대 신문

04 | 각종 기고문

머 리 말

Praise the Lord.

1993년 3월 2일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로 취임하여 일하다 보니 어느덧 학교를 떠나야 할 2025년 8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는 2월의 어느 날이었다. 문득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지? 라는 질문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제주대학교 재직 중 기고했던 글들을 책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정리하다 보니 4권의 책이 되었다.

제1장 아라생활 32.5년-경제 칼럼은 제주 KBS 경제한마당 경제 해설, 제주 CBS 경제 칼럼, 제주 극동방송 경제 칼럼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내용을 글로 정리하였다. 제2장 아라생활 32.5년-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시론에 기고한 글들을 정리하였다. 제3장 아라생활 32.5년-제주대신문은 제주대 신문과 제주대 경제학과 경제학보 및 경제학과지에 기고한 글들을 정리하였다. 제4장 아라생활 32.5년-각종 기고문은 중앙지 및 지방지, 잡지, 사보, 회보, 의정 백서 등에 기고한 글들을 정리하였다.

책 제목을 (제주대 재직 중 기록) 『아라生活 32.5年』으로 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65년(780개월) 인생의 절반인 32.5년(390개월)을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250m 고지인 아라 캠퍼스에서 보냈다. 33번에 걸쳐 신입생을 매년 만나고 졸업생을 사회로 보내며 동문과 재회하는 것은 교수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훈철 대표님과 교정을 봐주신 황중돈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격려를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셀라와 셀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5년 5월 30일

연구실에서 저자

아라생활 32.5년 : **경제칼럼**

목 차

I. 제주 KBS 경제한마당 경제해설 11

- 물가 13
- 만불시대 16
- 경기 논쟁 19
- 가격 파괴 22
- 고금리 현상 25
- 부동산실명제 28
- 국제경쟁력 31
- 한은 독립 34
- 엔고 37
- 국민계정 40
- 지방자치 43
- 지하경제 46

II. 제주 CBS 경제 칼럼 49

- 세계 속의 한국경제(2002.10.29.) 51
- 국가이미지의 경제적 가치(2002.10.31.) 53

• 새로운 부동산정책(2002.11.6.)	55
• 토지문제(2002.11.14.)	58
• 2003년도 예산(2002.11.21.)	60
• 저축(2002.11.27.)	62
• IMF 5년의 평가(2002.12.05.)	64
• 선택의 기준(2002.12.12.)	66
•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	69
• 결산보고서	72
• 디지털경제 시대	75
•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78
• 생태관광	80
• 뇌물과 선물	82
• 21세기 신산업	84
•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	87
•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90
• 소비중독증	93
• 지하경제	95
• 도덕적 해이	97
• 지식 국가	99
• 법인세 논쟁	102
• 내국인면세점	105
• 공무원 행동강령	108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111

III. 제주 극동방송 경제 칼럼 113

- 이기적인 행위와 신앙(2001.10.25.) 115
- 올바른 경제 가치관(2001.11.1.) 117
- 지혜로운 소비(2001.11.8.) 119
- 과소비의 기준(2001.11.15.) 122
- 우상이냐?(2001.11.22.) 124
- 소득 불균형(2001.11.29.) 127
- 경제정의의 성경적 기초(2001.12.6) 130
- 도박(2001.12.13.) 132
- 결산보고서(2001.12.27) 135
- Interview(2001.12.30) 138
- 부동산(2002.1.3) 142
- 부패 공화국(2002.1.10) 145
- 세금(2002.1.17) 148
- 지하경제(2002.1.24.) 151
- 주식투자(2002.1.31) 154
- 뇌물(2002.2.7) 157
- 최고경영자(2002.2.14) 160
- 이자(2002.2.21.) 163
- 환경(2002.2.28.) 166
- 임금(2002.3.7.) 169
- 선택의 문제(2002.3.14.) 172

• 도덕적 해이(2002.3.21.)	175
• 저축(2002.3.28.)	178
• 정부의 역할(2002.4.4.)	181



제주 KBS 경제한마당 경제해설

물가

연초부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교통요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되었고 유치원 납부금에서부터 대학교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교육납부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가계지출이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년 연초가 되면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있게 되는데 특히 제주도는 연초에 친구간이 끼어 있어 집세인상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요금과 집세 등 서비스 요금 인상이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먼저 알아보고 제주도내 물가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요금이 왜 연초에 오릅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연초에 가장 많이 오릅니다. 1년 물가상승률의 반 이상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연초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물가 특히 서비스 요금의 결정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 근로자들이 매년 봄 임금협상을 벌이듯이 연초에 서비스제공자들이 정부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요금의 결정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서비스 요금의 결정을 시장에 맡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규제로 왜곡되어 온 가격구조를 바로잡고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 오름세 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경우에 서비스 요금 결정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연쇄적인 가격인상을 가져와 물가의 안정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경쟁력, 금리, 임금 등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주도의 물가수준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은 6.3%였는데 제주도의 물가 상승은 6.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요금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8.3%인데 비해 제주도는 9.8% 증가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5%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왜 제주도의 서비스 요금인상률이 높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관광지의 특성상 관광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오른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는 쉬우나 떨어지기는 힘든 물가의 특성상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신구간 이사 집중에 따른 집세 상승 및 상가의 임대 가격상승이 서비스업체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내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관광 성수기 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제조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불가능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대체로 선거전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상반기 중에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불시대

올해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고 1977년에 1,000달러였는데 올해는 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꿈의 소득’이라고 불리는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소득수준으로만 보면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그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소비변화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비는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비라함은 소비의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의 양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우리 경제는 1970년부터 1988년까지는 소비가 연평균 6.8% 증가하여 국민총생산으로 측정한 소득증가율 8.7%를 밑돌았으나 소위 과소비 시기로 불리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소비가 연평균 8.4% 증가하여 소득증가율 7.2%를 1.2% 포인트나 상회하였습니다. 최근에 과소비 현상은 많이 줄었으나 만달러 소득 시대에 소비의 양적인 증가는 지속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의 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소비의 질적인 변화를 소비패턴의 변화라고 하는데 과거 의식주의 필수적인 소비 중심에서 레저·문화·오락 등 선택적인 소비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등 소비패턴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비패턴이 선진화가 되는 원인은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여행이나 휴양비 관련 지출 및 스포츠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여행 및 숙박업 등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건강식품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소비가 높아지게 되고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 즉 유료양로원이나 건강 진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육아 관련 지출이 늘고 유아원이나 가사를 대신해 주는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함에 따라 컴퓨터 관련 산업이나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의 산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달러 소득 시대에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양적인 소비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는 소비자로서 거슬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3월부터 방영될 유선방송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소비는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고 특히 요즈음은 ‘가격파괴’ 시대를 맞이하여 할인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하시어 진출하시면 성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논쟁

얼마 전에 정부와 재계 사이에 현재 경기상태에 대한 진단의 차이 즉, 소위 경기 논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몇 차례 이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재계의 맞대결로 비추어지는 면이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경기란 경제활동의 수준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는 정체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 순환하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가 진행된 1970년 이후 5번에 걸쳐 경기가 순환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 분기로 발표되며 GNP라고도 불리는 국민총생산의 증가율로 판단하기도 하고 매월 발표되는 생산, 소비, 투자 등에 관한 자료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현재의 경기상태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다는 데는 양자가 모두 동의하지만,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성장속도가 빨라 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재계는 현재가 안정 성장 국면이므로 좀더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경기의 차별화 현상도 경기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의 차별화 현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경기의 차별화 현상은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 업종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미, 울산, 창원지역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대구·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전자 등 수출업종과 중화학공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업종과 섬유·신발 등 경공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은 호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93년 1월부터 경기가 회복되었고 작년 말 현재 제조업가동률은 85.5%로 사상 최고치를, 실업률은 2.2%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는 등 강한 상승세를 탄 이후 연말까지는 그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기는 작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4분기도 작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입니다.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와 건설경기가 주도하고 있어 경기상승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위험이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6월에 4대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서 현재의 경기 상승세를 잘못 관리하면 경제의 안정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 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격 파괴

개방화·자유화라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 최근 ‘가격파괴’로 불리는 가격혁명이 국내에도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격파괴’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활필수품, 내구소비재, 서비스 요금 등 많은 분야에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완전 개방이 되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격파괴’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격파괴’란 기존의 가격결정행태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생산자가 생산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확보를 위해서 이윤을 축소해 가격을 낮추거나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가격파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격파괴’는 할인점이나 창고형 매장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격파괴’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여 금융시장의 가격인 금리도 은행을 중심으로 수신 금리는 인상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되는 등 파괴 현상을 보입니다.

‘가격파괴’ 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었나요?

이러한 ‘가격파괴’ 현상은 한마디로 ‘소비자 주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중심이 되는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율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고,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생산자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왕이 되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감동 등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 개념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소비자 주권’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파괴’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가격파괴’ 현상이 기존의 재래상권이나 소매상을 무력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또한 물가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통 폭리를 없애고 유통업과 제조업 사이에 직거래가 형성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격파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시장에서는 유통단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고 은행 등 서비스업에서는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격파괴’ 현상이 제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농·축·수산물 등 1차산업에 있어서는 유통구조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차산업에 있어서 유통구조개선 노력은 많이 이루어져 왔습시다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낮은 가격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응 전략은 품질향상을 통한 차별화 전략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파괴’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도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내·외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의 관광산업이 ‘보여주는 관광’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의 전환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뒷거래 추방 등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통해 싼 가격으로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금리 현상

작년에 회사채수익률로 본 금리 수준이 12%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 15%대에 이르러, 작년에 비해 3%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더구나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는 법정 최고한도인 25% 수준에 이르는 등 고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상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듯이 자금시장에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12% 내지 15%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먼저 선진국의 금리 수준이 5% 내지 6%대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자금 수요의 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으므로 기업들이 시설 확충을 위해서 또는 운

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의 수요를 증대시켰습니다. 둘째는 은행권의 유가 증권투자로 인한 자금공급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임으로써 은행들이 많은 자금을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로 운영하였는데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임으로써 투자자금을 현금화시키지 못해 은행권을 통한 자금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수용함으로써 금리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외, 세계적인 금리 동반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작년보다 2%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고 영국의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먼저, 금리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국제경쟁력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높으면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높은 금리 수준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 국가이므로 돈을 기업에 분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

려 쓰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금리 현상은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을 한층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화량을 늘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현재의 고금리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케인즈의 주장대로 통화량을 늘리면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게 되므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면 금리는 떨어질지 모르나 물가가 오르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다시 임금 상승을 가져오고 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대를 가져와 금리하락으로 인한 비용감소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 오름세 심리가 확산되면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를 수도 있다는 피셔의 주장도 있어서 통화량 증가-금리하락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만 처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또 하나의 경제혁명으로 불리는 부동산실명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그동안 땅값 및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하였던 서민 대부분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실명제란 무엇이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실명제란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이름을 감춘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으로 되어 있던 명의신탁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이내에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지가는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평가된 소위 거품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평균 땅값이 두 자

리씩 뛰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거품의 붕괴로 1989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더니 1992년 1/4분기부터는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지가 상승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하던 지가가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경기 호황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활황을 보인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지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요. 주가 상승이 있고 1년 후부터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작년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내부요인으로 부동산경기 10년 주기설의 영향을 들 수도 있습니다. 1968.78.88년에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1998년에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부터 상승 기대를 보인 것입니다. 그 외, 4대 지방자치제 선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 물가 불안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부문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대형주택은 급매물의 등장으로 가격이 내려가겠으나 중·소형주택은 다주택 보유자의 급매물 등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가구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실명제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주택매입을 유보하고 있는 가구들이 늘어 전세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실명제로 그동안 투기의 장이었던 토지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부문에서는 이미 가격파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명제 하에서는 어떠한 투자전략이 바람직할까요?

네, 부동산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부동산만 사두면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과거의 신화는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가수요, 투기 중심의 전략에서 실수요, 투자 중 심으려 전략을 수정해야 하겠고 부동산투자자도 공금리 수준의 이익만 남기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의 하나는 ‘국제경쟁력’입니다. 작년에 스위스의 민간 연구재단인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 경영개발연구소(IMD)가 공동으로 발표한 「1994년 세계 경쟁력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4년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1993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이며 국제경쟁력으로 본 한국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국제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인 정의가 있지만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을 정의하면 한 국가의 정부·기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을 포함한 평가대상 41개국 중에서는 24위를 차지했고 18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하여 1993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나머지 3개국 즉,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개발도상국 중 각각 1, 2, 3위를 차지하여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제경쟁력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모두 8개 분야 381개 항목에 걸쳐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력,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 3개 분야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정부, 기업경영, 국제화, 금융 등 5개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국제화와 자율화의 부족입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물적 요소(hardware)와 인적요소(software)가 있습니다. 물적 요소는 어느 정도 주어진 것이므로 인적요소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인적요소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가는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철저한 프로 정신과 전문가 정신을 가진 기술자(technician)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료들도 전문 관료(technocrat)가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겠습니다. 특히, 행정관료들은 그동안 규제와 간섭을 통해 익숙해 왔던 관료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

만을 만들어 주고 그 규칙 속에서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는 지를 감독하는 역할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제주도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관료, 기업가, 근로자 등 인적요소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기후조건, 해양조건, 관광자원 등의 물적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에서는 천혜의 기후 및 환경을 이용해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대일본 수출강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주산업이면서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산업의 경우 즐기는 관광으로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소비자 만족을 지향하는 관광과 싼 가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가격파괴로 제주 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과거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행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은 독립

지난 2월 2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겨짐으로써 1987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시작된 한국은행 독립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원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정책의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한다는 것과 현재 한국은행의 산하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분리하여 기존의 증권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기존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줄여서 금통위라고도 하는데요, 금통위 의장을 겸직함으로써 금융정책의 결정에 정부가 간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금통위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직함으로써 정부의 간여를 축소하고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하여 금융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재정경제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존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재정경제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금통위 의장의 한국은행 총재 겸직에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금통위원의 추천기관이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어서 추천 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또한 금통위 의장은 9인의 금통위원 중 재정경제원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감독원의 분리독립에 대해서는 감독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독립 되더라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금융감독원과의 감독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우리 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

하면 당장 가계지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정의가 이룩되지 못하며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은 금리 및 임금 상승 등을 가져와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떨어뜨리게 합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량의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통화금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인데 그 배경에는 연평균 30%의 높은 통화 증가가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중앙은행 독립의 정도가 높을수록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실제의 증거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관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격렬한 논쟁은 충분한 연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부처 간의 실력대결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1세기 선진사회에 적합한 조직이 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엔고

최근 연일 일본의 엔화가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소위 엔고 현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엔고 현상이 나타났었지만, 이번의 엔고 현상은 멕시코 페소화의 폭락 사건, 영국 베어링 은행의 파산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형 사건들과 맞물려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의 엔고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971년 1달러당 360엔이었으나 86년에 200엔대에 돌입하였고 작년 7월에 100엔대마저 무너졌습니다. 올해 들어 연초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3월2일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한 엔고 현상이 연일 지속되어 달러당 80엔대에 한때 진입하였고 3월11일 현재 1달러당 91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엔고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00엔당 790원이었던 원화는 3월11일 현재 861원으로 작년 말 대비 9%의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엔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인 요인으로 소위 쌍둥이 적자로 불리는 미국의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엔고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멕시코 폐소화의 폭락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기로 파산한 영국 베어링은행 사건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세계 중심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치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엔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고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엔고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영향에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등의 제품은 엔고로 인해 수출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조립용 일제 부품이나 시설재로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과 엔화 표시로 차관을 도입한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일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해

엔고를 잘 활용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엔고가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엔고 현상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수출증대 및 관광 수입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엔고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객들이 관광토산품 및 면세품을 구매함으로써 제주도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 엔화로 차관을 도입한 도내 행정기관이나 회사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엔고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의 엔고 현상은 활용만 잘 하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85년부터 88년까지의 엔고의 좋은 기회를 정부의 정책 부재와 기업의 구조조정 실패로 놓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시설재 등에 있어 일본 중심의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화도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원고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엔고를 교훈으로 삼아 지금부터 원고 시대에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계정

지난 3월 15일 한국은행은 「94년 국민계정」을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한국경제의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종의 경제 성적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계정이란 무엇입니까?

네, 국민계정은 한나라의 경제활동을 집약해서 나타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통계인 소득, 자금순환,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등을 다루는 것으로써 경제 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잠정치이고 확정치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94년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94년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소득에 관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302조를 기록해 경제 규모로 볼 때 93년의 세계 12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여 94년에는 세계 1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 이것을 경제성장률로 보면 94년에는 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92년의 5.1%, 93년의 5.8%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한편, 1인당 국민소득은 8,483달러, 원화로 는 6,800,000원으로써 93년 세계 36위에서 작년에는 세계 32위로 4단계나 뛰어 올랐고 올해는 꿈의 소득인 만달러 시대에 들어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 외 생산활동과 지출 활동 등을 나타내 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먼저 생산활동에는 산업별로 성적표가 나타나 있는데요. 농림어업은 9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94년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1.2%의 성장을 하였고 제조업은 93년의 5% 성장에서 작년은 10.4%를 기록해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은 4.6% 성장으로 부진하였고 서비스업은 10.7%를 기록해 큰 폭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지출 활동을 살펴보면, 소비에 있어 민간소비는 7.4% 성장하여 93년보다 1.7%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정부 소비 역시 93년의 증가율보다 1.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에 있어 건설투자는 4.6% 성장하여 93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설비투자는 23.3% 증가하여 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은 14.6% 증가하였고 수입은 22%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제활동의 특징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성장의 내용이 견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의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증가하여 내용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비투자의 증가는 현재 2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 확장세를 다소 연장시켜 줄 가능성이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점은 민간소비의 증가입니다. 민간의 과소비는 현재의 활황 경기를 과열로 가지고 갈 우려가 있어서 소비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 경제 성적표를 고려해 볼 때 올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단기과제로는 물가안정과 경상 수지 적자 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적정성장률을 7.5%로 보고 있는데요. 8.4%의 높은 성장과 민간의 과소비 현상은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므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수입증대와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해외여행 급증으로 불어난 경상 수지 적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끝으로 장기 과제로는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작년도 경제성적이 좋았던 것이 엔고 등 외적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통합선거법 개정이 여야간에 합의를 봄으로써 오는 6월 27일에 4대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의 경제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네,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경제적인 의미는 지역경제 체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의 입지를 고려하는, 즉, 지역경제를 중시하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방 자치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지방 자치정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재정자립도 및 경제성장에 있어 전국 평균에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은 61%였는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9%로 전국 평균에 12% 포인트나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최근 2년간 전국 평균 수준은 7%였는데 제주도는 4.1%로 2.9% 포인트나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로서는 재원개발을 위한 지역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영수익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 무역이 설비되고 종합무역센터 건립이 계획된 것 등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네, 첫째는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으로 측정되는 양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교통·환경·의료 등 질적인 생활 수준 즉,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고객 만족이나 고객 감동을 지향해야 하듯이 행정관료들도 과거의 관료화된 조직과 관행에 익숙해 있던 행태에서 변신하여 철저하게 주민만족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제주도민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개별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양성 또는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지역경제 개발 모형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부문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화·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며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개발 모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 속에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구성원 모두가 준비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국제화·지방화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틀(new paradigm)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국제화가 필요한 관광산업을 축으로 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새로운 사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경제

지난 2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져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도둑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란 무엇이며 그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 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는 왜 발생하며 그 피해는 무엇입니까?

네,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라고 하는 소위 지하경제 법칙이 설명해 주고 있듯이 세율이 높거

나 규제가 강하면 그러한 법률과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더욱 애쓰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경제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데요.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물적 및 인적자원이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조세 회피라는 기회를 따라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탈세하기 힘든 계층과 자영업자와 같이 탈세가 쉬운 계층 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계층 간 불신이 커집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크기와 그로 인한 세금 누출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하경제는 그 성격상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가뭄이라 지하수 찾기가 한창인데요. 지하경제를 추정하기는 지하수 찾기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99조에서 111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장경제 즉 국민총생산의 37%에서 42%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 관련 지하경제 규모는 74~78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관련 지하경제 규모가 16~24조, 과외비 지출 4조, 서비스업 종사자 팁이 5조 등입니다. 한편, 99~111조의 지하경제 규모로 인해 과세하지 않은 세금이 12조~14조로 추정되어 1993년 전체 국세 수입 39조의 32%~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규모와 탈세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강화와 세무 행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단속 및 징세의 강화보다는 세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두 방안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경제원은 첫 번째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징세를 강화하면 더욱 지하로 숨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제개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당근을 주는 대신 탈세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채찍을 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의식변화일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활화되어야겠습니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 소위 쌍둥이개혁이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경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주 CBS 경제 칼럼

세계 속의 한국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 무역협회에서는 전 세계 주요 기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무역·사회 등 주요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2위를 차지하는 등 스포츠에서 거둔 성과도 놀랍지만, 전 세계에서 109위에 해당되는 작은 국토 면적과 26위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놀랄 만합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산업의 경우 반도체와 박막 액정모니터(TFT-LCD) 생산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 타이어 생산은 세계 3위, 자동차 생산은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철강생산량은 세계 6위, 수산물 어획량은 세계 11위, 쌀 생산량은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 속에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총생산은 세계 13위, 교역규모는 세계 13위, 외화보유액은 세계 4위를 차지

하는 등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1위를 차지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다소 떨어졌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물가와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아파트 임대료는 세계 8위, 사무실 임대료는 세계 9위, 물가상승률 세계 10위를 차지하였고 실업률은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는데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고통지수가 말해주고 있듯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편익이 경제의 양적 성장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수십 년 만에 달성한 소위 압축성장으로 말미암아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IMF 경제체제라는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분명 대단합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로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가 원칙에 충실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든든히 다져 경제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10.29.)

국가이미지의 경제적 가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이미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만남에서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상품이나 기업, 국가 등도 인상 즉,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몇몇 상품들 즉, 반도체, 박막 액정 모니터, 선박, 타이어, 자동차, 철강 등의 이미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표 가치를 살펴보면 세계 최고 브랜드를 자랑하는 코카콜라의 시장가치는 696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0조 원이며 그밖에 마이크로 소프트가 83조 원, IBM이 66조 원, 우리나라 삼성의 상표 가치는 10조 8천억 원 등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의 상표 가치는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유형의 자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어떨까요?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한강의 기적’이나 ‘88 올림픽’ 등의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한국전쟁’이나 ‘분단국가’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룩한 세계 4강의 성과로 오! 필승 코리아와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49개국 중 29위인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아직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국 102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아직도 국가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편,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현대음악, 미술,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세계인들에게 강렬한 국가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이미지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 2002년 월드컵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려면 1조 8천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당장 수출 상품의 단가를 10%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그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과거 우리는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도 이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높아진 우리나라 상품과 기업과 국가이미지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부와 경제계 및 모든 국민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10.31.)

새로운 부동산정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97%에 이르고 있지만 43%의 가구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으며 결혼하여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나 상승하였고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나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하는가 하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4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주택 공급 물량이 그 요인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 투기수요와, 재건축 붐에 따른 이주수요, 그리고 전세금 상승에 따라 전세에서 구매로 전환한 전환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냉온

탕식'이니 '양치기 소년'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니 등의 여러 비난을 받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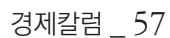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땅값이 평균 30% 하락하자 부동산 경기라도 살리겠다고 1977년 이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1998년 2월 민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율화하였습니다. 그러자 97년에 평당 464만 원이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들어 평당 7백만 원으로 급등하였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실제 아파트 가격은 적정 가격보다 40%에서 54%가 고평가되어 상당한 크기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냉온탕식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98년 이후 무려 43차례나 부동산주택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

(2002.11.6.)



토지문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토지 소유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었고, 지가상승률이 높았으며,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를 살펴보면 전국의 땅 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편중 현상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성남 등에 특히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가 상승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964년부터 1991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가는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적정 지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의 토지이용과 토지거래는 전국 평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지역의 지가 변동은 지가 상승기에는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크고 지가 하락기에는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불안정한 경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의 토지거래는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말미암아 7대 선도프로젝트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와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측면에서 볼 때 지가의 상승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 행정당국은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토지 보유보다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 또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땅을 필요한 때에 사는 수요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2.11.14.)

2003년도 예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보다 1.9% 증가한 111조 4천 8백억 원 규모의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1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IMF 구제금융 이후 1998년부터 매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해 온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006년보다 3년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2000년 22%로 크게 상승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인 2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부문별 예산의 우선순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문별 증가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안전·건강 분야가 21.9%, 사회복지 분야 9.3%, 인건비 8.6%, 교

육비 8.2%, 국방비 6.4% 등입니다. 특히,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비가 6.1%, 사회간접자본 4.8%, 정보화 4.4% 등 이들 분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셋째는, 10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경상 경제성장률이 8~9%가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짜인 것인데요. 그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20조 2천억 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2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어 봉급생활자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 및 심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 정도 지적해 보면

첫째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별로 연초에 성과 목표를 정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 배분에 반영하면 정부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비율은 0.23%에 불과합니다. 즉, 100조 원의 예산에 2천3백억 원 정도만 수정하고 그것도 지역구 사업 ‘끼워 넣기’ 중심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국회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11.21.)

저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현재 소비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개인이 저축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저축도 본인이 소비하든 자녀가 소비하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소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욕망과 소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는데, 소득증가분에 대한 저축증가분의 비율을 저축성향이라고 합니다. 저축성향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소비에 큰 비중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저축성향이 낮은 사람은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큰 비중을 두는 현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보는 고전학과 학자들과 소비가 미덕이라고 보는 케인즈학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소비가 미덕일 수도 있고 저축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이 미덕임이 틀림없으며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저축이 풍부해야 하므로 저축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은 미래에 더 안정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저축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강제저축과 개인연금이나 보험 및 적금과 같은 자발적 저축이 있는데요 청·장년기에는 총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저축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저축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0년대에는 31.7%였으나 90년대에는 35.2%로 상승하였습니다. 2000년 들어 32% 내지 33%를 유지하다가 작년 말에는 29.9%, 올 상반기엔 26.9%로 2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률이 급락하는 이유는 저축하는 인구층인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비와 주택구매비를 고려해 볼 때 저축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60세 전후에 퇴직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40대에 퇴직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의학 발전과 소득증대 등으로 평균수명은 연장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노후를 의탁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또한 현재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개인연금이나 보험 및 적금 등 자발적 저축의 비중을 높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02.11.27.)

IMF 5년의 평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계획되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구조조정을 비롯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1997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웃돌았고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도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도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하여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였던 외화보유액이 지금은 1,18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4위의 외화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불사조로 여겨지던 대기업들이 사라지고, 실업자 수가 한 때 18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 퇴출당하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지난 5년간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었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신용불량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25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 제거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따라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396%에서 13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실업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에 의해 고용 불안감이 확대되었고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조직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4대 구조조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개혁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실과 비효율이 제거된 면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외형적 성장은 거두었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습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부실해지고, 이해집단 간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걸모양을 바꾸는 제도개혁과 함께 속 내용을 채우는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둥이개혁이 있어야만 진정한 구조조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은 오늘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12.05.)

선택의 기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식주,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제학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택 즉,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 치른 56번의 각종 선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듯이 정치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용에서 지렁이로 추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12.12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세력의 주동자였던 노태우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경우를 볼 때 우리 국민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너무 쉽게 관용을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잘 기억하여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온 자, 상황 논리로 말을 바꾸지 않는 자, 오리발을 내밀지 않는 정직한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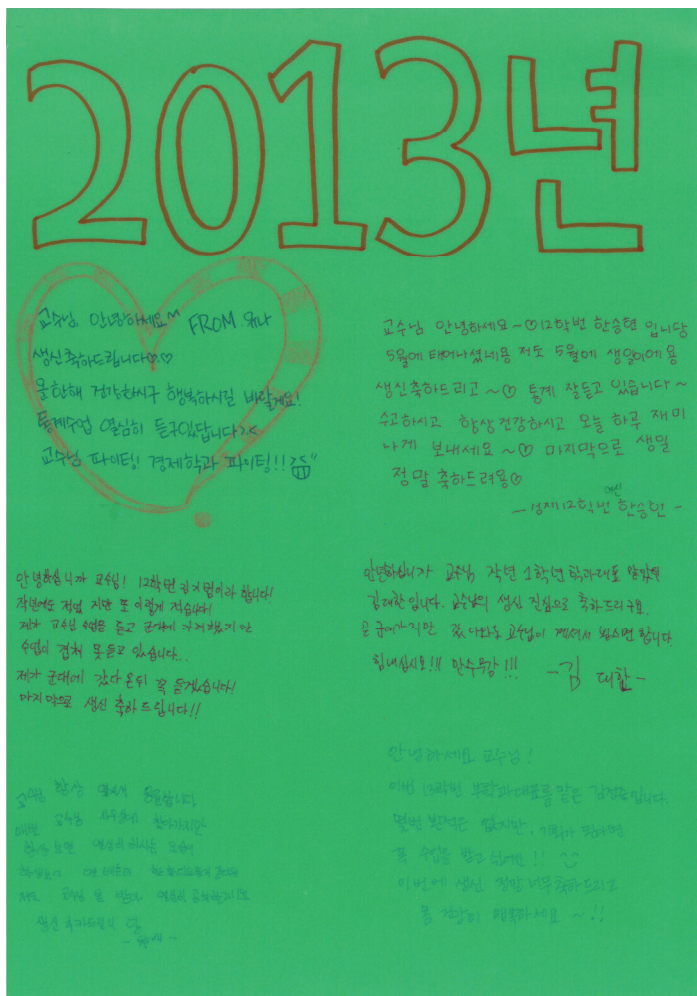
기업경영에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든 경영방식에서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경영’으로 바뀌고 있듯이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단계에서는 경제·경영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는 깨끗한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혈연, 학연, 지연 등 각종 연고 관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관이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철을 맞아 후보자들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

을 따르고 있는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의 가치관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자신과 가치관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12.12.)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정부 들어 재벌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보다 높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상시종업원 5인에서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286만 개인데 그중 소상공인은 255만 개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153만 명인데 그중 소상공인은 495만 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149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수의 88.2%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1,800명으로 도내 전체 종사자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경제활동이 소상공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풀뿌리가 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상공인 발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평균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총투자 규모는 평균 1억 7백만 원, 월평균 매출액은 2천만 원, 월평균 순수익은 3백 8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업을 운영해 온 기간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수익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채는 총투자 금액의 24.1%에 달하고 있고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은 사금융이었으며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난과 담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해 소상공인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절차 및 심사의 간편화, 신용대출의 정착, 대출금액의 고액화, 대출 기간의 장기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 없이도 자금을 대출

해 주어 지역 밀착형 금융기법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에서 탈피하여 경영마인드, 정보마인드 및 전략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에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산보고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월은 결산의 계절입니다. 많은 기업이 한 해 동안의 영업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 년 동안 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서 손익의 정도를 밝혀 놓은 것이며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비교해 놓은 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로는 한 해의 기업성적을 판단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로는 기업이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적을 평가할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성장성은 기업이 일정 기간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증가율로 이를 측정합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호조로 매출액증가율이 3.9%에 달하여 2002년 상반기 3.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이를 측정합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재료비 부담 감소로 7.8%에 달하여 2001년 상반기 6.9%보다 0.9%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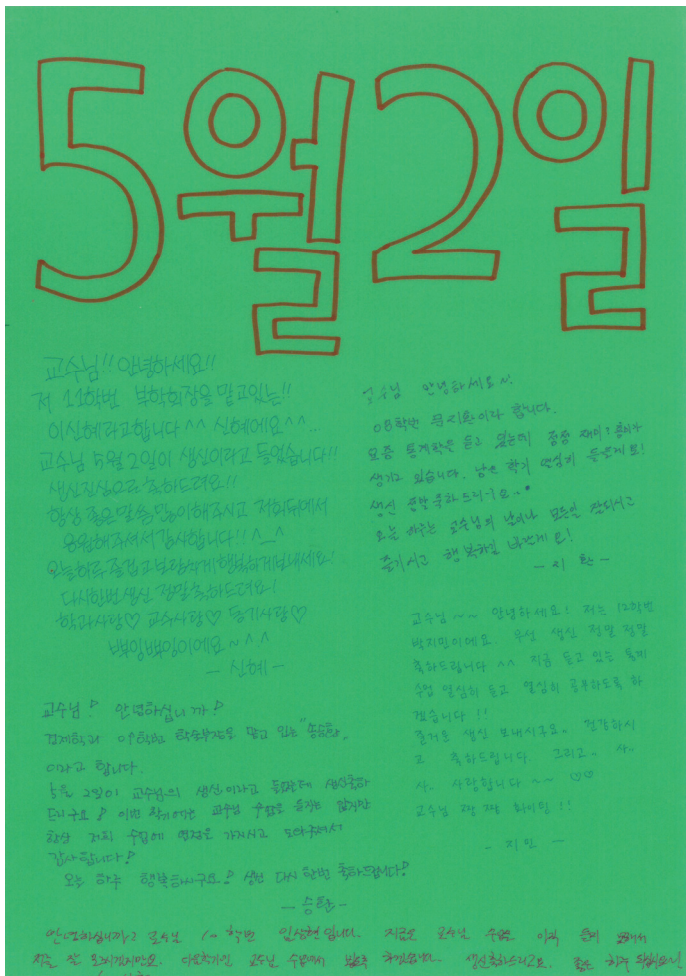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로 이를 측정합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수익성이 개선된 데다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차입금 상환에 힘입어 2002년 상반기 현재 부채비율은 135.6%로 작년 말에 비해 46.6%포인트나 하락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은 기업구조조정의 진전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고, 금융비용 감소와 순 외환 이익 발생 등으로 수익성도 향상되었으며, 매출액은 내수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행한 모든 행적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것이며 태어나서부터 2002년까지 행한 모든 행적은 대차대조표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의 손익계산서가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한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결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말연시를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경제 시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2003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의 화두는 디지털과 지식입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3번째 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이 90년대 시작되어 지금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결과 디지털경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에서 탈락한 어느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했듯이 디지털화에 뒤지면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은 디지털 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지식 강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여기서 탈락하면 영원한 이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Digital or Die’라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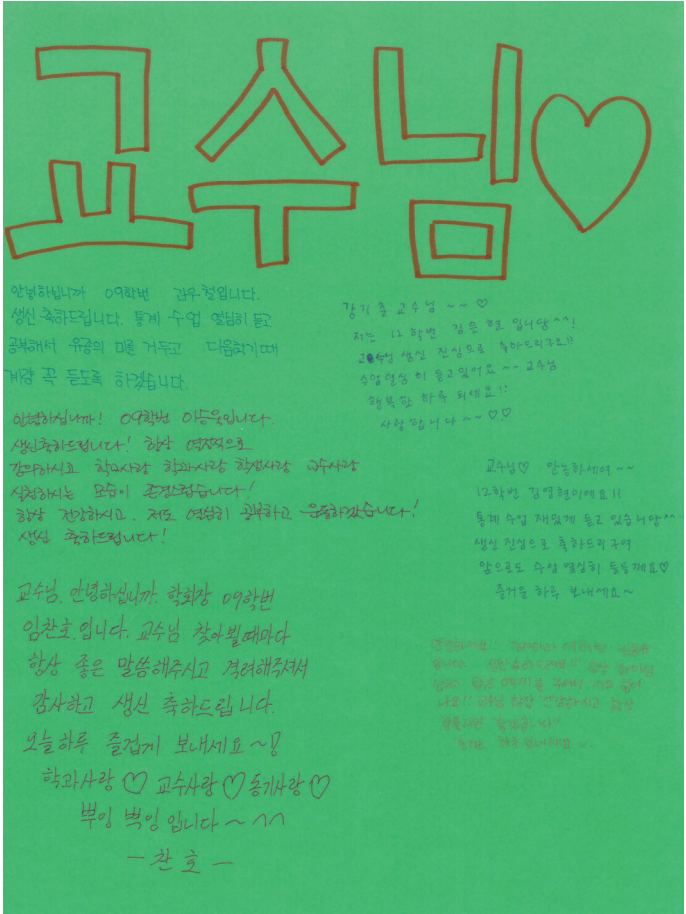
생존의 문제인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하부구조의 구축에 전력해야 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같은 하드웨어적 하부구조와 법과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하부구조 및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휴먼웨어적 하부구조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은 수익모형의 개발에 힘써야 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합니다. 한때 상한가를 쳤던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모델이 없기 때문이므로 안정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제조업이 디지털경제의 추세를 무시하고 기존 패러다임만을 고수하고서는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벤처기업 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전통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개인 가치의 기준이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철저한 성과급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일자리도 평생 일자리의 개념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탄력적인 일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진전과 함께 이에 적응하는 계층과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 간에 소

위 디지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득의 격차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매일 많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또는 올바른 정책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정책의 평가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그 사회의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고 하는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 역시 자원배분을 잘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도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자원배분을 말하며 공평성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라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우선시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될 수 있다는 주장들과 근거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평성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

하는 공평성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균등 분배가 아니고 공헌도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필요도의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자원배분을 말합니다.

공헌도의 원칙이란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필요도의 원칙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경제정책을 평가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고, 효율성이나 공평성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차선의 정책이라고 하며,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하고 국익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책은 전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관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50여만 명으로 IMF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제주관광은 위기를 맞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대안관광으로 관심을 받는 생태관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태관광이란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바람직한 형태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연보호와 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의 행동을 자연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형태의 관광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기존의 일반관광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관광 자원 면에서는 비교적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자원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관광목적 면에서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자원 등을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활동면에서는 관광지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야생식물을 즐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엘니뇨 등의 이상기후 변화나 산성비 등과 같은 환경문제들로 인해 과거 개발 지향적이고 인간중심

의 자연 정복적인 패러다임이 환경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최근 생태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투자액으로 큰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무공해 녹색산업으로 평가됐으나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은 현재 전 세계 관광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10~20%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에는 전 세계 관광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관광협회는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태관광객은 2천 3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등 우리나라의 각 부처도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태관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제주도의 경우 북제주군 교래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이 시범 마을로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래동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어린이 환경학교, 오름 답사 및 하천 탐사, 바다낚시 및 해안선 트레킹 등 다양한 생태관광 및 체험 행사를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환경에 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국내에서도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관광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뇌물과 선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물과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이 오고 가는 계절입니다만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 집중적으로 오고 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을 말하며 뇌물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물과 뇌물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선물이고 부담이 생기면 뇌물이며,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주면 선물이고 발생하기 전에 주면 뇌물입니다. 주고 난 후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선물이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뇌물이며,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뇌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정 금액이 5만 원이며 미국의 경우 20달러 즉,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뇌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 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형태도 금

전, 상품권, 자유이용권에서부터 향응, 골프접대, 정치자금 및 성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회수는 줄어들었으나 뇌물수수 금액은 커졌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뇌물제공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뇌물공여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나 되는 등 국민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습시다만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부정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도개혁과 함께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 쌍둥이개혁이 있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신산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디지털경제 시대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21세기 신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21세기 신기술로 불리는 6T에 국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6T란 정보기술인 IT, 생명 공학 기술인 BT, 나노공학 기술인 NT, 문화 콘텐츠기술인 CT, 항공우주 기술인 ST, 환경기술인 ET 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이러한 신기술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의 경우 생명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지역에 있는 생물산업 관련 기업 즉, BT 기업들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주지역의 B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BT 기업들은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품질의 제품 또는 간편한 제품 등을 가진 기업도 있었습니다. 둘째,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부

단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친환경적 추세를 기회로 삼아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BT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금난, 인력난, 최신 경영기법 부족 등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애로점들을 그들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자금 조달과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어렵고 재무관리 및 마케팅의 부족으로 인해 매출액 증대를 통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높은 물류비용, 원료 확보난 등 지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애로점들인데 이에 따라 타 지역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 증대를 통한 건전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치열한 경쟁, 과도한 규제 등 외부 환경적인 애로점들로 인해 시장점유율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도 제주지역을 해양생물·식물의 첨단기지로 육성하기로 하였고 제주도는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제주대학교는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설립하는 등 제주지역 생물 산업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산·관·학 협력으로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가는 기술 및 인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 업종 기업 간에도 제휴

하고, 다른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기업 간에도 제휴하여 지역중소기업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물산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연체 금액이 30만 원을 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인 개인 신용불량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네요.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7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으며 대출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면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이 2,700만 원 정도이니 가계부채가 연간소득의 두 배 가까이 되며 일 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소득의 21%나 됩니다. 또한 전체 가계부채 중 현금서비스나 할부 구매 등 신용카드 사용이 관련된 부채가 20%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할부 구매를 통해 금전 관리에 융통성을 가지거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현금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의 신용한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용으로 차입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차입은 신용불량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신의 상환 범위 내에서 차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부채상환액과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부채를 제외한 부채상환액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입하고 부채총액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순자산의 1/3이 넘지 않아야 하며 빌린 돈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이 신용카드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카드로 돌려막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가지지 말고 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은 아주 높으므로 가능한 한 현금서비스는 이용하지 말며 불가피할 경우 대금 결제일을 잘 따져보고 이용하되 연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체했을 경우 반드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부채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해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지출을 감소하는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상환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용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미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은 급성장해 왔는데요. 카드 발급 수는 2배, 가맹점은 3배, 사용액은 6.7배, 당기순이익은 물경 100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1억 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0조 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는 신용사회에서 26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7.7%에 이르는 등 신용사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사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들은 신용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외상은 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다고 봅니다. 신용거래는 장래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으로 미리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신용의 확보 및 유지입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심지어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사는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신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하고,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더라도 고수익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을 신중하게 하고 카드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사고 발생률,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의 발생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익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용사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러한 영업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시장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 업계의 행태를 보면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 소위 ‘약탈적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 관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밝고 건강한 신용사회가 정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중독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비중독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원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석유 총소비량은 4위로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많으며 1인당 소비량도 7위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을 살펴보면 20살 이상의 성인 한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마신 술의 양이 맥주 120병, 소주 79병, 위스키가 1병 반 정도이며 국민 1인당 소비량은 7.6리터로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위스키 수입은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정을 맞아 나왔던 상품들을 보면 순금으로 장식된 프랑스산 코냑은 1병 값이 무려 1,392만 원이며, 도자기에 담은 홍시 세트는 100만 원, 굴비가 한 마리에 10만 원인 고가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는 풍요라는 affluence와 독감 바이러스인 influenza를 합성하여 affluenza라고 불리는 소비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빚이나 낭비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비중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자가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열거하는 것들을 잘 들어 보시고 만약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여러분은 소비중독 바이러스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가끔 마땅히 살 것도 없는데 쇼핑하러 가십니까? 쇼핑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가족에게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금전 관계로 가족과 자주 다투십니까? 일상적으로 놀음을 하거나 복권을 사십니까? 신용카드를 5개 이상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중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광고와 홈쇼핑의 발달로 인해 충동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빚이 늘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 선고를 하는 개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비의 동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매하는 필요와, 없어도 되지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욕구와, 사치나 자기과시를 위해 구매하는 욕망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는 당연하고, 욕구에 의한 소비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욕망에 의한 구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욕구에 의한 소비를 잘 감시하고 욕망에 의한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중독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하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이 33만 명이고, 그로 인해 소비되는 화대의 규모가 한 해 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4.1%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성매매로 발생하는 화대의 경제적 측면은 화대가 지하경제라는 것입니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하는데 마약 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970년대에는 국민총생산의 27.7%에 달했고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15%에 달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5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장경제 즉 국민총생산의 11.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59조 원의 지하경제 규모로 인해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 전체 조세수입

89조 3천억 원의 1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0년에 국민 한 사람당 208만 원의 세금을 냈었는데요. 만약 지하경제가 모두 세금으로 포착되었다면 한 사람당 30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경제 규모와 탈세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과 세무 행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단속 및 징세의 강화보다는 세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두 방안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당근을 주는 대신 탈세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채찍을 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경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세원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개인들에게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더욱 장려하고 기업에는 세액공제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일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적 해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의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정부는 국민을 잘살게 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인데 이들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해이 즉, moral hazard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으로 외화 부족, 해외 음모,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재벌들은 기업 규모만 키워 놓으면 부실해도 절대로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소위 대마불사로 빚을 끌어다 쓰는 데 혈안이 되었고, 금융기관 역시 부실하더라도 정부가 부도를 막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내는 경영에 전념하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논리보다는 여론과 로비 등 정치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의 요구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 금융, 노동 부문, 공공 부문 등 소위 4대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금융기관의 1/4을 정리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거나 금융기관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이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 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초래된 금융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에서도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여 2003년 1월 현재 투입된 160조 원의 공적자금 중 34%인 54조 원만 회수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최근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SK그룹의 SK글로벌은 외상매입금을 누락시키거나 자산의 과대계상 및 부채의 과소계상을 통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어디 SK뿐이겠습니까? 기업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적 해이들을 철저히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국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식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 국가경영의 화두는 지식입니다.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지식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 원천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1997년 10월에 발표된 「부즈알렌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근본 문제를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로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도 98년 이후 지식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 역시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지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식 국가란 국가의 구성 주체들이 지식을 보유·활용하고, 학습이나 공유 등을 통해서 지식을 배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들의 지식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식이 창조되고, 활용되고, 학습되고, 축적되며, 공유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 국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평가해 보면 먼저, 지식 창조 면에서 우리나라는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모두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와 논문발표 건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지식 활용 면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창조되고 학습된 지식이 고부가가치 영역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소위 지식 멸실의 문제가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한편, 지식 학습 면에서는 선진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체화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역사적 경험을 정책 판단의 교훈으로 삼는 국가적 차원의 학습 체계가 자리 잡지 않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공유 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상받고 보호되지 못한 결과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지식의 가치 증식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끝으로 지식 축적 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식자원이 산재하여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가 없어 지식의 축적, 공유,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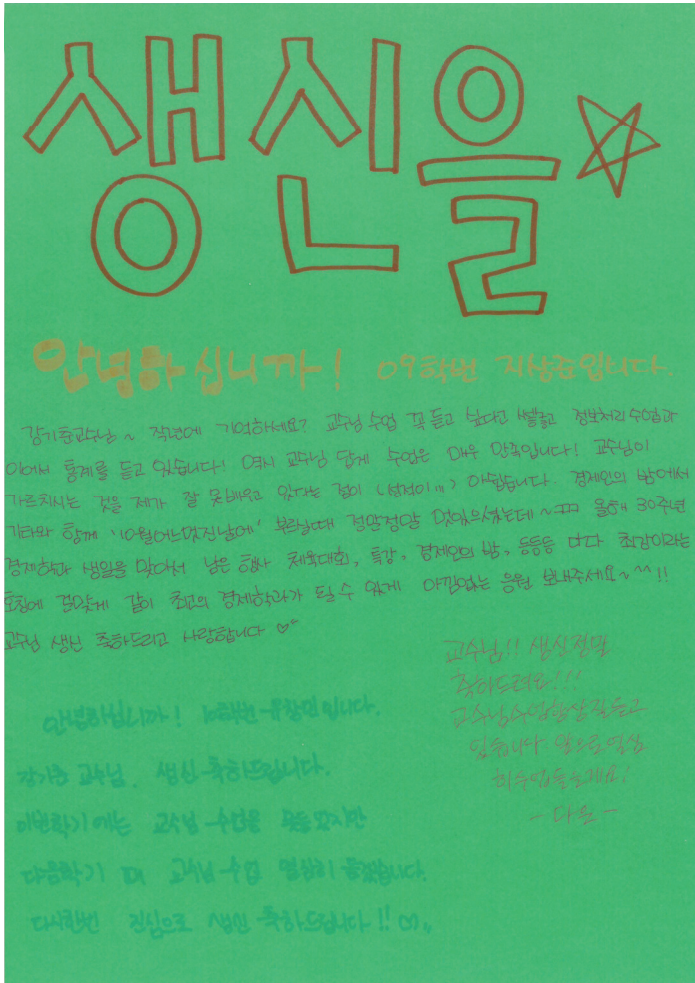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지식 국가가 성공적으로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구성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지시자, 배분자에서 촉진자, 조정자의 역할로 변해야 하며 스스로 지식경영을 도입 실천하고 국가 지식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편, 미래 기업의 핵심역량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지식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업은 지식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식경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천적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

행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21세기 골드칼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인은 지식을 창조·배분·활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어는마진남에.

자주 교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리기에 교수님 수업을 들은것

다름하기 다 교수님 수업 열심히 했습니다.

다름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

교수님!! 생일경말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수업알고들고

입문부터 열거로경말

희망합니다!!

- 다들 -

법인세 논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법인세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치권과 경제전문가 집단 사이에 뜨겁게 일었었고 최근 재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였다가 대통령의 인하 불가 방침에 지금은 잠시 잠복 중입니다.

법인세란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15%, 연간 소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7%입니다. 법인세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낮고 중국과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대만과 싱가포르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인세 논쟁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인세 폐지론자들이나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 모두가 아전인수식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현행 법인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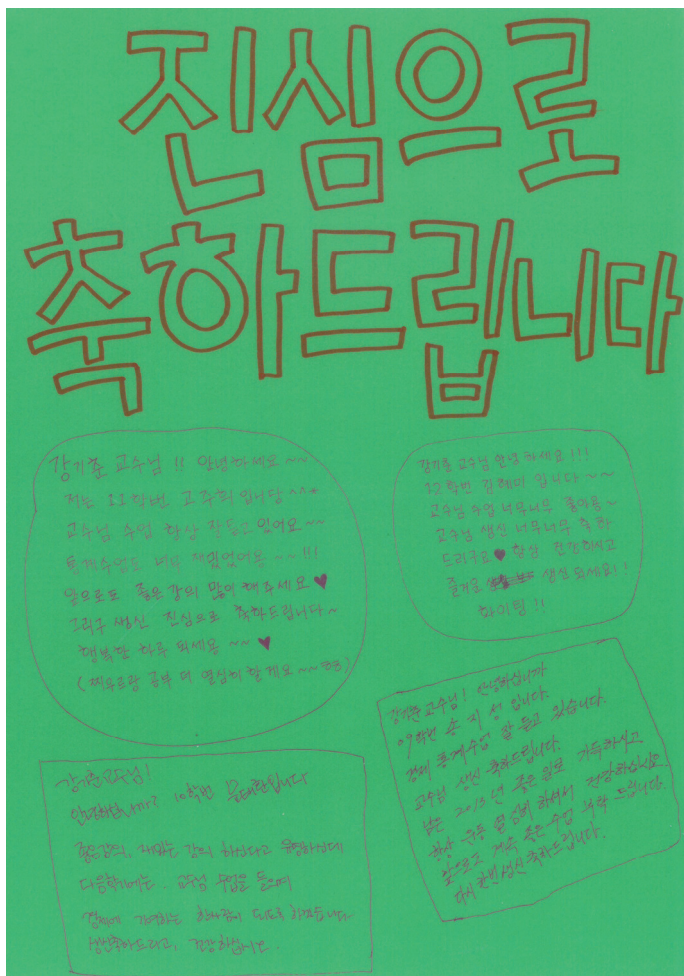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과거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 폐지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에 투하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자료의 제시 없이 당위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 래퍼의 주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율을 인하해 주면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론대로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법인세 폐지로 인한 세수의 감소만을 계산하고 반대급부로 얻게 될 세수의 증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 폐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인세 폐지론자들과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법인세 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계산이 아주 힘들거나 계산 결과가 비슷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국인면세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국인면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수행할 전담 기구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작년 5월에 설립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24일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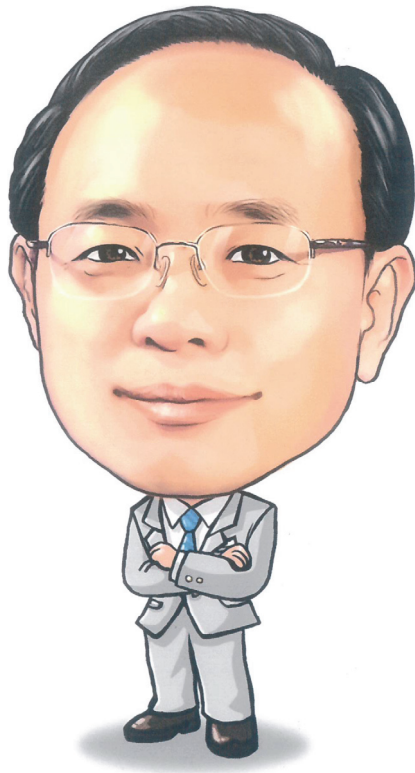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로 제주도 접근 비용을 인하여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면세점 운영 인력을 제주도민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도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관광기념품점, 공항 내 입점업체, 농수산물 취급점 등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내국인면세점과 지역 유통업체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미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와 내국인면세점 등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의 내국인면세점 영업실적을 12월부터 3월까지 월별로 살펴보면 일평균 매출액은 각각 2.5억 원, 2.7억 원, 2.3억 원, 2억 원 등으로 초기에는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평균 이용 인원은 3,103명, 3,671명, 3,310명, 2,827명 등으로 역시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률은 26%, 24%, 23%, 23%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평균 1인당 구매액 역시 79,000원, 72,600원, 69,800원, 69,400원 등으로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국인면세점의 전망이 결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면세점은 관광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쇼핑할 수 있는 여건과 공항 내의 혼잡도 분산을 위하여 시내 면세점 개점을 검토할 예정이고, 일반고객들이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JDC 인터넷 면세점』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및 유명 브랜드를 추가로 입점시킬 계획을 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국인면세점은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여행객이 면세점 내에서 토산품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기존 토산품점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수익금의 일부를 도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내국인면세점과 지역상권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렴 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 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나 되는 등 국민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국의 공직 생활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직 생활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는 자신, 가족 또는 친구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타주의입니다.

둘째는, 공직자는 직무 유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 사항이나 기타 의무 사항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청렴성입니다.

셋째는, 공직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발주할 때 성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객관성입니다.

넷째는, 공직자는 자신의 경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입니다.

다섯째는, 공직자는 의사결정과 집행에 최대한 개방적이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개방성입니다.

여섯째는,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정직성입니다.

일곱째는, 공직자는 솔선수범과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도력입니다.

‘청렴 유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 생활의 7가지 원칙’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와 함께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어 1년이 경과되었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시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법인세를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세정책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세율 인하 경쟁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9년 34.5%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 중의 하나는 제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다국적 기업 여건, 외환거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국인 입·출국, 이민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제자유도시보다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 인력의 가용성 등 근본적인 요인들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국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통과한 투자 대상국만을 대상으로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국을 선정합니다. 우리와 경쟁상대국인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과 비교한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 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특별법 개정 시 법인세율 인하 또는 외국인 투자유인책 제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국 고려 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쟁 관계에 상해-포동지구, 홍콩,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각각 15%, 16%, 22%로 우리나라의 2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특별법 개정에 홍콩 수준인 15%로 법인세를 낮추고 세액 감면 기간을 외국인 투자 지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법인세 인하나 세액감면 등 세제의 이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과 함께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극동방송 경제 칼럼

이기적인 행위와 신앙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 분배, 소비, 교환 등의 경제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경제학자로서 경제주체들의 이기적인 행위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사회가 장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인들의 이기심 추구가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동의 선을 달성할 수 있어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도덕적 의식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호의존적인 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행위는 자기중심적인 행위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 즉 자연인은 돈, 명예, 권력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결코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2001.10.25.)

올바른 경제 가치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경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또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치관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경제체제로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한 처방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가 채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새로운 경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어느 저명한 경제학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새 경제 가치관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접목시킨 신유교 윤리론을 제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천 경제학자로서 새 경제 가치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경제 가치관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지만 왜곡되어 있는 경제 가치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철저히 생활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경제윤리는 청교도윤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청교도윤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일의 귀천과 관계없이 남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면 성직(聖職)이며 이 성직을 열심히 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검소, 근면, 청렴, 정직한 생활을 통해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러한 청교도윤리를 바로 인식하여 왜곡된 우리의 경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경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인들의 논리는 불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11.1.)

지혜로운 소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돈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소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을 때 과소비가 문제였으며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소비가 너무 위축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소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행에는 저축을 하자는 구호와 소비가 필요하다는 구호가 나란히 걸려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도 소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케인즈학과 학자들과 저축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고전학과 학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소비가 미덕일 수도 있고 저축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은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저축이 풍부해야 하므로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특히, 크리스천들은 소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광고와 홈쇼핑의 발달로 인해 충동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빚이 늘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선고를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나눔이 있는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나의 소비를 줄여 이웃에게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소비의 동기가 무엇인 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돈 관리에 관해 많은 책을 저술한 래리 버켓은 소비의 동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매하는 필요와, 없어도 되지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구매하

는 욕구와, 사치나 자기과시를 위해 구매하는 욕망 등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크리스천이라면 필요에 의한 소비는 당연히고, 욕구에 의한 소비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욕망에 의한 구매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11.8.)

과소비의 기준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소비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체제에 들어가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그렇게 되었다고 외국의 신문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문화를 빗대는 말로 싸쓸이 구매, 탐욕적 타락 소비, 거품 소비, 모방 소비, 과시성 소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면 과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이 혈색도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외식비가 증가하고 있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피복 신발에 대한 지출이 높으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가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과소비함으로써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소득수준이 다른데 도대체 과소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의 과소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과소비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면 기성복 양복이 40만 원, 구두가 10만 원, 운동화가 4만 원, 미장원에서 하는 파마가 4만 원, 이발이 2만 5천 원, 가구가 250만 원, TV가 100만 등 이를 초과하는 구매는 과소비입니다.

크리스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어느 한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교수님도 이제는 중형차를 타고 다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이제 중년이 되어 가고 중형차를 타고 다닐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되지만, 소형차를 계속 타겠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신과 수입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사치와 향락으로 멸망했고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사치와 향락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구매하셨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과소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 즉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11.15.)

우상이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재산 즉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재물이나 부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체로 이웃을 섬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의 최선 가치가 되어 재물 즉 mammon을 숭배하는 mammon 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어떤 풍족함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으며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맘몬 주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뭘니 뭘니 해도 머니(money) 즉 돈이 최고야’라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조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재산을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 세무조사로 구속된 크리스천 신문사 사장은 선정적인 사진과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실리는 스포츠신문도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장의 아버지인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께 물어보았을 때 ‘business is a business 즉, 사업은 사업이다’라고 대답한 기사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는 결코 정당한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재산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내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십일조를 반드시 내며 나아가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 등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11.22.)

소득 불균형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0년 초 구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오랜 대결 구도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본주의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는 시장경제라고도 하는데 시장경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 주지만 모든 계층에 고르게 배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의 불균형 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갔으나 IMF 경제체제 이후에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자료를 조금 살펴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줄을 세울 경우 가령 상위 20%의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득분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20%의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IMF 경제체제 이전에는 37%였으나 그 이후에는 40%를 넘어섰고, IMF 경제체제 이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저소득자 소득의 4.49배였으나 그 이후에는 5.28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에게 한 달에 28만 6천 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소득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 즉, 회피 업종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근면, 절약,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소득자들은 나눔의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에 자선냄비를 든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자선냄비에 넣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에 옮겨 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들, 높은 이자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들,
뇌물로 배를 채우는 권력자들, 탈세와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한 졸부들,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비자금을 만드는
벤처사업가들을 발본색원하여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
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11.29.)

경제정의의 성경적 기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입니다. 오늘은 경제정의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는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효율성과 공정성인데요.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자원배분을 말하며, 공정성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말한 ‘냉철한 두뇌’는 효율성을 의미하며 ‘뜨거운 가슴’은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라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우선시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될 수 있다는 주장들과 근거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평성 즉, 경제정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공평성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균등 분배가 아니고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자원배분을 말합니다.

첫째는, 공헌도의 원칙으로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착취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회의 균등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는, 필요도의 원칙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정의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12.6)

도박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도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일수록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한탕주의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경마, 경륜, 경전 등 각종 도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처럼 단순한 투기로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축적하는 소위 ‘카지노자본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회사는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꿈꾸며 작년 10월 말 폐광촌 지역인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처음으로 개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2,682명의 손님이 12억 원의 돈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올해 4,000억 원의 매출에 2,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업실적에 고무되어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애당초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내세웠던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지역건설 활성화, 관광객 유

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도박으로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차게 된 사람들이 겪는 후유증과 그로 인한 개인 및 가정의 파탄을 고려해 볼 때 크리스천이나 지혜 있는 자라면 도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지는 분명해집니다.

먼저, 도박은 확률의 게임이며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박이 허가받은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초반에는 승률이 약간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률이 점점 떨어지므로 돈을 좀 따서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강원랜드가 4,000억 원의 매출에서 2,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더욱 명백해 집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도박도 성행하고 있는데 사이버도박의 승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가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감금이나 협박을 당하거나 윤락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강도나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잃고 나서야 술을 끊고, 정력이 떨어져야 외도를 끊고, 죽은 다음에야 도박을 끊는다는 말이 있듯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박중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도박중독증은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은 건강한 사회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듯이 노동을 통한 생산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데 도박이 성행하면 사람들의 건전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로소득을 추구하게 만들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12.13.)

결산보고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월은 결산의 계절입니다. 많은 기업이 한 해 동안의 영업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 년 동안 기업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여서 손익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며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비교해 놓은 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로는 한 해의 기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로는 기업이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성장성은 기업이 일정 기간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증가율로 이를 측정합니다. 2000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은 1999년에 비해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은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이를 측정합니다. 2000년 중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4%로 1999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로 이를 측정합니다. 2000년 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10.6%로 1999년 말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2000년 경영 성과는 1999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별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평가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표들이 좋으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가 올라가며 이들 지표가 좋지 못하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2001년 동안 행한 모든 행적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것이며 태어나서부터 2001년까지 행한 모든 행적은 대차대조표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였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는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더 많았다면 우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고 우리의 대차대조표는 더욱 건전해질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저의 일 년을 결산해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주셨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특히, 부족한 제가 제주 극동방송을 통하여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12.27.)

Interview

인사: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 경제 칼럼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 1: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으며 현재 섬기시는 교회는?

- 저는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입교 문답을 하였고 유학 시절인 1987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깨어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 저는 현재 남제주군 고성에 있는 재건제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재건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출옥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보수 교단이며 재건제주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미약한 교회라 부족한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질문 2: 제주 극동방송 경제 칼럼을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생각은?

- 저는 다른 방송에서 경제해설을 맡아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경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경제 칼럼을 맡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경제 칼럼을 진행해 가면서 저의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구체화하여 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즉, 저 자신이 이전에 신앙인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경제문제들을 새로운(신앙인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왜 교수직을 택하셨는지?

- 저는 원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적록색약으로 인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원래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가 죽기를 바랄 만큼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 특히,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4년 반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신앙을 지키면서 평신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회사보다는 대학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그리고 제가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처방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4: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는?

- 흔히들 사회가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한다는 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는 더욱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고 신앙을 논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성경에 기초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잘 관찰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신앙인의 분명한 목소리로 이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하나의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Yesterday is a History, Today is Present, Tomorrow is a Mystery 즉, yesterday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며,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선물로 주어진 현재를 잘 살자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현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니 누려야 하고, 미래는 디모데후서 4장 7

절에서 8절 말씀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라는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2001년의 마무리와 2002년의 계획, 그리고 청취자에게 부탁의 말씀은?

- 저는 올해 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표어 말씀으로 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해 왔습니다.

- 200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러난 결과만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지금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02년에는 현재 제가 하는 일 외에도 어느 선교사님을 기도로 돕는 기도 네트워크의 간사로 섬길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12.30)

부동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올해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노동 및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로 간주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생산 요소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마르크스는 토지의 사유화가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1990년 초 동구의 몰락이 보여주듯이 사회주의는 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어떻게 하면 토지 사유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토지의 사유화는 인정하되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문제점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창세기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존의 기반이므로 아무도 토지를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며 토지소유

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인구 증가나 경제개발 등에 의해 증대된 토지가치에 대해 토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헨리 조지는 주장합니다. 토지가치 세가 부과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재기하는 것은 줄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토지가치서는 오늘날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투기 문제로 골치를 앓아오던 우리나라도 1990년 토지이용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 지역 주변이나 부동산투기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큰 이익을 본 사람이 그 이익의 일부를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이후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내는 종합토지세도 과세 표준 금액이 현실보다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토지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대상과 감면 조치가 많아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미흡한 실정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주택가격과 땅값이 평균 30% 하락하는 등 부동산에 있었던 거품들이 많이 사라졌으나 작년 8월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고 또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먼저, 정부는 경제정의에 기초한 부동산정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 이용은 활성화하되 토지 보유는 억제해야 하겠고 과세 표준 금액도 현실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과 기업들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토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와 이용과 보전의 책임을 위임하신 것임을 인식하고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유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1.3)

부패 공화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부정부패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정현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등 소위 3대 게이트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였고 정치, 교육, 언론,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부정부패를 찾아서 고발해야 하는 검찰까지 부정에 연루되는 등 총체적인 부패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나 되는 등 국민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

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경제적인 측면은 사회적 마찰 비용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 비용이라 하면 노동사용에 대한 대가인 임금,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비용 외에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 마찰 비용인데 행정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주는 급행료, 공사발주나 하도급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이 그러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마찰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에서 나타났듯이 부실한 산출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청산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최대한 관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순간부터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비 지도층 인사들을 과감하게 퇴출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검찰에 소환될 때는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자결까지 하겠다고 큰소리쳐 놓고는 나중에는 고개를 떨구고 구속되는 정치인들, 규제를 이용하여 각종 뇌물을 챙기는 관료들,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사학의 주인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기업주들, 브로커로 몰락한 판검사들, 자주국방

의 핑계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장성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퇴출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둥이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부정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와 함께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은 부정 축재자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대로 부술 것은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여 새 부대에 담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1.10)

세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으로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조세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과다한 세금은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할 때는 몇 가지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조세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조세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 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징세의 방법이 명확해야 하고, 납부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징세를 위한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원칙 중 납부자의 편리성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 자료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목표치인 95조 9천억을 초과하여 96조 2천억 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봉급생활자들이 낸 세금

은 목표치보다 각각 3조 8천억 원과 1조 원이 더 건넸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목표치보다 2조 원 이상 덜 건넨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조 원 이상의 세금이 건넬 것으로 예상되고 서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08만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251만 원으로 급등하였고 올해도 271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총생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99년에는 19.5%였으나 올해는 2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도 여전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세금해방일을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 가운데 96일분은 세금으로 납부했으므로 97일째인 4월 7일이 세금해방일이었는데 올해는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보면 첫째는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예산이란 정부가 해당연도에 쓰고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매년 14조에서 1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세금을 근거로 예산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1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의 빚을 줄여나가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세무공무원들의 부도덕성입니다. 몇 년 전 인천세무서의 세금 도둑 사건을 시발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진 세금 도둑 사건이 이를 바로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

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21만 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 받아 부당공제분을 추징당하였고, 국세청은 올해 학원, 연예인, 병원 등 10만 명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처럼 크리스천들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크리스천 세무공무원들이 바로 선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하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1.17)

지하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하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하는데 마약 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이기적 행동 때문인데요 ‘세율이 높으면 지하도 깊다’라는 소위 지하경제 법칙이 말해주듯이 세율이 높거나 규제가 강하면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경제주체들이 더욱 애를 쓰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자원이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조세회피라는 기회를 따라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근로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탈세하기 힘든 계층이 자영업자와 같이 탈세가 쉬운 계층 간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계층 간 불신이 커지며, 정부의 세수 기반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970년대에는 국민총생산의

27.7%에 달했고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15%에 달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5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시장경제 즉 국민총생산의 11.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59조 원의 지하경제 규모로 인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은 금액이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 전체 조세수입 89조 3천억 원의 1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0년에 국민 한 사람당 208만 원의 세금을 냈었는데요. 만약 지하경제가 모두 세금으로 포착되었다면 한 사람당 30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경제 규모와 탈세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과 세무 행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단속 및 징세의 강화보다는 세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두 방안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당근을 주는 대신 탈세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채찍을 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경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1997년

60조 원에 불과하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에는 400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세금 수입은 목표치를 4조 원 정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을 10%씩 경감시켜 주었고 회사가 내는 법인세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처럼 감춘 것은 반드시 드러나며 혹은 사람의 눈을 피하더라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1.24.)

주식투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간접금융과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이 있습니다.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주식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주식 발행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높은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아시아의 기업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식시장 순기능 외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로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축적하는 소위 ‘카지노자본주의’가 그 대표적인 역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욕이 높아지며, 기업들은 혁신하려는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재테크를 통한 수익 창출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면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주식 가치를 결정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경영성과를 통해 주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이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면 매매차익이 투자자의 관심이므로 기업들은 재테크를 통해 주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면 소위 주가조작 또는 작전이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시장질서가 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주식발행자인 기업들은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투자자로부터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단기간에 주가를 올려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도 최근 여러 게이트나 패스 2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벤처 열풍을 타고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경제정의에 기초한 주식시장 정책수립에 틀림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식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은 불로소득이나 다름이 없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더욱 확대하게 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성경에서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5편 5절에서 돈놀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고 잠언 1장 19절에서는 이익에 탐닉하는 자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장금리 수준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주식배당금을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매차익을 쫓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비성경적임이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1.31)

뇌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뇌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이 오가는 계절입니다만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 집중적으로 오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을 말하며 뇌물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던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물과 뇌물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선물이고 부담이 생기면 뇌물이며,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주면 선물이고 발생하기 전에 주면 뇌물입니다. 주고 난 후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선물이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뇌물이며,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뇌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정 금액이 5만 원이며 미국의 경우 20달러 즉,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뇌물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도서 7장 7절에서 뇌물은 명철 즉, 사리분별력을 없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23절에서 뇌물을 받으면 도적과 한통속이 되어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뇌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뇌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자연인이 사는 한 뇌물은 사라질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 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형태도 금전, 상품권, 자유이용권에서부터 향응, 골프접대, 정치자금 및 성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회수는 줄어들었으나 뇌물수수 금액은 커졌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뇌물제공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뇌물공여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크리스천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이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큰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고경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2.7.)



최고경영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고경영자 즉, CEO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듯 기업의 총수인 최고경영자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영 능력은 토지,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제4 요소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 중 77%가 최고경영자를 보고 기업에 투자하는 등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당한 기업들의 많은 경우가 최고경영자의 경영 능력 부재가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유능한 최고경영자와 무능한 최고경영자의 가치가 확연히 구분되는 소위 'CEO 디바이드(CEO divide)'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성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최고경영자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최고경영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시대에 따

라 바람직한 최고경영자 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경제 발전단계에서는 외형을 확장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모델이 되며 경제 성숙단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모델이 되고 개방화 및 세계화가 진전되면 도덕성을 갖춘 최고경영자가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구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큰 비중을 두는 최고경영자 즉, 섬기는 최고경영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종을 엄하게 부리지 못하게 하고 공갈을 치지 못하게 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2000년 전부터 섬김을 강조한 성경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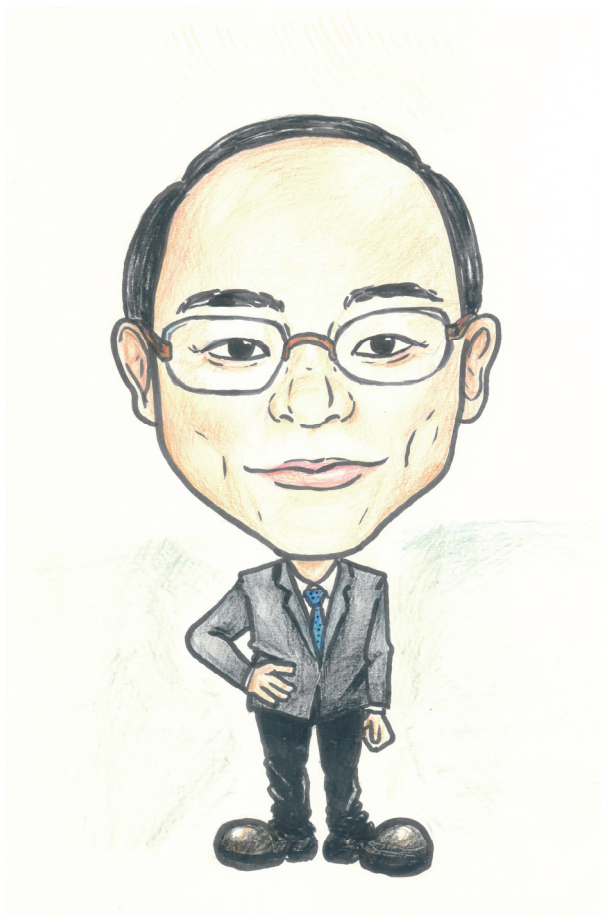
미국 존스 그룹의 창업자인 로리 존스는 그의 저서인 ‘최고경영자 예수’에서 열두 명을 훈련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케 하신 예수님을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시는 등 자아를 잘 극복하셨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후계자를 훈련하는 등 친히 행동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즉,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강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경력 등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Temple 대학을 설립한 James Cornwell이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보니 그들은 한결같이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뜨거운 마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인내의 마음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만 더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2.14.)



이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자란 자본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까지 돈은 교환의 수단에 불과하며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였으나 칼빈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 생산에 기여한 돈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돈의 유통 즉,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경제활동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자에 대한 설명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래 소비인 저축을 위해 현재 소비를 억제한 대가가 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사람들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하는 시간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람들이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보다 더 좋아하면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둘째는, 현금을 포기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가
이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금, 예금, 주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하면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동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현금을 보유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금 대신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하면 그 대가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율 수준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시중금리인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은 1990년대에는 연 14%대였으나 작년에는 연 7%대에 이르러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10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는 사채의 이자율은 연 100% 이상의 고리가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채무자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최고 이자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에 들어 이자제한법을 실시해 왔으나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연 100%를 초과하는 고리의 사채가 극성을 부렸고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IMF 구제금융 이전 수준인 연 40%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으나 오히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합법화시켜 주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크리스천이 이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채를 통한 돈놀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 18장 8절부터 17절에서는 이자를 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시편 15편 5절에서는 돈놀이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혹시 여윳돈이 있더라도 사채보다는 누가복음 19장 23절 말씀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이자율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고리를 받는다고 해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8절에서는 고리로 축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2.21.)

환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입니다. 오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경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문제는 도외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6월 세계 150여 개국의 대표단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리우환경회의를 열고 오존층 소멸,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한 이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 등 환경 여건과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의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한 ‘환경지속성지수’에 따르면 2002년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 142개국 중 136위인 것으로 나타나 자연생태의 보전 정도가 아주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를진 우리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편리한 생활만 추구하다 보니 1회 용품을 남용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2.3kg이었으나 현재는 0.96kg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여전히 많은 편이며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 원으로 1인당 31만 4천 원에 해당하며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비슷합니다.

둘째, 기업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드는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 어느 전자 회사의 폐놀 유출 사건에서 보았듯이 환경오염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는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고 있어 친환경적 기업이미지는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환경 측면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인식을 종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날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관리자의 책임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관리에만 집착하며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안식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레위기 25장에서는 7년째 되는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도입한 국립공원 안식년 제도를 볼 때 3,400여 년 전에 안식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2.28.)

임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금은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와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직종에 근무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해서 많은 국가가 최저임금제나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에는 그 부족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2002년은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9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생산성이나 사회적 수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별, 학력별, 직업별로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2000년 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졸

업자의 평균임금은 월 178만 9천 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임금 118만 5천 원보다 월 60만 4천 원이 높으며, 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남자의 평균임금은 월 188만 2천 원으로 여자의 평균임금 139만 6천 원보다 48만 6천 원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남자의 평균임금은 월 132만 7천 원으로 여자의 평균임금 88만 6천 원보다 44만 천원이 높습니다. 또한, 직업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178만 6천으로 단순노무자의 평균임금 81만 원보다 2.2배나 높습니다.

한편, 거시적으로 볼 때 임금은 피용자보수라고도 하는데요 피용자보수란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중 노동을 제공한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말합니다. 즉,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상승할수록 이 비율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42.3%, 80년대에는 53.5%, 90년대에는 60.7%에 이르러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임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최저생계비와 임금 격차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포도원 비유에서는 최저생계비로서 임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를 임금에 적용해 보면 임금 격차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4절

에서 임금 착취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크리스천 고용주들은 임금 착취나 체불을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나 인권유린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3.7.)

선택의 문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의 출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원과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어서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라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선택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학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택 즉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을 말합니다.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난주 제주도를 필두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선거 역시 정치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사회적 선택으로 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경험하였듯이 정치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12.12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세력의 주동자였던 노태우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경우를 볼 때 우리 국민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너무 쉽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잘 기억하여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온 자, 상황 논리로 말을 바꾸지 않는 자, 오리발을 내밀지 않는 정직한 자를 지도자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새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므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지식산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한 지도자, 경제 및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공약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디모테전서 3장 3절에서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뇌물과 부정부패로 일그러진 우리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 금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이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상을 고루 갖춘 지도자를 다가올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 사회는 참으로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3.14.)

도덕적 해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의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정부는 국민을 잘살게 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인데 이들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으로 외화 부족, 해외 음모,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재벌들은 기업 규모만 키워 놓으면 부실해도 절대로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소위 대마불사로 빚을 끌어다 쓰는 데 혈안이 되었고, 금융기관 역시 부실하더라도 정부가 부도를 막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내는 경영에 전념하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논리보다는 여론과 로비

등 정치 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의 요구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 금융, 노동 부문, 공공 부문 등 소위 4대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구조 조정의 경우 퇴출, 합병, 해외 매각,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전체 금융기관의 23.1%에 해당되는 485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싸값에 사주거나 금융기관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이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공적자금이라고 합니다. 2001년 9월 말 현재 총 148조 3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어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출자나 출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및 자산의 매입, 그리고 폐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 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초래된 금융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에서도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역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3.21.)

저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현재 소비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개인이 저축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거나,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저축도 본인이 소비하든 자녀가 소비하든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소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욕망과 소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증가하는데, 소득증가분에 대한 저축증가분의 비율을 저축성향이라고 합니다. 저축성향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소비에 큰 비중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저축성향이 낮은 사람은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큰 비중을 두는 현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보는 고전학파 학자들과 소비가 미덕이라고 보는 케인즈학파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소비가 미덕일 수도 있고 저축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이 미덕임이 틀림없으며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투자재원의

로 사용되는 저축이 풍부해야 하므로 저축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축은 미래에 더 안정된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저축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강제저축과 개인연금이나 보험 및 적금과 같은 자발적 저축이 있는데요. 청장년기에는 총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저축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저축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0년대에는 31.7%였으나 90년대에는 35.2%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이미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우리의 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보다는 13.7%포인트, 중국보다는 5.6%포인트나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근에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곡물을 저축한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저축이 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하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는 자가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3.28.)

정부의 역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계, 기업과 함께 제3의 경제주체로서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인 자원의 배분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절대군주였던 루이 14세의 자문관 콜베르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을 장려하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 콜베르가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레장드라는 사업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방임으로 불리면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제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시장이 완전히 경쟁적이지 않는 등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자원배분과 균등한 소득분배가 시장을 통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특히,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자는 정부 간섭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고 그들은 시장실패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시정하려고 시장에 개입한 정부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성경 역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마귀가 이 세상의 정치적 세력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지상의 정부는 본래부터 부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경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작용하고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셋째, 정부는 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정부의 형태를 나누어 보면 코치형, 감독형 및 심판형 정부가 있는데 개발도상기에는 코치형 또는 감독형 정부가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 보장과 자기책임 및 경쟁 등의 원칙에 따라 ‘게임의 법칙’을 제정하고 이를 잘 감시하는 심판형 정부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선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강기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4.4.)

제주일보 시론

목 차

•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1998.5.28.)	191
• 경제원칙을 지키자(1998.7.19.)	194
• IMF 체제 극복 전략(I): 소비자 구조조정(1998.9.2.)	197
• IMF 체제 극복 전략(II): 기업 구조조정(1998.11.4.)	200
• IMF 체제 극복 전략(III): 정부 역할 조정(1998.12.7.)	203
• 제2 건국: 어떻게 해야 하나?(1999.1.16.)	206
• 제3의 길?(1999.2.20.)	209
•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1999.3.20.)	212
•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방법(1999.4.28.)	215
• 지역경제의 견인차: 소상공인(1999.6.29.)	218
• 지역경제의 혈관: 지역금융(1999.8.21.)	221
•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주역:전자상거래(1999.10.12.)	224
• 21세기 꿈의 산업: 벤처기업(1999.12.12.)	227
•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자(2001.4.4.)	230
• 항공요금 인상: 문제점과 대책(2001.5.9.)	233
• 신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자(2001.6.22.)	236
• 제주 생물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전략(2001.8.9.)	239
• 미완의 구조조정(2001.9.15.)	242
• 디지털경제 시대의 생존전략(2001.10.19.)	245

• 공적자금과 도덕적 해이(2001.11.18.)	248
• 바이오 혁명과 생물산업(2002.1.3.)	251
• 법인세 논쟁 유감(2002.2.15.)	254
• 부패 공화국(2002.3.17.)	257
• 부동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2002.4.27.)	260
• 선택의 기준(2002.6.5.)	263
• 포스트 월드컵: 무엇을 배울 것인가?(2002.7.12.)	266
•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2002.12.4.)	269
•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2002.12.28.)	272
•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2003.2.5.)	275
•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2003.3.15.)	278
• 내국인면세점의 영향과 대책(2003.4.22.)	281
•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2003.6.7.)	284
• 사람이 경쟁력이다(2003.8.5.)	287
• 인적자본이 핵심이다(2003.11.17.)	290
•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에 덧붙여(2004.2.3.)	293
• 시간은 흐르고 있다(2004.3.30.)	296
• 기업이 해결책이다(2004.5.4.)	299
• 고부가가치 국제회의를 기대하며(2004.6.22.)	302
• 제주경제의 위기 : 현실인가 과장인가?(2004.8.12.)	305
•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릴 시간(2004.10.2.)	308
• MVP and Network(2005.2.8.)	311
• 중소(中小)기업을 강소(強小)기업으로(2005.5.2.)	314
•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2005.6.30.)	317

• 8.31 부동산 종합대책 따라잡기(2005.9.3.)	320
• Go! Jeju(2005.10.25.)	323
•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명과 암(1)(2019.3.26.) ..	326
•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명과 암(2)(2019.6.12.) ...	329
• 한일청구권협정 보상금 따라잡기(2019.8.29.)	332
• 4차 산업혁명시대, 쌀농사가 중요하다(2020.2.18.)	335
•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2020.5.12.) ..	338
• Triple Golds :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요소(2020.9.29.) ..	341
• 제주형 중소기업생태계 구축의 2021년(2021.1.11.) ...	344
• 산업구조와 경제회복(2021.6.2.)	347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6.4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는 대의정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 행사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IMF 시대를 반영하듯 이번 선거는 국민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느낌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21세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지역의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매일 투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 중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 표를 많이 얻은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그 명성을 유지하면서 오래 지속된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역시 유권자들이 표출하는 공공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권자의 선택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

는 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며 분산적이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집중적이다. 즉, 국민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 대통령이 국부를 증대시켰을 경우 국부의 일부만이 해당 지역에 돌아가겠지만 지역주민이 올바른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그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을 경우 그 혜택은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 각 후보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읽어서 비교해 보고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는 자를 선출하자. 수많은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해 언급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공약이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지방정부가 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된 공약이어야 한다.

둘째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형을 선출하자.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이므로 다양성을 존중하되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 경영 마인드와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지식산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한 지도자를 선출하자.

셋째는, 각 후보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온 자, 정직한 자를 선출하자. 유권자들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경험

하였고 그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하였다. 이제는 지연·학연·혈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각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의 과거 행태를 최대한 기억하여 선출할 때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8.5.28.)



경제원칙을 지키자

지금 우리는 IMF 체제라고 하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실물경제는 건국 이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금융 부문도 은행·종합금융·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퇴출로 심각한 금융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첫째는, 시장경제 원칙이다.

구조조정은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선책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권리 및 재산권의 침해, 여론몰이, 일관성 및 경제철학 부재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발표되는 정책들은 통제 경제와 지시경제의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재벌 총수들의 재산 헌납이나 인위적인 재벌 간 빅딜 등은 시장경제 원칙이 무시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효율성 원칙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효율성의 달성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이나 한계노동자가 가장 먼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실업자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문제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성의 원칙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이른 시일 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64조 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7조 9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구렁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용에서 구렁텅이 속의 지렁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효율성이 공평성보다 우선하는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고자 한다. 고용조정이 구조조정의 전부는 아니지만 구조조정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

셋째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정부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과잉보호는 오히려 재취업의 의욕을 감퇴시켜 실
업을 더욱 장기화시킬 것이다. 또한 지금 정부는 실업자를 구
제한다는 명목으로 중산층에게 과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의 붕괴는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다. 정책의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8.7.19.)

IMF 체제 극복 전략(I): 소비자 구조조정

지금 우리 경제의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그동안 잘못되었던 궤도를 수정하고 자기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작업은 우리가 IMF 체제를 극복하고 생존해 가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IMF 체제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소비문화를 싸뜩이 구매, 탐욕적 소비, 모방 소비, 과시성 소비, 거품 소비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문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한 마디로 과소비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소비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소득수준이 서로 달라 과소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이 정한 과소비 기준은 맞춤 양복 70만 원 이상, 기성복 40만 원 이상, 구두 10만 원 이상, 가구 250만 원 이상, 카펫 130만 원 이상, 운동구 70만 원 이상 등이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에는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2/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6.6%를 기록했고 소비지출 증가율은 무려 마이너스 12.9%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소비위축은 기업생산을 위축시키거나 기업도산을 가져와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삭감되어 더욱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구조조정이란 한 마디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조직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효율적인 소비가 구조조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첫째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먼저 근시안적인 소비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소비가 필요하다. 저축은 미래 소비를 위하여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자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인 저축을 잘 조절할 것이다. 또한 과시성 소비를 억제하고 기부금과 같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소비와 여행 등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 소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는, 건전한 소비 전략을 가져야 한다.

시장에 갈 때 구입품을 미리 기록하거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또한 유행을 극복하고 상품의 손질과 보관을 철저히 하며 고급품만을 찾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셋째는,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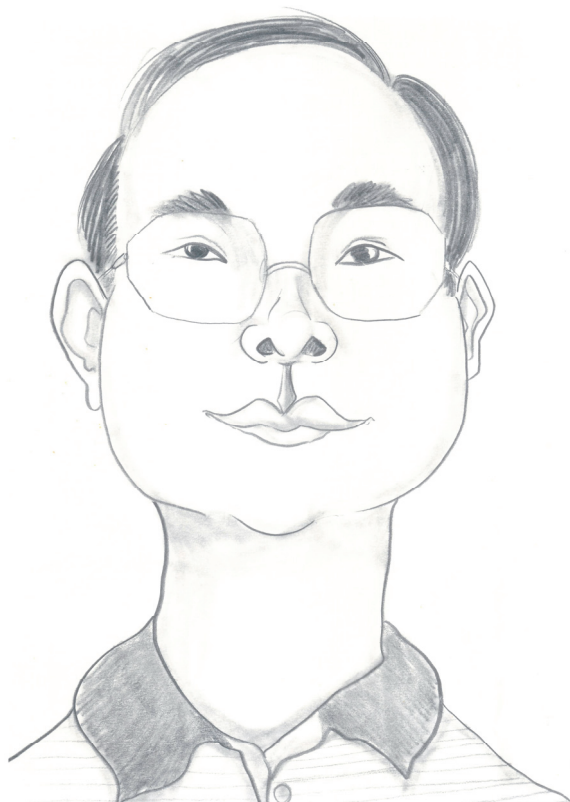
석유, 가스, 전기 등 수입 소비재는 절약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해야 한다.

IMF 체제 초기에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더니 또 언제부터인

가는 소비를 너무 줄이면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국민은 혼동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소비가 생산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소비문화와 과소비는 거품경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과소비도 소비 위축도 아닌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때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8.9.2.)



IMF 체제 극복 전략(II): 기업 구조조정

경제학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도둑 2명이 어느 집에 숨어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잡혔다. 이들이 최근 자주 발생한 절도사건의 범인임이 틀림없어 보이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은 이들을 무단침입죄 이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찰은 그들을 서로 다른 취조실로 데려간 후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드러나면 중형으로 기소하겠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의리를 지켜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무단침입죄로만 기소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자신만이 감형받기 위하여 자백하면 둘 다 감형은 받지만, 무단침입죄에다 절도죄가 추가된다. 죄수는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의리를 지킬 것인가 자백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둘 다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백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자백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의사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서로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해 보면 기업들은 서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협력의 비용 지급은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무임 승차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5대 재벌 간에 7개 업종 17개 기업에 대해 빅딜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벌들의 자발적인 의지는 매우 약해 보인다. 몇몇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기업은 상당히 부진하다. 지금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업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인 기업 구조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첫째는, 대중치료가 아닌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비용 절감, 인력 및 조직축소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미래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축해야 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여 손 전체를 잃기보다는 서너 손가락을 자르고 손 전체를 구하는 편이 더 현명할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생산의 제4요소로 기업가정신이 있는데 이는 기업경영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혁신 정신을 말한다. 기업가는 경영마인드 외에 정보·혁신·전략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가부장적인 소유경영의식에서 합리적인 전문 경영의식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상호지급보증, 상호출자, 내부거래를 지양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경영 투명성을 지향하여 세계 표준 아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서 21세기 맞이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8.11.4.)

IMF 체제 극복 전략(III): 정부 역할 조정

지난 12월 7일 정부·재계·금융기관이 청와대에서 합동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합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벌 구조조정의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합의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국민정부는 그 어떤 정권도 해 낼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MF 체제 아래서 국민정부가 이룩한 노·사·정 합의,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등을 보면서 필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자와 간섭주의자의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17세기 프랑스는 왕이 모든 사람의 생활, 일, 재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절대 군주국가였다. 루이 14세의 자문관이었던 콜베르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을 장려하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 콜베르가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레장드라는 사업가가 “laissez-nous faire(내버려 두라)”라고 하였다. 이 말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방임(laissez faire)으로 불리면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제철학이 되었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였고 특히,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자는 정부 간섭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들은 시장실패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경제에 개입하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경제 논리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작용하고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정부 조직이 가장 관료적이며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정책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형태에는 코치형, 감독형, 심판형이 있는데 개발도상기와 구조 조정기에는 코치형 또는 감독형 정부가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 등의 원칙에 따라 ‘게임의 법칙’을 제정하고 이를 잘 감시하는 심판형 정부가 필수적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8.12.7.)

제2 건국: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199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제2 건국일로 선포하고 국정개혁 6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치·경제·문화·정보화·남북문제 등의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IMF 체제를 빨리 탈출하여 민족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멀어 어떠한 방법으로 제2 건국에 동참해야 할 지 국민은 막막하다. 그러면 제2 건국을 어떻게 추진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을까?

첫째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을 청산하지 못했고, 각종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원칙 없이 법을 적용함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주의만 낳았다. 새해 들어 연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종기 변호사의 수입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과거

를 들추어내서 법대로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의 청산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그 대신에 지금, 이 순간부터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명실상부한 제2의 건국이 될 것이다.

둘째는, 사이비 지도층 인사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를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정치인들, 뇌물을 받고 검찰에 소환될 때는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는 고개를 떨구고 구속되는 정치인들,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는 불가사리 교수들, 부교재 채택료와 촌지를 챙기는 교사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종교인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기업인들, 브로커로 몰락한 판검사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장성들, 규제를 이용하여 각종 뇌물을 챙기는 관료들, 이들이 퇴출당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제2 건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셋째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과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 분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인한 과실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느라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더구나 1인당 조세 부담액이 올해 186만 8천 원에서 2002년에는 253만 원으로 매년 늘어난다고 하니 참으로 부담할 뿐이다. 정부는 재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그 과실을 국민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9.1.16.)

제3의 길?

새로운 사회 경제 체제의 발전을 주장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최근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제3의 길’의 정치적 색조는 중도좌파인데 영국의 블레어, 프랑스의 조스팽, 독일의 슈뢰더 등 중도좌파가 이미 집권함으로써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배분이 결정되며 사회주의는 정부가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애덤 스미스 이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근거해 온 자본주의는 마르크스를 선두로 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서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는데 이들을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구좌파라고 부르며 기든스는 이를 제1의 길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부를 더욱 공평하게 확산시키는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토대 아래 개인의 선택과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경쟁력과 부의 창출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자 또는 신우파가 등장하였는데 기든스는 이를 제2의 길로 보았다.

그러면 ‘제3의 길’은 무엇이며 이 길이 과연 우리나라가 가

야 할 길인가? 기든스는 ‘제3의 길’은 “이미 새로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동시에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좌우를 초월하는 실용 노선으로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낡은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혼합경제로 볼 수 있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IMF 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국부는 종전의 6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실업자도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지 줄어든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우리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제3의 길’은 이상에 너무 치우쳐 있고 현실감이 부족하다. 즉, 부를 경제주체들에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비된 체제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이 아직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에 도입되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셋째, ‘제3의 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관료주의와 전체주의의 경향을 띄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료들의 부패가 심하고 정책에 의한 정당 간의 대결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길’은 집단주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3의 길’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제3의 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제3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국민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999.2.20.)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성 원칙, 부와 소득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공정성 원칙, 그리고 발표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일관성 원칙이다. 경제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의 처지에서도 이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경제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연금제도란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보험료를 적립한 후 노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와 국내 자본의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볼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원칙에 따라 평가해보면 된다.

첫째, 효율성의 원칙으로 평가해 보자.

국민이 낸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 기금은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금융 부문 수익률보다 2% 또는 3% 포인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투자됨으로 말미암아 88년부터 96년까지의 총손실액이 6,98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관리 운영 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도 각각 별도의 관리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총지출액 중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둘째, 공평성의 원칙으로 평가해 보자.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 「국민연금제도」는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구조는 매우 불공평하여 소득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가 신고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농어촌 가입자에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다. 저소득층 간의 소득재분배이다. 또한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세대에서 연금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으므로 세대 간 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공평하지 못하다.

셋째, 일관성의 원칙으로 평가해 보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원래 「국

민 복지 연금법」은 7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고 8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그 실시 시기를 두고 정치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

경제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처방 대신에 정치적 처방을 택한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이 경제를 공부하여 모든 문제를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정치인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안다면 그들은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할 것이고 이는 곧 그들로 인한 정부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999.3.20.)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방법

지난 3월 2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부산지역의 4개 대학이 기소당했고 6개 대학의 전산 책임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3월 17일에는 광주 지역의 대학들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전체 소프트웨어의 약 70%가 불법복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품 사용률도 평균 53%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품 사용률은 극히 낮은 가운데 특히, 제주도의 정품 사용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복제율을 미국의 수준인 27%로 낮추면 2001년까지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번 기회에 21세기의 주도 산업으로 부상할 지식기반산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5월 1일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가격차별화를 확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현재 사무자동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독과점시장이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가격결정에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악화(불법복제물)가 양화(정품)를 구축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이윤극대화 또는 시장점유율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가격차별화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수요자나 교육용에는 정품 사용의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수요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의 보호는 자본주의의 3대 원리인 시장(price), 이윤(profit), 재산권(property) 중에서 재산권의 보호에 속한다. 따라서 남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나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다는 당위성에서도 그러하지만, 경제 논리로 볼 때도 앞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적발될 확률도 낮았게 적발되더라도 벌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적었지만, 이제는 단속강화로 인해 적발될 확률이 높아지고 벌칙이 강화되어 비용이 더 들

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당국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처벌에서 수요자로 단속 대상을 바꾸었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의 전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정품 사용의 확대가 목적이라면 과거를 캐내는 식의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의 목적이 정품 사용의 확대에 있는지 불법 사용자의 색출에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과거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학마다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느라 실습을 위주로 하는 수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낭비임이 틀림없다.

(1999.4.28.)

지역경제의 견인차: 소상공인

국민정부 들어 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상시종업원 5인에서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 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판매 부진, 임금 상승 등이 경영 애로 요인이고 비제조업의 경우 자금난, 판매 부진, 인력난 등이 경영 애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이 관련해서는 담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들고 있었다. 제주도의 소상공업체 수는 1998년 말 현재 2만 9천 138개로 전국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조업체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비제조업체가 94.7%를 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요인은 자금난과 담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소기업지원이 중기업 중심이어서 소기업은 배제되었고, 제조업 중심이어서 90%가 비제조업에 속해 있는 소상공업은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전국적으로 3,000억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제주지역도 30억 원이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일과성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소상공업이 관련된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에 있어서 대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고 중소기업에는 대출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실제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많이 포함되는 등 편법으로 운용됐으며 심사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담보 위주로 대출해 왔다. 이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게도

주거래은행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 없이도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들은 경영마인드와 전략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밀려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소상공업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업체가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에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업은 기술 없이도 소자본으로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는 주먹구구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하게 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새 고객을 창출하는 전략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999.6.29.)

지역경제의 혈관: 지역금융

1986년 영국에서 대처 정권의 금융개혁으로 시작된 ‘빅뱅(Big Bang)’은 그 후 ‘미국판 빅뱅’과 ‘일본판 빅뱅’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한국판 빅뱅’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제1차 빅뱅’을 시작하였다.

정부가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여 5개의 은행이 퇴출당하였고 1998년 1년 동안 41개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퇴출당하였다. 더구나 퇴출당한 5개 은행 중 지방은행이 4개나 되고, 퇴출당한 16개 종금사 중 지방종금사가 12개나 되며, 구조조정 대상이 된 2개 투자신탁회사가 모두 지방 투자신탁회사이며 퇴출당한 4개 생명보험회사 중 지방 생명보험회사가 3개나 되는 등 지역 금융기관들의 무더기 퇴출로 지역 금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제주지역도 한 개의 지방은행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고 두 개의 지역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며 지역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는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계 등 서민층이므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역금융의 위

축은 지역의 서민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금융구조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빅뱅’이 예상되고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 대한 원금 보장이 축소되는 2001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혈관인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그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존전략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전문화, 차별화하고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산-부채관리, 리스크 관리, 파생금융상품 등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경영기법을 선진화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거태 고객 개념을 도입하여 우량 고객에게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및 고객밀착형 경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이종의 금융기관이라도 업무영역이 유사한 금융기관끼리는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이 어려우면 그 전 단계로써 업무제휴, 온라인 제휴, 공동투자 제휴 등 여러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 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금융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내 대형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자금을 공급해 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략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9.8.21.)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주역: 전자상거래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5박 6일 동안 외부인과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방 안에서 오직 인터넷만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여가생활을 즐겨야 했다. 물론 이 게임은 인터넷만으로 생존해야 하므로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필자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다녀올 때마다 서점에 들러 책을 한 보따리 사 가지고 오곤 하였지만 이제는 연구실에서 컴퓨터로 국내외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책을 찾고 산다. 그 외에도 주식거래도 하며 은행에 들르지 않고도 대부분의 거래를 전자 은행을 통해서 처리하고 외국에 갈 때는 호텔이나 렌터카를 예약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EC)란 상거래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용어가 등장한 지는 10년이 지났고 비즈니스에 활용된 지는 6년이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기반 경제 시대에는 물적자본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신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지적자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지적자본의 중심에 전자상거래가 우뚝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의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인터넷 호스트 대비 쇼핑몰 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며, 매출액으로 보면 1998년 약 150억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1999년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인터넷 쇼핑몰 업체 821개 중 불과 6.4%만이 흑자를 내는 실정이다. 그러면 21세기 비즈니스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전자상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된 정부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미흡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도·규범 등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이나 세제상의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5대 지식기반산업에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앞으로 2년 동안 도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제주도의 지리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쇼핑몰 업체는 공신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계의 부진 이유로는 불량으로 인한 반품, 잦은 배달 사고,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들을 업계는 이른 시일 안에 극복해야 하며 청소년, 주부, 전문인 등 소비자 계층별로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다.

(1999.10.12.)

21세기 꿈의 산업: 벤처기업

최근 정부, 학계, 업계에서는 ‘21세기 꿈의 산업’이라는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벤처기업이란 첨단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모험기업이요 지식 집약적인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1997년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벤처기업을 통해 경제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하고, 취약한 첨단기술 분야를 육성하여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6년 말에 1,500여 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의 수가 1999년 10월 말 현재 4,515개 사에 달하고 있으며 월평균 289개 사가 창업되고 있다. 또한 올해 벤처기업의 생산 총액은 약 2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벤처기업들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지역의 1999년 11월 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8개, 총매출액 약 200억 원, 고용인원 100명 내

외로 벤처기업의 역할이 미미한 편이다.

제주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벤처기업들은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모방이 아닌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고 독특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도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들은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자금난, 인력난, 높은 물류비용, 홍보 부족, 원료확보난 등 경영상의 애로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벤처기업들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틈새시장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한 기업도 있고 첨단 연구단지 내에 연구소를 보유함으로써 최신 기술의 개발에 승부를 거는 기업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벤처기업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개방의 높은 파고에 휘청거리고 있고 선도산업인 관광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21세기 주도 산업으로 부상할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벤처기업에 관한 관심이 거품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예비 벤처기업가들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을 잘 파악하여 수익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확실한 아이템을 포착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미 벤처기업가로 선정된 사람들은 무늬만 벤처기업가가 되지 말고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지원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부구조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99.12.12.)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자

지역연구를 수행하다가 보면 항상 느끼는 점은 지역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에서는 2001년 3월 1일 현재 409종에 달하는 방대한 통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에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통계정보 시스템(KOSIS)을 통해 국내외 주요 통계 530만 계열을 수록하고 있어 필자와 같이 실증분석을 주로 하는 경제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에서는 지역에 관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고 있지만 부문적이고 미시적인 자료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있는 통계청 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 연보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자료들은 연속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예도 있어 통계 수요자의 측면에서 볼 때 통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및 지역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면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의 처지에서 볼 때 연구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하부구조이다. 사회기반시설이 소수의 수요자에 의해

그 사용이 독점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이듯이 통계 정보도 중요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지역연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필자는 경기변동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국가별 경기변동이나 산업별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는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별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연구된 것이 없다. 필자가 연구를 수행하려고 해도 지역 통계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3~4년만 더 축적되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지역연구는 그 영역을 더욱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준 높은 지역연구가 가능해진다.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일은 연구자 별로 중복되는 낭비적인 일이다.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연구자는 모형설정과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등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정책의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지역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면 좋은 연구결과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올바른 정책이란 현실적인 증거(실증)가 뒷받침이 된 효율적인 정책을 말하는데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현실적인 증거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역 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통계청 제주사무소,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계기관들이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지역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2001.4.4.)

항공요금 인상: 문제점과 대책

대한항공의 국내선 요금 인상을 필두로 국내선 항공요금이 평균 12% 정도 인상되었다. 항공기에 대한 대체교통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공료 인상저지 투쟁을 벌여 오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항공요금 인상은 유가 인상 등 원가 상승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제 논리로 볼 때 몇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용이 인상되면 요금도 인상되어야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인상분을 다른 부분의 비용 절감을 통해 일부 흡수하여 분담하려는 노력은 병행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유가가 인상되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항공요금 인상에 반영하면서도 유가가 인하되어 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 항공요금을 인하하여 그 과실을 소비자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독점하는 비대칭적인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두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의 경우 두 회사가 서로의 가격정책을 탐색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항상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양 항공사의 요금 인상은 경제 논리보다는 담합에 의한 인상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요금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어느 한 회사가 요금을 인상하면 경쟁하는 다른 회사는 오히려 요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총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기습적인 항공요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단기적으로는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종래의 항공요금 신고제를 폐지하고 항공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요금의 변경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당국은 항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항공운송사업의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과점시장일 때에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업체 간 담합을 유

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잠재적 경쟁자들을 유인함으로써 과점시장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면 항공 운송 사업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줄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낮은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가져다줄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이러한 논리의 실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1978년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진출입, 항공노선 및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항공요금은 이후 10년 동안 약 20%가 인하되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를 합한 사회 전체의 이득도 연 60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01.5.9.)

신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자

최근에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1990년대 들어 미국경제는 초유의 장기 호황을 누려왔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IT(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2년 동안 IT산업의 생산은 매년 약 40%씩 성장하여 전통산업의 생산 증가율 6%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도 이른 시일 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1차산업과 3차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제주지역의 경제 현황은 어떠한가? 1999년 현재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7%이며 제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9년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생명산업인 농림어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이며, 선도산업인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26.1%인데, 현재의 산업 패러다임을 고수하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관광산업은 소득 탄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다. 따

라서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면 제주경제는 국내 경기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제주가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산업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그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것이 IT산업과 BT(생명공학) 산업인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생물의 다양성 및 청정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활용한 생물(바이오)산업은 그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제주지역 생물산업의 또 다른 잠재력은 농·축·수산·임업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해 보면 제주지역에서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산업들이 사양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산업들이 신기술과 연계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면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도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를 설립하여 생물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물산업을 제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주대학에서도 생물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를 곧 설립하게 계획하여 생물산업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연구 장비나 연구시설 등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제주대학교나 도내의 유관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 기술 즉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능한 연구 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가 등 휴먼웨어를 많이 창출하면 21세기는 제주도에 새로운 ‘기회의 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찾는데 있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단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 블라인더 교수의 말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1.6.22.)

제주 생물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전략

지금 우리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와는 달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말하는데 정보통신 기술(IT)산업과 생명공학(BT)산업이 그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도 디지털경제는 기존경제와 확연히 구분되는데 기존경제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이 경제정책의 바탕을 이루었으나 디지털경제에서는 핵심 역량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 및 운영체계(Mechanism) 등 4가지를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본 ser-M 모델을 이용하여 제주 생물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발전전략을 도출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주체란 기업가와 행정관료 등 기업의 장래를 생각하고 경영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적요소로 주체의 의지와 능력 및 주체 간 의견 합의의 정도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제주 생물산업의 경우 기존 생물 관련 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및 행정관료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기업가들에게는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생물산업에 정통한 행정관료를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이란 지역 특성, 기본자원, 산업환경, 연관산업과의 관련성 등 부존자원으로써 이들 요인의 제약 및 기회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제주 생물산업의 경우 다양한 청정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천연 소재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생물 관련 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아주 크므로 생물산업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함께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기회가 있으므로 관광과 연계된 생물산업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금융환경이 열악하므로 바이오벤처 펀드를 조성하여 바이오벤처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물산업제품에 대한 도내 및 국내 수요가 크지 않으므로 e-비즈니스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이란 기술, 전문가, 산학연 협력, 전략 등 창출 자원으로 가치 창출의 보유 능력으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제주 생물산업의 경우 바이오 관련 신기술 및 인력이 부족하므로 공공연구소 분소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하며, 산학연의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기관이

부족하므로 바이오벤처 테크노파크를 설립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운영체계란 주체, 환경, 자원 등을 결합하는 능력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역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경영정책으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제주 생물산업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므로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해 생물산업의 자립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001.8.9.)

미완의 구조조정

지난 8월 23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당초 계획되었던 2004년 5월보다 3년 정도 앞당겨 IMF를 졸업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대마불사로 여겨지던 대기업들이 사라지고, 실업자 수가 한 때 18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 퇴출당하는 등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했다. 반면에 과거 여러 차례 계획되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구조조정을 비롯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긍정적인 경험도 하였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부실 제거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따라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고 2001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의 경우 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가속, 경영책임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노동 부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행정조직의 간소화 및 공기업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초 계획한 구조조정의 완결 시점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4대 구조조정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업 부문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경우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135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자금 전용, 퇴직금 과다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노동 부문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제도의 확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및 기능 효율화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경제지표들은 IMF 체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98년 경기회복과 함께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저하되었고 최근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될 소지가 있어 당초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 종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미완의 구조조정을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하여 이른 시일 안에 재도약을 하는 V자형 미래이며 둘째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도약을 하는 U자형 미래이며 셋째는 현재까지의 성과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는 L자형 미래이다.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01.9.15.)

디지털경제 시대의 생존전략

지금 우리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와는 달리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말하는데 정보통신(IT)산업과 생명공학(BT) 산업 및 전자상거래가 중심 역할을 한다.

디지털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과 소비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정보와 지식 등 생산요소들이 어디든지 빠른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에서는 최신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대신에 공장과 유통망 없이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어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가 미국경제에서 입증된 이후 디지털경제의 과실을 선점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듯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

세계 각국들은 정보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hardware)적 하부구조의 건설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등 소프트웨어(software)적 하부구조의 건설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적 자본(human ware)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디지털형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수익모형의 개발에 힘써야 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한다.

미국의 나스닥시장에서 닷컴 기업(아마존, 아메리칸 온라인 등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닷컴 기업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기업과 벤처기업가는 전략적 제휴도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이 디지털경제의 추세를 무시하고 기존 패러다임만을 고수하고서는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

고,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on-line기업 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on-line기업(벤처기업)과 off-line기업(전통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들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으로 변신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개인 가치의 기준이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철저한 성과급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일자리도 평생 일자리의 개념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탄력적인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진전과 함께 이에 적응하는 계층과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 간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득의 격차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1.10.19.)

공적자금과 도덕적 해이

1998년 6월 5개의 부실 은행에 대한 퇴출 조치가 단행된 것을 신호로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퇴출, 합병, 해외 매각 및 외자 유치, 증자 지원 등을 통해 1997년 말 총 2,012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의 23.1%에 해당되는 485개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거나 금융기관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이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공적자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인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2001년 9월 말 현재 채권발행 97조 2천억 원, 1차 투입에서 회수된 자금 28조 7천억 원, 공공자금 22조 4천억 원 등 총 148조 3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어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출자 56조 9천억 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및 자산의 매입 52조 6천억 원, 폐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23조 5천억 원, 금융기관 출연 15조 3천억 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 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또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도덕적 해이란 주인(주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금융기관)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공적자금에서는 투입 자금의 낮은 회수율, 경영진의 자금 전용, 퇴직금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148조 3천억 원의 공적자금 중 36조 7천억 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24.7%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및 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매각되었고 예금대지급 및 금융기관 출연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56조 9천억 원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가 관건이다. 출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만 하는데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현실과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 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는,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IMF 체제 이전 누적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에서도 다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운영 주체로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부실의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시에는 경영에 대한 평가와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1.11.18.)

바이오 혁명과 생물산업

작년 6월 인간 게놈지도로 알려진 인간 유전자의 서열이 밝혀짐으로써 바이오 혁명이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농업혁명이 인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산업혁명이 물질적 편리함을 가져왔고, 정보화 혁명이 인간의 지적 욕구를 해결해 주었다면, 바이오 혁명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생물산업이 바이오 혁명을 주도할 산업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핵심 기초 분야에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 및 화학회사들은 생물산업에 기업의 장래를 걸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신산업 분야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극미세 신소재) 등 3T를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생물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세계 6위권의 생물산업 선진국으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향후 생물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큰 역할을 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주지역에 있는 생물산업 관련 기업(BT

기업)들을 방문하여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지역의 B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BT 기업들은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창조적이고 독보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품질의 제품 또는 간편한 제품 등을 가진 기업도 있었다.

둘째,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친환경적 추세를 기회로 삼아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BT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금난, 인력난, 최신 경영기법 부족 등 중소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애로점들이다. 외부자금 조달과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가 어렵고 재무관리 및 마케팅의 부족으로 인해 매출액 증대를 통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는 높은 물류비용, 원료확보난 등 지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애로점들인데 이에 따라 타 지역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 증대를 통한 건전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는 치열한 경쟁, 과도한 규제 등 외부 환경적인 애로점들이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제주지역을 해양생물·식물의 첨단기지로 육성하기로 하였고 제주도는 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제주 대학교는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설립하는 등 제주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산·관·학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간 기술 및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 업종 기업 간에도 제휴하고, 타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기업 간에도 제휴하여 지역중소기업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물산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1.3.)

법인세 논쟁 유감

작년 연말부터 법인세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치권과 경제전문가 집단 사이에 뜨겁게 일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에서 경제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란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15%, 연간 소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7%이다. 법인세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우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낮고 중국과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세 논쟁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인세 폐지론자들이나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 모두가 아전인수식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이들이 관련된 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법인세 폐지에 찬성하고 정부 관료와 여당의 정치인들은 법인세 폐지에 반대하였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현행 법인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과거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 폐지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에 투하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측 모두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는,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자료의 제시 없이 당위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 래퍼(Laffer)의 주장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세율을 인하해 주면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론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법인세 폐지로 인한 세수의 감소만을 계산하고 반대급부로 얻게 될 세수의 증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 폐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법인세 폐지론자들과 법인세 폐지 반대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법인세 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측해 볼 때 법인세를 폐지하면 효율성은 증대되지만, 공평성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의 크기가 더 큰지는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혹시 계산이 아주 힘들거나 계산 결과가 비슷할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의 기준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든 여론조사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2002.2.15.)

부패 공화국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뇌물수수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 이용호 게이트 등 소위 4대 게이트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 현직 도지사, 대통령의 집사, 현직 교육감의 수뢰가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정치, 교육, 언론,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부정부패를 찾아서 고발해야 하는 검찰까지 부정에 연루되는 등 총체적인 부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뇌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뇌물의 형태도 금전, 상품권, 자유이용권에서부터 향응, 골프접대, 정치자금 및 성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뇌물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지칭하며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인 선물과는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물과 뇌물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뇌물이고 부담이 없으면 선물이며, 사전에 건네주면 뇌물이고 사후에 주면 선물이며, 주고 난 후 잊

어버리지 못하면 뇌물이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선물이며,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뇌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정 금액이 5만 원이며 미국의 경우 20달러 즉, 2만 5천 원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다. 문민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회수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뇌물수수 금액은 커졌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일간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정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무원의 84.7%가 공직사회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90%가 우리나라를 부패한 나라로 보고 상당수의 청소년이 부패의 대열에 끼어들겠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다.

부정부패의 경제적인 측면은 사회적 마찰비용의 증가라는 것이다. 임금, 이자, 지대 등 생산비용 외에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 마찰비용인데 행정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주는 급행료, 공사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이 그러한 비용이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마찰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비용을 줄이다 보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에서 나타났듯이 부실한 산출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부정을 해서 얻는 이득이 발각되었을 때 받을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부정의 기준이나 처벌이 선진국보다 관대한 편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2002.3.17.)

부동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하여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 주택보급률이 97%에 이르고 있지만 43%의 가구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나 상승하였고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나 상승하였다.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하였다.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4백만을 넘어섰다. 최근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들어 총 7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투기 과열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은 수요·공급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공급 물량이 그 요인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 투기수요, 재건축 붐에 따른 이주수요, 전세금 상승에 따라 전세수요에서 구매 수요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IMF 관리체제 이후 주택가격과 땅값이 평균 30% 하락하자 부동산 경기라도 살리겠다고 1977년 이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1998년 2월 민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율화하였다. 그러자 97년에 평당 464만 원이었던 서울지역의 분양가는 올해 들어 평당 7백만 원으로 급등하였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분양가를 상승하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여 200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실제 아파트 가격은 적정가격보다 40%가 고평가되어 있고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적정가격보다 54%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화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가격통제의 기능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 경제 논리로 볼 때 자율화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같이 정상적인 수요·공급 외에 과열된 투기 수요가 존재하고 각종 불법 자금이 높은 분양가를 통해 조성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격통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가의 결정 과정에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유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이용은 활성화하되 토지 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시가표준액도 현실화하여 투기심리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냉·온탕식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하고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2.4.27.)

선택의 기준

경제학의 출발은 선택의 문제이다. 의식주,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개인적인 문제와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 선택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학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택 즉,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문제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고려해 볼 때 해방 이후 치른 55번의 각종 선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 왔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듯이 정치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게 커진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의 기준으로 후보자를 걸러 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격 미달인 후보는 절대로 선출하지 말자.

각종 흑색선전을 퍼뜨리는 비방형, 허풍 공약을 남발하는 공약 부실형,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향응 제공형, 각종 전과와

부정 축재를 한 파렴치 형, 지연·학연·혈연으로 표를 구걸하는 연고 의존형 등 소위 선거 오적(五賊)은 선거를 통해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둘째,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를 선출하자.

기업경영에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든 경영방식에서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경영’으로 바뀌고 있듯이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지도자상이 바뀌고 있다. 경제 발전단계에서는 경제·경영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면 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 증가율 등 4가지 지표로 작성된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가 있는데 제2대 지방선거 이후인 1999년과 2001년의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를 비교해 보니 제2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현재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경제적 고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성을 갖춘 단체장과 지역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가치관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자.

가치관이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을 경제 가치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장경제론자와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정부 간섭주의자가 있다. 선거철을 맞아 후보자들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후보자들의 경제 가치관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자신과 경제 가치관이 일치하는 자를 선출하자. 1990년대에는 중도좌파 정부가 유럽을 장악했으나 21세기 들어오면서 좌파가 퇴조하고 우파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음은 우리의 선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세계 13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세계 7대 경제 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데 정치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2002.6.5.)

포스트 월드컵: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난 6월 우리 사회의 화두가 월드컵이었다면 월드컵이 끝난 7월의 화두는 포스트 월드컵이다. 세계 40위였던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고 우리 국민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모든 일에서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도 월드컵의 여진이 남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감격과 흥분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월드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과실을 거두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IMF 구제금융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는 지난 4년 동안 점차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외에서 한국 상품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외국인들도 '오! 필승 코리아'와 '대~한민국' 응원을 유창하게 하는 등 '코리아'라는 국가 이미지는 크게 상승하였다. 기업 브랜드나 국가 이미지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 곳곳에 강력하게 심어주었다. 지식기반경제의 선도산업인 'IT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수출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체력을 강조하고 뛰어난 전술을 구사하여 승리를 끌어낸 히딩크식 지도력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좋은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만들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지를 감독하여 ‘오심’이나 ‘편파 판정’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즉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질 것이다.

둘째, 기업은 원칙에 충실하고 새로운 전략 및 전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충분히 세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도경영’ 즉, ‘정정당당 경영’에 충실해야 하며 인재 등용과 위험관리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전략 및 전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들은 ‘경쟁과 협력’을 잘 수용해야 한다. 태극전사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향상되었고 협력수비를 통해 팀의 조직력이 좋아져서 승리를 끌어낸 것처럼 시장참여자인 개인들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패배자는 승리자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승리자는 패배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도 이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자신감과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출범한 국가 이미지 제고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2002.7.12.)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

경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지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다. 1964년부터 1991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가는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적정 지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는데 전국 땅값의 연평균 증가율이 70년대에는 28.2%였고 80년대에는 13.6%를 기록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지가는 안정기에 들어갔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정책으로 1999년부터 지가가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올해 3/4분기는 그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지가상승률도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으며 최근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말미암아 7대 선도프로젝트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와 지가가 급등하고 있다.

급격한 지가 상승 외에 토지 소유의 편중도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의 땅 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및 자산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 주는 수치로 지니계수가 있는데 이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지니계수는 0.338, 금융자산 0.561, 부동산 0.66인데 비해 토지는 0.849로 극심한 불평등 분배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토지이용과 토지거래는 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토지거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토지거래 빈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높으며 100평 이하의 소형토지보다는 10,000평 이하 중형토지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토지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사람들이 매입하는 비중보다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지가 변동은 지가 상승기에는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크고 지가 하락기에는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역의 토지거래 및 지가는 전국 평균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제주지역의 불안정한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발한 토지거래는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을 준수하여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획일적인 토지정책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 하고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이용은 활성화하고 토지 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냉온탕식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원칙을

준수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 내지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격이 부분별로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들은 지가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버리고 필요한 땅을 필요한 때에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2.12.4.)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

필자는 1999년 6월 29일 본란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소상공인”이란 제하의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난 11월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 글을 쓴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286만 개인데 그중 상시종업원 5인에서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255만 개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153만 명인데 그중 소상공인은 495만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149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수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1,800명으로 도내 전체 종사자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경제활동이 소상공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이 도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어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인데 이들 업종이 전국 평균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업종임을 나타내

며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이 도내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인데 이는 이들 업종이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 창출이 큰 업종임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8%, 1.49%, 1.61%로 전체 평균인 1.26%보다 약간 높은데 이들 세 업종을 합하면 이들이 도내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전국의 64.7%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평균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총투자 규모는 평균 1억 7백만 원, 월평균 매출액은 2천만 원, 월평균 순수익은 38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은 높으나 매출액 대비 순수익 비율은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투자규모는 크나 매출액은 낮았고 순수익 비율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투자규모는 작고 매출액은 낮으나 순수익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풀뿌리가 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해 나가되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원절차 및 심사의 간편화, 신용대출의 정착, 대출금액의 고액화, 대출 기간의 장기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 없이도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며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2.12.28.)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

최근 연체 금액이 30만 원을 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인 개인 신용불량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7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며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3백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가계 부채를 지고 있으며 대출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평균 5,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금을 공제하면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이 2,700만 원 정도이니 가계 부채가 연간소득의 두 배 가까이 되며 일 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소득의 21% 수준이다. 또한 전체 가계 부채 중 현금서비스나 할부구매 등 신용카드 사용이 관련된 부채가 20%에 이르고 있어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촉발된 이러한 현상은 지금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기업 부채로 인해 97년에 경제위기를 맞이했었다면 이제는 가계 부채로 인해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할부 구매를 통해 금

전 관리에 융통성을 가지거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현금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과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채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개인의 신용불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절도, 강도, 도박, 유괴, 위조, 자살, 살인 등 각종 범죄로 발전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신용사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줄이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개인의 신용한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용으로 차입을 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현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은 신용불량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신의 상환 범위 내에서 차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부채상환액과 일시금으로 상환하는 부채를 제외한 부채상환액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부채한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부채총액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순자산의 1/3이 넘지 않아야 하며 빌린 돈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서 자신이 신용카드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신용카드를 선택한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카드로 돌려막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를 가지지 말고 한 회사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아주 높으므로 가능한 한 현금서비스는 이용하지 말며 불가피할 경우 대금 결제일을 잘 따져보고 이용하되 연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연체했을 경우 반드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부채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해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지출을 감소하는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사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상환 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2003.2.5.)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자는 2003년 2월 5일 본란을 통하여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이란 제목으로 신용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반적인 규제 개혁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은 급성장하였다. 2002년 9월 말 현재 카드 발급 수는 1억 370만 매로 1998년에 비해 2.4배, 가맹점 수는 1,052만 점으로 3.1배, 이용액은 491조 원으로 7.7배, 당기순이익은 1조 3,652억 원으로 물경 37.8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1억 장 이상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0조 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거래되는 신용사회에서 26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9%에 이르는 등 신용사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도나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등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현재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사회가 큰 부작용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개인들은 신용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우선 당장 좋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신용거래를 하면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으니, 충동구매를 하게 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용거래는 장래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으로 미리 물건이나 돈을 차용하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신용의 확보 및 유지이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심지어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사는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신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하고, 사고 발생률과 연체율이 올라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더라도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 고수익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카드 발급을 신중하게

하고 카드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사고 발생률,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의 발생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익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에 기초한 영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신용사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영업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셋째, 정부는 시장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 업계의 영업행태를 보면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 관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밝고 건강한 신용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03.3.15.)

내국인면세점의 영향과 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수행할 전담 기구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작년 5월에 설립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24일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하였다.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로 제주도 접근 비용을 인하여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관광기념품점, 공항 내 입주업체, 농수산물 취급점 등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내국인면세점 개점, 동절기 관광 비수기, 도소매업의 계절적 영향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는 하였지만 제주도 관광기념품점들은 내국인 면세점 개점 이후 시기인 1월과 2월 중 평균 30%의 매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미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국인면세점과 향후 추진될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이

필수적임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지역상권도 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내국인면세점, 지역 업계 및 제주도는 상생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내국인면세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쇼핑에 대한 세분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지역 업계와의 간접적인 친화 관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업계와 공동 홍보를 하거나 경영 노하우(know how)를 공유하는 등 지역 업계와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점 이후 3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내국인면세점의 전망이 결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품목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판매자 중심의 사고에서 고객 만족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을 강화하는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독창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고 판로개척과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제주개발센터 수익금의 활용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49조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1차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내국인면세점과 지역 업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상생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업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면세점의 이전·운영 주체의 이전·쇼핑아웃렛과의 연계 등 내국인면세점의 현행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관광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을 지출한 내도 관광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의 도입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3.4.22.)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1년 12월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였고 최근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 보이자, 법인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15%, 연간 소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7% 등 이중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각종 세액감면을 고려한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높고,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관건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세계개혁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 1단계에서는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 인력의 가용성 등 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에 의해 투자 대상국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조세 및 각종 유인

책을 고려하여 최종 투자국을 선정한다. 제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동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불리하고 이들의 법인세율도 각각 16%, 15%, 22%의 단일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 경쟁력 현주소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 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유인책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법인세 및 일부 지방세의 감면 조항을 통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투자유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15% 단일법인세율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세수 감소와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먼저 제주지역의 법인세 수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내외임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7~8억 원에 불과하므로 세수 면에서는 국가 경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선정하였으니 15% 단일법인세율과 같은 정책 수단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부여하는 것은 집중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 투자환경의 안정성이다. 비록 조세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위치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단 세전 수익성 및 사업환경 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므로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과 함께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 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3.6.7.)

사람이 경쟁력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혁신 체제 구축’, ‘지방대 육성’, ‘과학의 지방화’ 등 ‘지역’이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의 70%, 벤처기업의 85%, 연구 개발 투자비의 75%, 연구 개발 인력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는 지역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정부는 획기적인 지역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높이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인재 즉, 사람이다. 흔히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휴먼웨어 즉,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것도 양질의 인적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역 구성 주체들의 지식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식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 아래에 창조, 활용, 학습, 축적, 공유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되는 소위 지식 지역을 구축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반드시 오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도가 이 기회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한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인적자본을 확충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준비된 인재를 발굴하여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기관에서 인명록을 발간하고 있기는 하나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내 전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을 잘 활용하여야 하겠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에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제주 출신의 도외 거주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개별 전문가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인적 네트워킹도 폐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유능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활용하여 창의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량품이 생산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예도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역경쟁력이며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다. 행정당국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8.5.)

인적자본이 핵심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산업연수생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탄(Bhutan)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요소’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부탄은 히말라야산맥 동부에 자리 잡은 국가로서 면적은 남한의 절반 정도이고 인구는 2백만 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38달러로 몹시 가난한 불교국가이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미용, 기념품 제작, 제과 및 제빵 관련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부탄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낙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탄의 처지에서는 그들이 한국의 좋은 기술을 배워 와서 부탄의 산업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코리아’와 ‘제주’라는 이미지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명감(Mission)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가져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Passion)을 가져 인생의 MVP가 돼라.”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람 즉, 인적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듯이 그들이 부탄으로 돌아가서 부탄의 산업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 시대를 거쳐 지식 기반 시대에 진입하였고 부탄은 이제 막 산업 시대에 진입하고 있어 동시대에 존재하는 두 국가가 경제적으로는 다른 시대에서 발전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산업 시대에는 미숙련노동자도 생산요소로서의 가치가 있었다면 지식이 중요한 지식 기반 시대에는 지식 창출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숙련노동자 또는 효율적인 노동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 중 노동과 자본은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투입 요소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의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만, 지식이라는 투입 요소는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증가 속도가 상승하기도 한다. 또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이 전파되면 사회 전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지식은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이용하면 노동, 자본, 기술 등 경제성장의 요인 중 지식의 구체적인 형태인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는데 선진국들은 이 비중이 40%에서 65% 수준에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39%), 중국(38%), 홍콩(32%), 대만(23%)보다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태국(24%)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기술 인력이 창출해 내는 기술 진보의 정도가 한국경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고용불안과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적자본의 축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고하신 S그룹의 L 회장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배워 오는 기술자들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 비행기에 동승시키지 않고 한 명씩 다른 비행기로 귀국시켰다는 일화는 기술과 인적자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 풍조에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하겠다.

(2003.11.17.)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에 덧붙여

제주도는 얼마 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제주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6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계획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경제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산업정책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 규모가 작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극히 취약한 제주도의 경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제1차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이번에 제2차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되었다.

제1차 및 제2차 5개년계획 모두 제주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에 의해 작성되어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제2차 5개년계획은 제1차 5개년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산업별 목표치가 계량적으로 설정되어 제

1차 5개년계획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 기반’과 ‘지역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6대 지식기반산업’의 선정과 ‘5대 발전전략’의 수립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지표의 설정과 투자규모 및 재원 조달은 다소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혁신역량을 결집하면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차후에 개선된다면 제2차 5개년계획은 ‘그림의 떡’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제주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장기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Lucas)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정책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단기계획에 비해 예측력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에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계획의 예측력이 더욱 하락하고 있으므로 제2차 5개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동계획의 수립이나 백서 발행을 통해 매년 계획의 실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도의 산업을 이끌어 갈 ‘6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고도

화를 위한 산업별 중점 추진 과제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이 외에 산업별 중점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확정될 지역 혁신 발전 5개년계획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수립 예정인 하위 발전계획들도 제2차 5개년계획과 연계되어 중복투자를 피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단순한 계획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은 정부실패가 최소화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도민들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제주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4.2.3.)

시간은 흐르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646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 최초로 1만 달러를 넘어섰고 1996년에는 1만 2,197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그 당시 2001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작년의 국민소득이 1996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동안의 7년은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통계로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 버린 셈이다. 우리 제주도의 1인당 소득은 1995년 전국 평균의 92.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전국 평균의 82.9%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제주도는 아직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여 201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는 2011년까지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5.9%를 달성하여 2011년에는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의 96.3%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였고, 46만 청년 실업자, 380만 신용불량자, 국제유가 상승, 고철을 중심으

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혼재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다. 제주도도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추진도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IMF 경제체제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니 2만 달러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최근 전국의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제는 경제에 전념 하자고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을 한 적이 있었고 필자도 서명하였다. 얼마 후 다른 일로 정부 고위 관료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으로부터 “도대체 서명한 학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혹시 서명하신 분이 계시냐?” 라는 말씀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비대칭적이어서 경제가 잘 돌아갈 때보다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일관성 있고, 예측이 가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명했다”라고 서명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시장이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필자가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2만 달러 달성의 목표연도가 다가오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표연도가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중단 없는 노력, 일관성 있는 추진 및 지속적인 개혁만이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위기 이후 성장세를 회복

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N자형과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듯 하나 기초체력(fundamentals)을 회복하지 못하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M자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한국경제와 제주경제는 N자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M자형으로 가느냐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2004.3.30.)

기업이 해결책이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공화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NAPO(No Action Plan Only:계획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부른다고 한다. 외국의 비아냥거림에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날개 없이 추락하여 영원한 이류국가로 남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 역시 2011년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경제 발전 5개년계획, 제주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제주생물산업 기술 발전 10개년계획, 제주도 지역 혁신 발전 5개년계획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은 전문가, 학자, 관료들에 의해서 수립되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의 실행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은 기업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

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업경쟁력은 어떠한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국산 제품의 품목 수가 1994년 82개에서 96년 71개, 98년 64개, 2003년 53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8분의 1, 중국의 1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초우량 세계기업이 7개 정도가 나아야 하는데 현재 S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55점이고 기업가에 대한 호감도는 40점으로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높으니, 기업가로서는 '기업을 경영할 맛'이 날 리 만무하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IMF 경제체제 이전 연평균 18.2%에 달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IMF 경제체제 이후에는 연평균 3.6%로 급감하였고 그나마 신규 투자 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나 보수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친기업 정서와 반기업 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모두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치 창출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만 잘 지키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주)다음이 본사의 제주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IT(정보통신)산업과 BT(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천재일우를 잡은 셈이다. 또한 최근에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니 이를 통해 제주생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 기업이 BT 분야에서도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5.4.)

고부가가치 국제회의를 기대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는 각종 국제회의가 열렸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제주총회가 있었고, 4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관광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 제주총회가 있었으며, 5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금융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제주총회가 열렸었다. 제주도는 이 세 종류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회의 유치로 제주도가 누리는 경제적 효과로는 관광 수입의 직접 효과,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총생산 증대 등 간접효과, 그리고 신문·방송이나 구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홍보효과 등이 있다. 세계 150여 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UNEP 제주총회의 경우 24억 원의 관광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48개국에서 2,145명이 참석한 PAT 제주총회는 90억 원의 관광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61개국에서 3,200여 명이 참석한 ADB 제주총회의 경우 관광 수입 79.3억 원의 직접 효과와 해외직접투자 증가 473억 원, 국내총생산 증가 667억 원의 간접효과 등 총 1,219억 원의 직·간접

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효과 외에도 세계적인 신문·방송을 통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였고, 국제관광 종사자들에게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게 하고 국제투자자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매력을 직접 보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이곳 제주를 ‘와서, 보고, 가서, 알려주는(왕방강 고라주는)’ 6,500여 명의 홍보대사를 확보한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향후 유치하는 국제회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개선책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의에 봉사한 경험이 있고 언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도내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ADB 제주총회의 경우 총소요 인력 중 40%가 유급 고용인력으로 충당되었다. 제주도가 국내 다른 도시와 국제회의 유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도내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 회의 기획사와 회의 장비 임대업자가 도내에 없어 소득 및 고용 창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

셋째는, 외국인들의 소비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쇼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각료급 회의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더욱 높일 기회를 맞고 있다. 제주도와 유관 단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간다면 제주도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04.6.22.)

제주경제의 위기 : 현실인가 과장인가?

최근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주장과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는 양쪽 모두 동의한다.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양극화, 산업간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고용 및 소득 양극화 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단계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제주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추론해 보면 제주경제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수출은 호황이고 내수(소비와 투자)는 불황이라는 수출·내수 양극화는 수출 비중이 극히 낮은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중화학공업, IT산업, 제조업은 호황이고 경공업, 비(非)IT 산업, 서비스업은 불황이라는 산업간 양극화는 제조업의 비중이 아주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 우량기업, 수출기업은 호황이고 중소기업, 비우량기업, 내수기업은 불황이라는 기업 간 양극화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중심인 제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임

시직과 일용직 등 비상용근로자 비중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나타나는 임금구조의 양극화는 비상용근로자의 비율과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생산, 소비, 투자, 무역 및 고용 등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중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를 살펴보면 전국은 2003년 1월부터 경기가 다시 나빠져 8월에 저점을 통과한 후 미미하지만,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경기가 다시 나빠져 지난 5월까지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6월에야 약간 반전의 기미를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의 82.9% 수준에 머무는 제주도민의 1인당 소득은 2003년 기준과 2004년 기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주경제는 성장잠재력의 저하로 역동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현실을 철저히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간다면 새로이 도래한 지식 기반 시대는 제주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시대는 생산요소의 증대에 따라 생산량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이므로 제주도가 다른 시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식 기반 시대는 수확 불변 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대이므로 제주도가 혁신역량을 잘 갖추면

다른 시도를 빨리 따라잡거나 추월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지식 기반 시대에 제주도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수립된 제주경제살리기 추진 대책에서도 좋은 단기대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언론, 기업 등 제주의 혁신 주체들이 지역 경제에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2004.8.12.)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릴 시간

우리나라는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2,197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으나 2003년에 12,646불을 달성함으로써 소위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을 보냈다. 제주지역의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9년 1.2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02년에는 0.94%를 기록함으로써 제주경제는 ‘잃어버린 14년’의 시간을 보냈고, 2004년 현재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특히, 현재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주도하고 있는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계획(’04~’08년),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제1차 제주지역 혁신 발전 5개년계획(’04~’08년), 국가 발전전략이면서 제주발전의 그랜드 디자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02~’11년) 등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제주경제 규모는 전국의 1.1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1989년 수준을 회복까지 앞으로 잃어버릴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14년’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잃어버릴 α 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과 같이 협소한 국내시장과 열악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작지만 강한 나라’ 즉,

강소국(強小國)을 벤치마킹하여 ‘작지만 강한 제주(small but strong Jeju)’를 건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소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 산업 육성, 분업과 협업으로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제주에 잘 적용하여 ‘작지만 강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국내의 기업들의 본사나 사업본부를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행정·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의 원천이므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 상공회의소, 언론,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도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잘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잘 못하는 기업은 과감한 제재를 가하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도가 오랜 고민 끝에 집중과 선택의 원리에 따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 농업 생명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선택하였으니 관광산업 및 친환경 농업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강·뷰티 생물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지

식 기반 시대 제주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산·학·연·관·민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의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제주’를 건설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정책결정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vision provider), 기업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market creator),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specialized supplier)을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해 갈 때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04.10.2.)

MVP and Network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다가 필자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영어로만 표현한 것에 대해 우선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MVP란 운동경기에서 최우수선수(Most Valuable Player)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Mission(사명), Vision(비전), Passion(열정)의 머리글자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2005년 제주경제의 화두는 ‘자생력 강화’이다.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국내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왔다. 또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여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왔는데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6~2003년 기간 중 연평균 2.81%로 증가하여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1.29%p 낮게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2004년 하반기 이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분명히 인식한 후 사명감(Mission)을 가지고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진 대책을 충실하게 집행해 가면 자생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비전(Vision)

으로, 지금까지 열정(Passion)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 대책으로 선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제주의 중소기업을 강소(強小)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대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자의 MVP만으로는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각 경제주체의 협력 즉, 산·학·관·민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작년 9월 2박 3일 일정으로 도내 재래시장 변영희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도외 우수 재래시장 비교 연수를 가진 적이 있었다. 필자도 거기에 참석하여 부산 평화시장, 안동 풍산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성남 모란시장, 서울 면목 재래시장이나 우림시장 등을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밤샘하며 토론한 적도 있었다. 비교 연수를 통해 필자가 내린 결론이 MVP and Network였다. 성공한 시장들의 공통점은 상인은 상인대로 MVP(Mission, Vision, Passion)로 무장하고 있었고, 공무원들도 MVP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인과 공무원이 Network를 형성하여 협력함으로써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부산 평화시장은 변영희의 추진력이 강력했고, 성남 모란시장은 상인회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회원의 단합이 특징이었으며, 서울 면목시장은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상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안동 풍산시장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

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울 우림시장은 민·관의 분업 및 협업이 잘 되어 있었고 상인 변영희 임원들과 공무원 사이에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람이 해결책이다. 제주도 당국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업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그리고 도민들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수행해 갈 때 제주경제의 자생력은 강화될 것이다.

(2005.2.8.)

중소(中小)기업을 강소(強小)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03년 현재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아직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10년의 장기 불황을 이겨낸 일본의 경우나 아시아 외환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하는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며, 급격한 경기변동을 조절해 주는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94.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크며 특히, 제주도의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고 모두 중소 제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가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하며,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 CEO들은 기업가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이다.

강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뛰어난 기술력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강소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유물을 파면서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하며, 스피드와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고, 시장 지향적인 독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제주도에도 감귤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고수익을 올리는 영농조합, 선박 엔진·발전기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연 17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제주의 선인장으로 비누를 개발하여 연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 제주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를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팔고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제주의 중소기업들이 이들 강소기업을 벤치마킹하면 차별화된 생존 및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베풀어야 한다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 중견기업이 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이 되어야겠다는 기업가정신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을 객관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의 전 영역에서 제주지역의 향토적인 소재로 가장 제주답지만,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주 명품을 만드는 강소기업들이 속속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력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은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 및 신용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생산과 고용 창출의 근원이며, 부가가치의 창출자이며, 신성장 엔진의 발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실행하는 경제주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5.2.)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1,695개의 시장과 23만 개의 점포에 30만 명의 상인이 영업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상설시장 19개소에 점포 수 2,628개, 정기시장 9개소에 점포 수는 2,39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재래시장의 빈 점포율은 17.7%에 달하고 있고 등록된 재래시장의 매출은 2002년 15조 원에서 2003년에는 13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몇 가지 원칙 아래에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인데 모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선택하여 전문화된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분업과 협업’의 원칙인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과 상인이 해야 할 일을 분리함과 동시에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평가와 차별’의 원칙인데 추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체(subject),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 및 운영체제(Mechanism) 등 4가지를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본 ser-M 모델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란 인적요소인데 상인, 상인연합회나 담당 공무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인들은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여 환불이나 반품 등의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며, 상인연합회는 이익단체라는 의식에서 더욱 성숙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혁신 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정책시혜자의 의식에서 동반자 관계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이란 지역 특성, 기본자원 등의 부존자원인데 제주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택배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연 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외 판매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매장을 관광지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족한 기본자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 개선 사업 외에 업종별 군집화, 깔끔한 진열 및 청결, 간판의 규격화 및 업종별 구분화 등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원이란 기술, 협력 등 창출 자원인데 재래시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서비스 능력, 상품기획 등에서 뒤떨어지므로 점포 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상거래질서, 상품 진열 등에 대한 교

육 강화가 필요하며, 공동상표개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창고 이용 등의 공동마케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란 주체, 환경, 자원 등을 결합하는 능력인데 재래
시장 관계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재래시장 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카드 수수료를 조정, 장기 저리용자 지원, 산업용 전
기요금 적용 등 재래시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
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내 몇몇 재래시장은 제주지역의 인구 및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로써 지금은 경기침체로 다소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안 해결과 시장경영지원이 이루어지면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2005.6.30.)

8.31 부동산 종합대책 따라잡기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가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의 부족으로 임기응변식, 대중요법, 단기 미봉책 등의 꼬리표를 달았었고 참여정부 들어 발표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은 2%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근본적이며,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택 대책은 보유 단계-양도 단계-거래 단계별로, 토지 대책은 취득 단계-개발단계-보유 단계-양도단계별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으면 국민의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자금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국내총생산(GDP)의 1.9배와 2.8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8배나 되는데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있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촉발한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거품이 형

성되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거품을, 시장을 통해서 제거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여 제거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개입하되 일부 시장의 원리를 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가 세금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저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과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실질 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1%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국민이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을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점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 부처가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개인에서 세대별로 합산하고, 투기지역의 담보대출 건수를 줄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것은 정책 공조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행자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52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13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있으며,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전국적으로는 1만 4823세대(제주의 경우 204세대)에 달하고 있고, 총

세 대의 1%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법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정부는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였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보완하여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불패, 대책 필패’를 ‘부동산 필패, 대책 불패’로 바꾸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5.9.3.)

Go! Jeju

필자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며칠 전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Remember the Titan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시사하는 바가 컸다. 실화에 근거한 이 영화는 백인들만 다니던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T.C. Williams 고교에 흑인이 등교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갈등, 특히 백인과 흑인이 섞여서 한 팀이 되게 된 미식 축구 부가 겪게 되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선수들, 부모들, 코치들, 코치의 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한국 사회나 제주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해결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 보았다.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연평균 6.9%의 경제 성장을 통하여 2004년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고, 1953년 6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 4,162달러로 세계 30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해왔다. 한국경제가 그동안 불균형 성장, 압축 성장, 요소 투입

형 성장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선진국들은 소위 ‘마의 만 달러 시기’를 경험하면서도 평균적으로 9년 만에 2만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아르헨티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개도국들은 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추락하였고 우리나라는 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잃어버린 8년’을 보내고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6월에 국회의원들과 민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연구결과인 G10 in Y10(앞으로 10년(Y10)인 2015년까지 선진 10개국(G10)에 진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이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제주지역 경제는 감귤과 관광을 양대 축으로 빠른 성장을 하여 제주지역의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에는 1.2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개방과 경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0.93%를 기록함으로써 제주경제는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64년 제주도 건설 종합계획이 최초로 실시되고 이후 5~6개의 발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국가 발전전략이면서 제주발전의 그랜드 디자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흘러갔지만, 구

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실험의 대상일 수도 있고 제주도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번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Remember the Titan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자. 그리고 행정 계층구조 개편, 의료·교육·노동 시장개방, 해군기지 건설, 쇼핑아웃렛 건설 등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자. Go! Jeju(제주도민, 파이팅).

(2005.10.25.)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명과 암(1)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FDI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78년부터 대외 개방이 본격화된 1998년까지 20년간 제주지역의 FDI는 대부분 제주 출신 재일 사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광, 감귤, 금융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1977년부터 중국계 자본도입이 본격화된 2008년 이전 연도인 2007년까지 제주에 도착한 FDI는 총 1억 달러, 연평균 4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2년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에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했지만, 초기에 유치 성과가 미미하다가 2008년 말레이시아 자본이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마감된 2011년까지 총 2억 2,400백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제주에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FDI가 본격적으로 유입은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

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중국계 자본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관심을 촉발되었고, 신화역사공원이 착공을 한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2013~2018년 3/4분기 중 34억 8,400만 달러(약 3조 9,349억 원)가 유입되어 1997년 이후 도착액 38억 8,100만 달러(약 4조, 3,833억 원)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우회투자까지 포함하면 중국, 홍콩 등 중국 자본이 85%인 33억 달러(약 3조 7,271억 원)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16억 6천만 달러로 제주지역 전체 FDI의 42.8% 차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이 14억 달러로 36.1%를 차지하여 숙박·음식업 및 부동산업이 전체 FDI의 78.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자본은 관광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고, 총사업비 및 도착액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영주권 제도를 통한 부동산 분양 등 개발 위주 투자라는 특징으로 인해 그동안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자본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자본의 제주지역으로의 이동은 중국과 제주 모두에게 반드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동으로 인한 중국 및 제주 총생산의 증가를 중국이 독점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제주 는 오히려 손실을 줄 수도 있다. 중국 자본 유입이 제주의 소득, 투자수익률,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의 기능적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제주의 노동이 완전고용 하에 있는가 아니면 대량 실업하에 있는가 등 제주의 노동력 부존 여건과 중국 자본

이 기술혁신·시장 확대·규모 경제·산업구조 고도화 등 개발효과를 수반하는가 아니면 기존 자본과 동질적인가 등 자본도입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주지역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상황이라 중국 자본 유입이 ‘일자리 질’을 제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자본의 투자가 숙박·음식 및 부동산 등 2개 산업에 집중되고 있어 관광산업의 시장 확대 및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에는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으나 관광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바지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자본을 포함한 FDI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세밀한 투자유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2019.3.26.)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명과 암(2)

2002년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되었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FDI 유치를 통해 고용 및 총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3차에 걸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1차는 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이 지정되었고, 2차는 2008년에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지정되었으며, 3차는 2013년에 충북, 동해안권이 지정되었다. 2008~2017년 중 지역별 FDI(도착액 기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6개 시도의 평균은 4.8%인데 제주는 48.4%로 가장 높았고 울산(30.8%), 충남(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에 FDI의 크기(2017년 기준)를 비교해 보면 16개 시도의 평균은 0.9%인데 제주는 5.63%로 가장 높았고 서울(1.88%), 충북(1.47%)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FDI, 고용률 및 지역내총생산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2002년 전후로 비교해 보면 FDI는 2000~2002년 연평균 2백만 달러에서 2003년~2017년 연평균 2억 3,900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고용률은 출범 이후 연평균 68.0%로 출범 전 66.7%에 비해 1.3%p 증가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은 출범 이후 연평균 4.0% 증가로 출범 전 7.2%에 비해 3.2%p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순수하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으로 인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DI 유치를 통해 지역의 고용 및 총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다시 FDI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FDI와 고용률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내총생산은 고용률 및 FDI 증대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수도권 지역 대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역 대 시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역지역보다는 시도 지역에서 더 크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과 같은 비수도권 시도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에 FDI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제주의 FDI 유치 전략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큰 변화를

하고 있다. FDI 내용과 관계없이 FDI 자체가 필요했던 시기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FDI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환경보호, 투자 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 등 제주 투자 3가지 원칙에 따라 FDI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투자, 클러스터 및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투자를 통해 FDI 유치→고용 증대→지역총생산 증대→FDI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FDI 유치정책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FDI 유치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FDI 유치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소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9.6.12.)

한일청구권협정 보상금 따라잡기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진 어느 교수님께서 1965년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불한 보상금이 당시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하여 “그렇게 많나요?”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셨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도 사실(fact)을 확인해 줄 수 없어 난처함을 경험한 바 있어 보상금 규모와 현재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당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먼저,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항에 1965년 당시 1,080억 일본 엔으로 환산되는 3억 달러의 생산물 및 용역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고, 720억 일본 엔으로 환산되는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당시 가치로 10년에 걸쳐 3억 달러의 무상 제공 및 2억 달러의 저리 차관 제공이니 1년 단위로 계산하면 3천만 달러의 무상 제공 및 2천만 달러의 저리 차관 제공이다.

다음으로 3분의 1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해 보니 5억 달러의 무상 제공 및 저리 차관 제공이 당시 일본 외화보유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보상금의 당시 규모는 어느 정도였

으며 현재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3억 달러인지 5억 달러인지, 보상금을 외화보유액과 비교해야 하는지 정부예산과 비교해야 하는지 등 몇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억 달러의 저리 차관은 금리 연 3.5%에 7년 거치 13년 상환이었으니 무상이 아니므로 보상금은 3억 달러이며 이것을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제공하므로 보상금은 연 3천만 달러이다. 경제변수는 일정 기간 측정되는 유량 변수와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변수가 있는데 1년 보상금 3천만 달러는 유량(flow) 변수이고 외화보유액은 저량(stock) 변수이므로 이 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무상 제공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량 변수인 정부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1965년 3천만 달러는 108억 엔이었고 당시 환율(1달러에 266.4원)로 계산하면 원화로는 79억 9,200만 원이었다. 보상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미국 3.87%, 일본 2.71%, 한국 7.01%이다. 1965년 3천만 달러의 물가상승률(연평균 3.87%)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2억 4,180만 달러이고, 108억 엔의 물가상승률(연평균 2.71%)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469억 8,000만 엔이며, 79억 9,200만 원의 물가상승률(연평균 7.01%)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3,317억 4,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상금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1965년 일본의 보상금 108억 엔은 1965년 일본

정부예산 3조 6,580억 엔의 0.3%, 즉 330분의 1에 해당하고, 보상금의 현재가치 469억 8,000만 엔은 2019년 일본 정부예산 101조 5,000억 엔의 0.05%에 해당한다. 1965년 일본의 보상금 79억 9,200만 원은 1965년 우리나라 정부예산 848억 원의 9.4%에 해당하고, 보상금의 현재가치 3,317억 4,000만 원은 2019년 우리나라 정부예산 469조 6,000억 원의 0.07%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를 요약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보상금 연 3천만 달러는 1965년 108억 엔 또는 79억 9,200만 원으로 당시 일본 정부예산의 0.3%,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9.4%에 해당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면 469억 8,000만 엔 또는 3,317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일본 정부예산의 0.0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9.8.29.)

4차 산업혁명시대, 쌀농사가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한다. 2월 12일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박사는 예측 모델로 분석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2월 중하순에 최고조에 달하고, 3월 완만한 하강 추세를 이어가다 4월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월 13일 국내 물리학자인 김범준 교수는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2월 말에서 3월 초에 추가 확산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물론 현재의 확산 추세와 확산 방지 노력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 모형으로 확진자 수를 예측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니 예측이 적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성적 판단과 정량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적 판단에 따르면 제주 방문 내도객이 줄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또한 코로나19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경제적 손실은 작아질 것이나 중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스 때인 2003년의 4%에서 16%로 증가했고, 중국인 해외여행자 수는 2,000만 명에서 1억 5,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경제적 손실은 커질 것이다.

정량적 판단은 모형에 의한 판단과 빅데이터에 의한 판단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속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증요법인 단기대책보다는 사태 종료 이후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할 때 유용하다. 후자의 경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속보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 지출 등 일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만을 파악한다는 단점이 있어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대책보다는 대증요법인 단기대책을 수립할 때 유용하다.

최근 제주도 빅데이터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용카드사 빅데이터를 적용해 업체의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언론보도 이후 전년 동기과 비교해 도 전체로는 7.3%가 하락했고, 제주시 7.6%, 서귀포시 2.7% 하락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면세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대형 종합소매업, 편의점, 호텔과 여관업, 선물용품 소매업 등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대표성의 한계는 있으나 향후 보완을 통해 코로나19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하면서 업종별로 맞춤형 단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bigdata-based policy)이 도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는 3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1차산

업과 관광산업에서 선도자(first mover)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으나 다른 지자체의 치열한 추격에 직면해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범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으며, 각종 테스트 베드(test bed) 사업으로 그 분야의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문자 그대로 테스트로 끝나고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며, 배터리를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하듯이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쌀이라고 한다.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빅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2019년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카카오맵에서 ‘조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좋은 품종으로 명품 쌀을 생산하고 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 제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빅데이터의 수집→저장→처리→분석→스마트 서비스 제공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가 빅데이터에서 명실상부한 선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2.18.)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간 나라도 있고, 긴 터널의 마지막 출구에 다다른 나라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는 지금 준전시 상황에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전례 없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정책 혼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 및 피해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과 실업수당 인상 등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긴급 수혈을 하는 실정이다. 물론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경제를 희생시킨 이후 회복시키는 순차적 접근보다는 희생시키면서 회복시키는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에 충격이 올 때 충격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충격반응력이라 하고 충격을 받은 후 원상으로 회복되는 정도(속도)를 충격회복력이라고 한다. 충격 회복의 속도에 따라 경제회복세의 패턴은 빠른 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V자형,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U자형,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L자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세 패턴은 L자형처럼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U자형보다는 회복에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나이키 로고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제주경제의 고용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회복 속도도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반응력은 작고 충격회복력은 커서 충격을 덜 받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 패턴이 금융위기 이후 패턴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제주경제의 충격회복력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순차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동시적이면서 차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제주경제의 충격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충격반응력을 최소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되 시점 간 자원배분을 최적화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경제의 충격회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동시적·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도의 ‘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즉, SMART 대책이 마련되고, 도정은 이러한 대책들을 도내 지역혁신기관들의 역량 결집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 사업의 초기 재정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공동체

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주민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한 제주경제의 충격반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주의 강점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구성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제주 고유의 자산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을 정책 설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대한민국은 행동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한 NATO(No Action, Talk Only) 국가, 행동은 안 하고 계획만 있는 NAPO(No Action, Plan Only) 국가라는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다. 10여 년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캠퍼스에 저명인사의 경구를 기록해 바닥을 밟고 지나가면서 ‘실천이 말보다 낫다(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는 경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었고 그 이후 이 말은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이 말보다 낫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5.12.)

Triple Golds :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요소

20세기는 블랙골드(Black Gold)로 대변되는 석유 경쟁 시대였고,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나 제주에 블랙골드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제주의 흑우, 흑돼지, 흑보리, 검은콩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블랙골드’를 만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블루골드(Blue Gold)로 대변되는 물 경쟁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블루골드는 1999년 캐나다의 National Post지가 처음 사용한 명칭으로 20세기는 블랙골드로 불린 석유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자원이었지만 21세기는 블루골드 즉, 물 자원의 존재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블루골드 시대는 제주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주 지하수는 청정지역의 화산암 대수층에 부존하고 있고, 우수한 수질과 다양한 조성을 하고 있어 제주의 가장 경쟁력 높은 자원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에는 바닷물이 현무암층을 뚫고 육지 지하로 들어온 국내 유일의 물 자원인 용암해수가 있다. 염지하수로 분류되는 용암해수는 계속 만들어지는 물이므로 매장량은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항산화 효과, 피부 개선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제주가 용암해수를 산업화한 지 15년이 되었고 용암해수단지에 현재 20여 개의 기업이 100여 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 용암해수와 대비되는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있는 하와이가 해양심층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1974년에 하와이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NELHA)를 설립하고 하와이 해양과학 기술단지(HOST Park)를 조성하여 현재 45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용암해수단지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조류 중 홍조류로 분류되는 우뚝가사리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모로코가 자국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여 전 세계 우뚝가사리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현상에 돈이 되는 홍조류라는 의미로 레드골드(Red Gold)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해조류와 미세조류 등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량의 생물자원 즉, 바이오매스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와 고부가가치 소재 및 물질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유지하는 블루혁명(Blue Revolution)이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지구환경문제의 조절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중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제약산업은 해조류의 기능성 물질을 원천으로 하여 개발, 생산되고 있어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조류가 산업 신소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조류는 바이오매스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 생육하고 있는 753종의 해조류와 제주도 연안에 생육하고 있는 522종의 해조류 중 홍조류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특이한 종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해조류 서식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해조류의 서식 상태도 제주도가 가장 양호하고, 해조 생산량도 월등히 많으며, 감태의 대량 서식지는 제주가 거의 유일하고, 우뚝가사리의 경우 국내 최대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국내 해조류 중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가장 적합한 화학적 특성이 있고, 모로코산과 비교해 볼 때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겔 강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다.

유네스코 3관왕(Triple Crowns)을 달성함으로써 제주가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국내외에 크게 알려졌는데, 블랙골드, 블루골드, 레드골드 등 세 개의 골드(Triple Golds)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제주를 ‘신소재의 보물섬’으로 국내외에 크게 알리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제주 화장품산업을 맨땅에서 일구어낸 제주인의 진취적인 도전성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20.9.29.)

제주형 중소기업생태계 구축의 2021년

2020년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제주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21년은 세계경제, 한국경제, 제주경제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고 경제 회복→경제 활성화→경제재편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형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은 사업체 수(전국 99.92%, 제주 99.97%), 종사자 수(전국 83.06%, 제주 95.05%), 매출액(전국 48.49%, 제주 79.2%) 모두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실정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민간 부문과 합의를 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데 구심체 역할을 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는 기존의 상생협력에서 대기업은 비용 최소화에 중소기업은 파

이의 공정한 배분에 초점을 둬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비용 최소화를 통한 이익 최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여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생태계 기반의 상생협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생태계란 생산자와 그의 경쟁자,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상호 경쟁하고 공생하며 발전하는 역동적인 경제공동체를 말하는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는 기업생태계,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도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여 안착한 IT 기업과 화장품산업에서 제주산 원료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Company to Company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생태계 기반 상생협력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인적자원, 금융, 서비스, 지식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원활한 흐름이므로 지식의 흐름을 막는 장벽들을 낮추어야 하고 다양한 지식이 조직 내외로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가지고,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기술 및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개방 협력(open innovation)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강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인 미텔슈탄트의 성공 요인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점진적 혁신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틈새시장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맞추기 위한 내부 혁신역량의 지속적 발전 등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기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낮은 창업 선호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콘텐츠 부족, 신용보증 및 은행대출 이용의 제한, 지원기관 간 중복 업무, 지자체 중심의 생태계 조성 등을 들고 있다. 2021년이 독일의 미텔슈탄트를 벤치마킹하되 제주 고유의 문제, 지리·문화적 특성, 경제 상황 등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통해 제주지역에 최적화된 제주형 중소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1.1.11.)

산업구조와 경제회복

한국경제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사스(2003년 3월), 금융위기(2008년 9월), 메르스(2015년 5월), 코로나19(2020년 1월) 등 2번의 경제위기와 3번의 감염병 위기를 5~6년 주기로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 경제는 살아 있는 동물과 같다고 하니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위기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하니 5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제주경제는 강한 경제라고 자위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든 그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경제가 위기를 거치면서도 오늘까지 온 것은 제주경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조정 능력 때문이라면 자기조정 능력 결정요인들을 잘 파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기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 이전의 제주경제 성장경로로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경제회복력(Economic Resilience)

이라고 하는데 경제회복력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충격 때문에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어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을 충격반응력이라고 하는데, 충격에 대한 경제의 맷집으로 볼 수 있으며, 저점에서 반등하여 확장 국면을 거치면서 충격 이전 성장경로로 회복하는 과정을 충격회복력이라고 하는데 회복 속도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경제회복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 비중이 소수의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산업구조 다양화라고 하는데 이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반응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질적 발전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하는데 이는 충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기 전년도인 2007년부터 코로나19 전년도인 2019년까지 즉,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산업비 중이 감소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5.3%P), 교육서비스업(-1.7%P),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P) 등이고,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3.6%P), 사업서비스업(2.8%P),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2%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관광관련 산업의 비중은 1.0%P 감소하여 제주의 2대 산업으로 불리던 1차산업과 관광관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

가 될 수도 있다.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측정하는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가 작을수록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주지역 허핀달 지수는 2007년 0.0798에서 2013년 0.0818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0.0771로 낮아져 제주지역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다양화를 잘 유지한다면 향후 충격이 올 경우 충격을 작게 받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개발비, 인적자본, 지역 혁신 지원 기구 등 지역 혁신역량의 증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져오므로, 기존산업들을 일정한 규모를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진 제주 산업들로 발전시켜 나가면 충격회복력이 향상돼서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는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준비하는 (가칭)제주경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경제위기 발생→충격반응→충격회복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1.6.2.)

아라생활 32.5년:
제주대 신문

목 차

I. 제주대 신문 355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993.3.16.) 357
- One Year After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1994.10.1.) 359
- The Korean Economy: Hard crash or soft landing(1996.9.26.) 364
- 경제학 도서 추천(1997.9.22.) 370
- 나의 학문 나의 연구(1997.11.10.) 373
-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기관의 미래(1999.9.21.) ... 376
- 디지털경제로 세계 경제를 꿈꾼다(2001.5.8.) 381
- 세계대학 기행-아이오와주립대학-(2001.9.4.) 386
- 신입생 유치 성공 방안(2001.11.6.) 389
- 34대 총학생회에 바란다(2002.3.19.) 392
- 학생 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바란다(2002.10.1.) ... 395
- 학우들이 원하는 선거공약(2002.11.9.) 398
-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2003.5.28.) ... 401
- 교육 경쟁력 확보 시급(2003.9.17.) 404
- 취업대란, 그래도 희망은 있다(2004.2.21.) 407
- 제37차 ADB 연차총회의 의의 및 평가(2004.5.19.) ... 410

- 교수회 활동에 거는 기대(2004.11.3.) 414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바라며(2005.2.23.) 417
- 제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2005.9.14.) ... 420
- 한 권의 책-이야기 경제학교실-(2009.10.14.) ... 425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출구전략의 시사점(2010.12.1.) ... 428
-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2017.3.8.) ... 433
-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2019.5.15.) 439
- 제4차 산업혁명과 제주 중소기업생태계 조성(2019.9.11.) ... 445

II. 경제학보 451

- 경제학과 식구 뒀을 고하며(1993년 경제학보 제6호) ... 453
-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Economists
(1993년 경제학보 제6호) 461
- The Seven Principles of Highly Effective Life
(1998년 경제학보 제11호) 471
- 경제학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480
(2001년 경제학보 제12호)
- 미래를 꿈꾸며(경제학과지 슬메) 483
- 경제학의 부흥을 꿈꾸며(경제학과지 슬메) 486



제주대 신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지 고민하다가 20세기가 낳은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교육가인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추천하기로 했다.

먼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도덕성(심지어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많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이때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니이버는 이 책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양극단을 전제하고 이 양자를 종합하여 개인적 도덕과 사회적 도덕이 양립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소위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니이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나 일단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사회나 국가-은 비도덕적 경향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집단이나 국가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감행한다는 것이다. 니이버는 1932년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그동안의 시대변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의 비도덕적 경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사용자 집단, 노동자 집단, 정부의

각 부처 등)이기주의의 형태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가 내 집단사회에서만 아니라 국가 이기주의로도 표출됐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분야에서도 EC(유럽공동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 국가나 사회집단의 비도덕성은 개인의 윤리적 기준(이성)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므로 폭력이나 비폭력적인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후자가 전자보다 분명히 낫다) 이러한 해결책은 또 다른 집단의 비도덕성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결부돼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혁은 ‘국민적 정서’라는 명분만으로 사회의 비도덕성이 수정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993.3.16.)

One Year After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Background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reafter called real nam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form of Emergency Presidential Order.

The main feature of the real name system was to prohibit the use of pseudonyms in all financial transactions. Discussion on the real name system dates back to 1983, but it was finally and suddenly implemented on August 12, 1993.

In my personal view, the two main aims were to reduce “social friction costs” which can be defined as the unnecessary costs in social and economic life. This is equivalent to saying to increase in “economic efficiency”. Another aim was to realize so called “economic justice”.

Impacts

The real name system wa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whole economy. The overall impacts was large enough but not as enormous as expected. Severe capital flight to the real estate market or abroad and financial chaos in the stock market and speculative boom in real estate did not occur even though some kinds of 'credit crunch' bothere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Let us examine the impact of the real name system on each economic sector in turn. In regard to the stock market, stock price fell in first two days but rebounded thereafter. The stock price increased 39.5% during the last year. In the financial market, the long-term interest rate, measured by corporate bond rate, rose temporarily in August but fell from September 1.1% point after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system. Call rate, a representative of short-term interest rate, showed a steady decrease.

Enforcement of the real name system had the greatest shock on the private loan (curb) market. This in turn cause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o suffer from 'credit crunch' which can be defined as a squeeze in financial transactions.

In regard to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economic growth and the inflation rate, the impact seems to be slim on the real growth rate while that on the inflation rate appears to be troublesome.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records 8.5% (5.6% in 1993) in the first half of 1994 and consumer prices increased 6.0% during 1994, which is so bad.

Evaluation

It is too early to evaluat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al name system but let me discuss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new system so far. The positive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it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lean politics” by making money flow transparent. It rooted out the black money which had traded under the table between some dirty politicians and businessmen. Second, it cultivated environments so that firms need only concentrate on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rather than lobbying politicians. Finally it dispelled the socially old and bad habits in financial transactions that people use pseudonyms and borrowed names. In sum, i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The negative effect is not so serious as expected but the most obvious effect appeared on the financial status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ey greatly suffered from the freeze or squeeze in the private loan market and thus the bankruptcy rate of them continues to rise. Another negative effect is the over-consumption phenomenon of households. Some people who are afraid of their transactions being disclosed showed cash hoarding and it boosted consumption expenditure.

Future Issues

The real name system has not settled down completely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for the system to succeed. First of all, a tax system on capital gains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which is now scheduled to be enforced from 1996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t will root out borrowed name accounts. Most pseudonym accounts converted to real name but a huge number of borrowed name accounts still exist. Second, money in the curb market should be absorbed into financial institutions so that it can ease the credit crunch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ird, government should trace out the existing non-receipt transactions in the traditional market. The final but not the least issue to be solved is that every possible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tle down the credit society which

payment and settlement of account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personal checks and credit cards.

Now we have adopted a new 'rule of game' and we have to try our best for the success of the real name system. The new system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the Korean economic advancement.

(1994.10.1)

The Korean Economy: Hard crash or soft landing

Overview

The Korean economy has accomplished a remarkable performance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For example, per capita measured by GDP (Gross Domestic Product) increased from \$70 in 1954 to \$10,163 in 1995. In spite of poor initial conditions - such as scarcity of natural resources, small domestic market and low savings - for economic development Korea is going to become a member of OECD which is a symbol of an advanced country.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entrepreneurship and able government officers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s of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ondensed growth, unbalanced growth and extensive growth. The condensed growth means that economic development was achieved within short period relative to advanced countries by omission of the adjusting proces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unbalanced growth means that most efforts such as government policy and finance support were invested

into particular economic sectors such as heavy and chemical industry rather than light industries. The extensive growth means that the economic growth was accomplished by input of hardware such as physical resource, labor and capital rather than productivity progress.

Current status: Hard crash or soft landing

As a result, the Korean economy has shown the bright and gloomy side. The bright side of the Korean economy was described as ‘Miracle of the Han river’ while the gloomy side was depicted as ‘A paper tiger.’ According to <Table 1> Korea experienced high economic growth accompanied by high inflation rate. This so-called ‘a stylized fact’ in the Korean economy has been changed since 1992 because of government’s policy changes represented as microeconomic structural adjustment and macroeconomic stability policies. At that turning point, someone claimed that our economy is in a state of hard crash while others asserted that we are in a state of soft landing. That debate is resurrecting recently.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nomy? It is very useful to take a close look at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real economic growth, inflation rate and current account

deficit so that we may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nomy. In regard to macroeconomic variables in <Table 1> the Korean economy does not appear to be troublesome except current account. But this does not imply that our economy does not have any problems. What is the problem with our economy? We can list lots of problems. In short, it could be summarized as ‘high cost, low efficiency structure.’ High wages, high land rent and high interest rates are big obstacles for Korean economy to make a sustained growth.

<Table 1> Major Economic Variables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st half)
real GNP growth rate(%)	9.6	9.1	5.0	5.8	8.4	8.7	7.2
inflation rate(%)	8.6	9.3	6.2	4.8	6.2	4.5	5.0
current account deficit (thousand of million US dollars)	-21.8	-87.3	-45.3	3.8	-45.2	-88.2	-88.3

Twin reform

The new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types of economic reformation program such as real-name system for financial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ax system on capital gains and liberalization of foreign and financial market. These institutional reformations aimed

at curing the problem with our economy and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It is too early to evaluate merits and demerits of these reformation programs. But we have some bad news. Despite of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real-name system, the so-called ‘private’ money market has been diversifying and expanding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Korea ranked 24th among 48 countries in 1995 and 28th among 46 countries in 1996 according to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published b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The reason that our economy has yet to have a strong shape is not the lack of good institutional reformation programs but the absence of accompanying economic agents’ willingness to accomplish them. The completion of these two reforms, I call it ‘a twin reform’, will guarantee the rose-colored future of our economy.

New paradigm

Korea will be one of the G-7 countrie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by 2020 according to a report of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In addition, the quality of life is also expected to be as good as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vision of the Korean economy is hardly expected to be achieved unless the current paradigm is changed. Now we need to adopt 'a new paradigm' in order not only to survive but also to make an advancement. Then what shape of the new paradigm should be. Let me stress three points. First, the policy of economic growth should be converted from condensed, unbalanced and extensive growth to steady, balanced and intensive growth. Second, the economic policy should be designed not to control the short-term performance but to bring up potentiality of the long-term growth. Third, economic agents must be faithful to their duties: Consumers should keep rational consumption, business person must stick to seek innovation while government officers have to establish 'rules of game'. It may take a long time for this new paradigm to take an effect. At this point it will be very useful to ponder what A. Blinder, a professor of Princeton university, said: 'No technical problems stand between us and the hard-headed but soft-hearted policies that can make our economy work better. We need only the will to find the way.' Thus we, all economic agents, have to endure in finding the way for the success settlement of the new paradigm. The success of the new paradigm will guarantee the

positive-sum game and thus shed a great light on the 21st century of the Korean Economy.

(1996.9.26.)

우리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한 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냈다
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연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제학 도서 추천

사회과학이 사회현상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경제학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경제에 대한 이해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부론』

(애덤 스미스 저,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했다고 하여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의 저서 『국부론』은 주류경제학이든 비주류경제학이든 모든 경제학의 사상적,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의 매력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 설명력인데 이 책은 경제학의 체계를 세우려는 스미스의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타당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국가별 상식들도 가득 차 있어 교양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nking Economically』

(Maurice Levi 저, Basic Books)*

우리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책은 경제

원리가 어떻게 논리적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경제학이 개인 및 국가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학문임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미시적·거시적·개방적 사고 등 경제학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로 훈련된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읽으면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저, 이승환 역, 김영사)**

현존하는 경제학자들과의 대담을 엮어 놓은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경제학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역사상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일생과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통해 현대 경제 원리를 설명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도 이미 백여 년 전에 죽은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오늘날 경제행위를 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유동민 편역, 비봉출판사)***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하는데 이 두 책은 그러한 점에서 큰 도

움을 줄 것이다. 먼저 전자는 애덤 스미스 이후 Keynes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학 발달사를 잘 요약하고 있으며 Keynes 이후 현대경제학의 조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사상, 이론, 정책적 제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후자는 경제학의 전문성과 대중성, 정치경제학과 근대경제학의 사상을 잘 조화시키고 있어 오늘날 경제학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계경제전쟁』

(레스터 씨로우 저, 이근창 역, 고려원)*

관리무역의 경제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WTO 체제가 치열하게 경쟁할 21세기는 한국경제에 큰 위험과 기회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 :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도 읽을 수 있음

** : 경제학개론 정도의 지식으로 읽을 수 있음

*** : 경제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읽을 수 있음

(1997.9.22.)

나의 학문 나의 연구

나는 중학교 시절부터 학문의 길을 가야 하겠다고 결심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나의 전공 분야는 경제학 중에서 거시계량이다. 내가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분배 문제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이었고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거시계량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1학년 때 경제원론을 배우면서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에 큰 매력을 느꼈으나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로 혼돈을 겪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제이론이 어느 정도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 지를 검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경제학 방법론에 해당되는 과목들인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미국 유학 시절에도 나는 통계학과와 경제학과를 오가며 통계학의 여러 과목과 경제학 중에서는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Robert Lucas 교수의 “고립된 경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논문 주제를 정하고 경제변동 분야의 「경기순환의 부문적 분석: 총체적 충격과 부문 충격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를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각 부문 간의 교역을 통한 연결고리가 경기순환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외생적 충격이 경기순환을 가져오는 지를 다 부문 모형을 통해 밝히고 그 중요성을 측정하였다.

1993년 제주대학교에 오면서 나의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지속되었다. 첫째는 나의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분석의 틀을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일이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나의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산업분석의 틀을 개방경제로 확대시켰는데 세계경제의 각 부문을 국가와 산업으로 나누어 국가별-산업별 경기변동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아시아 경기변동의 원인과 전파과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 발표하였다. 또한 지역별-산업별 경기변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자료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분석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분석의 틀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이었다. 분석의 틀을 더욱 세밀하게 만들어 충격의 원인을 밝히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정태적 인자모형을 동태적 인자모형으로 바꾸어 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셋째는 나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이었다. 먼저 충격의 장기지속성을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일부분모형을 이용한 충격의 장기지속성 측정은 연구결과를 얻어 이미 발표하였고 다부분모형을 이용한 충격의 장기지속성 측정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역의 경제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는 과제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가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경제학자로서 학문에 대해서 내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균형감각이다. 경제학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규범경제학과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실증경제학이 있다. Alfred Marshall 이 경제학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강조한 것 중 냉철한 머리(cool head)는 객관적인 분석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학의 실증적인 면을, 따뜻한 가슴(warm heart)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내포된 경제학의 규범적인 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다. 경제학자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의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진리를 굽혀서 세상에 영합하는(曲學阿世)’ 사람들도 많이 있다. 경제이론과 실증이 배제된 정책, 정치 논리가 우선되는 정책들은 경제학을 음울한 학문(dismal science)으로 만들뿐이다. 셋째는 열린 연구이다. 어떤 사람의 연구를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 저널들은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논문들이 우리 주위에 공개되고 있다. 나도 열린 연구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의 논문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

(1997.11.10.)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 기관의 미래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은 개방화 및 자유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 천 년을 목전에 두고 정보화와 지방화의 환경변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또한 금융환경도 급변하여 세계 각국은 금융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 1986년 영국의 대처 정권은 ‘빅뱅(Big Bang)’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하였고 미국도 ‘미국판 빅뱅’으로 금융개혁에 성공하였으며 일본도 ‘일본판 빅뱅’을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금융재편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날로 하락하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46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1997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업종 간 진입장벽 해제와 규제완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빅뱅’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제1차 빅뱅’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여 5개 은행이 되

출당하였고 1998년 1년 동안 41개의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퇴출당하였다. 더구나 퇴출당한 5개 은행 중 지방은행이 4개나 되고, 퇴출당한 16개 증금사 중 지방증금사가 12개나 되며, 구조조정 대상이 된 2개 투자신탁회사가 모두 지방 투자신탁회사이며 퇴출당한 4개 생명보험회사 중 지방 생명보험회사가 3개나 되는 등 지역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퇴출당하였다. 제주지역도 한 개의 지방은행이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고 두 개의 지역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안전지대는 될 수 없었다. 한편,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기관의 여·수신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98년 1년 동안 수신은 급증하고 여신은 심하게 감소하였으며, 서울지역의 수신은 급증하고 지방의 수신은 많이 감소하였고, 예금은행의 수신은 급증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의 수신은 많이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 금융기관의 퇴출과 지역금융의 상대적 위축으로 인해 지역의 실물경제가 위축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가계 등 지역의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구조조정과 은행·증권·보험 분야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재편 등 '제2차 빅뱅'이 예상된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금융기관의 수가 많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현황 파악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경영 실사에 따른 인허가 취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동시에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은행권 역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16개인 은행이 10~12개 정도로 감소하고 선도은행, 2선 은행, 지방은행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은 대형 증권사와 전문증권사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2차 빅뱅’과 함께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 대한 원금보장이 축소되는 2001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금융기관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큰 도전 속에서 지역경제의 혈관인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지역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응전해야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생존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개방화라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국내로 밀려오면서 증대되고 있는 시장리스크·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전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전문화된 인력,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으로 국제금융센터가 제주도에 설립되면 국제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독자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

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거나 외주(outsourcing)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점을 근거로 한 시스템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전자은행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 거래에 드는 비용이 지점을 이용하면 1.07달러이지만 PC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각각 0.21달러와 0.01달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전자 은행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기반이 취약한 금융기관들이 전자 은행을 통해 지역 고객을 공략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율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경영을 선진화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유동성·수익성·자산 건전성·재무 위험성 등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경영, 도덕성·책임감·수익성을 추구하는 가치경영 등 경영에 있어서 혁신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화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

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내 대형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자금을 공급해 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간접금융을 하는 은행 중심에서 직접금융을 담당하는 시장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지방은행들의 주거래고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므로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개인 고객과의 관계도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이제는 고객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량 고객에게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1999.9.21.)

디지털경제로 세계 경제를 꿈꾼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화두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이다. 디지털경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용하여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네트워크경제(network economy), 지식기반경제(knowledge economy) 등이 디지털경제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유사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또한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와 구분하여 디지털경제를 신경제(new economy)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경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라고도 한다.

그러면 디지털경제가 기존경제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디지털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과 소비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 많게는 전자산업의 경우처럼 30~35%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철강의 경우처럼 5~6%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지리적 공간의 벽이 무너지면서 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들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정보와 지식은 어디든지 빨리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에서는 최신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대신에 공장과 유통망 없이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미국경제가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과 장기 호황을 동시에 지속하면서 기존 수요 중심의 경제이론을 뒤집은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디지털경제(신경제)에 관한 관심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벤처 열풍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주축으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고성장-저물가라는 디지털경제의 과실을 수확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630만 명, 인터넷 호스트 수는 460,974개, 도메인 수는 159,252개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현재 0.09%로 선진국 및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조사업체인 메탈그룹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 중 38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뒤지는 수준이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실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별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

세계 각국들은 정보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의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간전산망을 1992년에 이미 완성하였고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하부구조의 건설과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적 하부구조의 건설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디지털경제에 적합하게 법과 제도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늦은 점이 있지만 다행이다. 또한 인적자본의 확충에도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지식인 양성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디지털형 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수익모형의 개발에 힘써야 하고 지식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나스닥시장에서 닷컴 기업(아마존, 아메리칸 온라인 등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닷컴 기업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노(勞)와 사(使)가 대립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노사가 지식공동체라는 상생(相生)의 개념에 바탕을 둔 경영 즉, 소위 지식경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 중심인 on-line 기업과 제조업 중심인 off-line 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이 디지털경제라는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기존 패러다임만을 고수하고서는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on-line 기업 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on-line기업과 off-line 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mutually beneficial)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개인들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으로 변신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 가치의 기준이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철저한 성과급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일자리도 평생 일자리의 개념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탄력적인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1.5.8.)

세계대학 기행

- 아이오와주립대학 -

필자는 아이오와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 ISU, www.iastate.edu)에서 5년 반 동안 유학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교환교수로 방문한 적이 있다.

ISU는 1862년에 제정된 모릴법(Morrill Act)에 의해 land grant(연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땅)를 받아 그것을 기초로 설립된 11개 대학 중의 하나로서 ISU는 1868년에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9개 단과대학, 1개 학부, 59개 학과에 학부생 22,481명, 대학원생 4,364명이 재학하고 있고, 교수 1,779명, 기술 및 사무직원 4,4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동문의 수는 18만 4천 명에 이르고 연간 예산은 6억 9천만 달러(약 8,880억 원)에 달한다.

ISU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에임스(Ames)에 자리 잡고 있는데 캠퍼스는 220만 평(제주대학이 23만 평임)에 달하여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캠퍼스도 아름다워 미국의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25개 안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은 226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캠퍼스 외에도 ISU는 1,200만 평에 달하는 농장 부지 등을 보유하여 연구, 실습 및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ISU는 설립 때부터 마련된 대학 교육의 대중화, 실용 학문의 교육 및 연구, 지역사회와의 지식공유라는 세 가지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ISU는 아이오와주가 미국의 대표적인 농촌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학문 분야를 특성화하는 전략을 취해 온 결과 농대에 속한 대부분의 학과와 농업경제학, 소비자 경제학, 통계학, 화학, 생화학, 수의학 등이 전국적으로 상위 10위 내에 드는 학문 분야이다. 또한 ISU는 1990년 초부터 아이오와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옥수수와 콩을 주원료로 하는 생명공학(Bio-Technology:BT)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결과 지금 에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BT단지가 되었으며 산·학·연을 연결하는 연구 및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지역총생산과 고용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SU의 자랑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경제학과에 있는 CARD라는 연구소는 미국대학에 소속된 농업경제연구소 중에서 가장 큰 연구소이며, 두 명의 교수에 의해 1937년부터 1942년까지 개발된 ABC라는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이며, 1971년 대학원생에 의해 개발된 팩시밀리 관련 기술로 인해 팩시밀리가 팔릴 때마다 ISU는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1942년부터 1954년에 걸쳐 건설된 기숙사는 최근까지 세계 최대의 단일 기숙사 건물로 기록되었으며, 1922년부터 시작된 VEISHEA라는 대학 축제는 미국의 대학 축제 중 최대의 축제로 기록되고 있다.

최근 ISU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대학발전 기

금의 모금인데 1996년에 1억 6천만 달러(약 2,080억 원)였던
발전 기금이 2000년 현재 4억 7천만 달러(약 6,000억 원)로
급증하였다.

(2001.9.4.)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불계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
워- 이런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 이런 나의 마음을

워- 이런 나의 마음을

신입생 유치 성공 방안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신입생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미 이름이 알려진 대학의 경우에는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신입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여 지방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비 면에서 사립대학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는 지방의 국·공립대학마저도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수도권 대학에 많이 빼앗기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의 경우 우수한 대학원생들의 부족으로 연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에도 이미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대학도 있으며, 우리 대학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입학정원을 채우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신입생들의 수학능력 저하 현상은 몇 년 전부터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먼저 우수 신입생 유치 문제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재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신입생 유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 문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다. 취업이 잘 되면 우수한 신입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우수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취업도 잘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제의 연결고리가 바로 우수한 교육이라는 점이 때때로 간과되고 있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 교육환경의 개선, 철저한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우수 신입생 유치에서 취업으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신입생 유치 전술이 필요하다. 대학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신입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를 대학에 적용한 UI(University Identity)를 통해 대학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방송매체나 메일을 통하여 고교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도 하고, 해외연수나 유학의 조건으로 우수 신입생을 유혹하기도 한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작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 캠퍼스 견학의 상시 운영, 우수 고교생들의 하기 계절수업 청강 등도 장·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나열식으로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고교생들을 여러 가지 특성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집단의 성향을 잘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방법들의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이미 홍보 담당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2001.11.6.)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 하세요
후회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 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34대 총학생회에 바란다

예전 같았으면 신학기를 맞아 이미 출범해야 했을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 참가율 미달로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34대 총학생회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자율적인 총학생회가 없었지만 1984년 이후 부활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과 동구가 붕괴하는 등 사회적 변화와 폭력을 동반한 극단적인 투쟁 방법으로 인해 학생운동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와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취업 준비로 인해 학생활동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등 총학생회의 활동이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한 시대의 지성과 이성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학생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대학이 문을 연 지 50년이 되는 올해 학생활동을 주도해 나갈 34대 총학생회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총학생회에 바라는바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학생들을 잘 섬기는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란다.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책임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리인이다. 선거유세 때에는 이러한 점을 내세우지만 당선이 되면 학생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뀐다. 투쟁의 시대에는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였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는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도덕성을 갖춘 투명한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총학생회의 예산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가진 상대적인 강점은 순수함과 패기이다.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기성 대세를 비판할 자격을 이미 잃은 것이다. 총학생회가 건전한 비판 세력과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과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소속감 결여로 학생들의 총학생회 행사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과거 총학생회의 주요 관심사였던 학외 문제만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의 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회라는 원칙에 충실한 34대 총학생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2.3.19.)

학생 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바란다

다수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인 장치인 대의 정치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내에는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책임을 위임받은 자치 기구들이 많이 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회(流會)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학부제 시행과 취업이 그 원인이지는 않지만 개인주의적 성향과 정치적 냉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 자치 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학은 이론과 원칙을 실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진출한 이후 현실과 타협할망정(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학에서는 이론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의자(代意者)들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여 학생 자치 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학생 자치 기구의 위원들은 학생들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기업경영, 행정 등 많은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충실하지 못한 대리인의 행동인 소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임이 가능한 경우 임기가 다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리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일 년 단임인 학생 자치 기구의 위원이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의뢰인의 고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 시절의 좋은 경험들은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밑거름임을 기억하고 의뢰인을 잘 섬겨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대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 자치 기구의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의뢰인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건의 내용을 본인이 완전히 숙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 기구의 회의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석하여 수렴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회의에서 결정된 과실만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의식은 버려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방법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위원들을 독려하여 면대면(面對面)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의사결정의 경우 온라인 회의를 통한다거나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 서면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참여 정치를 확산시키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대표하는 대의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mission)를 열정(passion)을 가지고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비전(vision)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02.10.1.)

학우들이 원하는 선거공약

총학생회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유권자에 대한 언약(公約)이 거짓 약속(空約)이 되는 것은 기성세대의 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 연임이 가능한 선거에서는 다음 선거 때 공약의 이행여부가 평가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약의 선정에 신중할 수 있지만 단임으로 끝나는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그러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선거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거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을 선정할 때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평가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후보자들을 통해서 붓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공약을 보면 도대체 어떠한 재원으로 그러한 일들을 추진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가는 공약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총학생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고 학교 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학생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욕심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로 공약을 발굴하기를 바란다.

둘째, 장·단기 공약을 균형 있게 제시하기를 바란다.

임기 내에 이루어 낼 단기적인 공약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도 역시 중요하다. 과거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단기 공약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하게 시키거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장기 공약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단기 공약은 임기 내에 실천하고 장기 공약은 임기 내에 추진된 부분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차기 총학생회에 인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개민주주의의 확산과 학부제 시행으로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공약의 재탕으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통일, 창업, 취업, 어학, 정보화, 문화 등의 기본적인 수요 외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조사

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넷째, 총학생회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총학생회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총학생회 사업의 추진 내용 등이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학생회 대학생들 간의 쌍방향 의사 교환이 활성화되는 공약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공약을 얼마나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모든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2002.11.9.)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

우리 대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발전을 하였으며 작년 개교기념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학 당국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보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상상해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금 우리는 사회 모든 면에서 디지털 사회, 지식기반사회, 지방분권 시대 등으로 표현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학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대학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계획의 수립-실행-평가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다시 한번 시대의 변화와 우리 대학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실행되며, 평가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관광, 통상, 금융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 있어서는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연구는 지적 유희를 위한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인문 사회계열의 연구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포함해야 하고 자연계열의 연구는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학이 이미 특성화로 선택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제주지역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의 연구는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전으로 사업화되어 지역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봉사에 있어서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력을 활

성화하기 위한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방분권을 통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되 우리 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성화 분야에 관련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은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비전 공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교수와 학생들은 각자 맡겨진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여 대학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창조자의 역할을 하며, 직원들은 각종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하여 향후 우리 대학교가 동북아시아, 환태평양,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3.5.28.)

교육 경쟁력 확보 시급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니다.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대학 진학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학의 정원 미충원율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와 취업 기회의 축소로 휴학이 증가하고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입학지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지속적인 확대로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및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면 그동안 세계의 변방에 머물렀던 제주도가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대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대학이 제주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취해야 할 전략은

교육 경쟁력의 확보이다. 지식의 창조, 학습, 축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 기반 시대를 맞아 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조 및 축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대학 주체들의 현재 역량들을 고려해 볼 때 지식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관광, 통상, 금융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화되어야 한다.

판에 박힌 교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현장에 응용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습, 과제물(mini project) 수행, 과제물의 발표(presentation), 새로운 평가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

히, 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 우리 대학교 전산정보원이 유치한 e-learning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당국은 교육의 하부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준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낮추고 이와 동시에 강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3.9.17.)

취업대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 청년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실망 실업 상태에 있거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다. ‘육이오’,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 등 연령과 고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조어 중 이십 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취업 전망은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반도체나 전자 등 IT 업종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10대 산업들은 고성장 산업이기는 하나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고용 창출의 주도자인 기업들도 인력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취업대란 속에서도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몇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란다.

둘째,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변화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취업전선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업이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일에 대한 개념도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좋은 근무조건, 높은 보수 등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취업 재수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평생직업으로 삼을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선 취업하고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 보다 좋은 직장을 찾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회는 반드시 오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사람의 일생에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온다고들 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번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기회를 잡은 자도 있을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아 기회를 놓친 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이다. 올해의 취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2004.2.21.)

제37차 ADB 연차총회의 의의 및 평가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렸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고 경제성장, 지역적 협력, 사회개발, 인력자원개발, 환경보호,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ADB는 1966년에 31개의 회원국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72억 달러의 자본금에 6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부상함에 따라 ADB는 세계은행단(WBG),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ADB는 일본의 도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금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있는데 ADB의 창립 회원이며 출자 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70년 제4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34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2004 ADB 제주총회’는 그동안 제주에서 열렸던 다른 국제 행사들과는 달리 재정경제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제주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4 ADB 제주총회’에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 및 투자은행,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UN 산하 기구, 국제미디어, NGO 등 70개국에서 3,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각국 회의 및 세미나, 문화행사 및 리셉션, 도내 외 관광 등 특별프로그램 및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아시아 지역내 저개발국 지원에 쓰이는 아시아개발기금(ADF)이 대거 확충되었고, ‘지식 협력사업 신탁기금’, ‘e-Asia 신탁기금’ 등의 신설이 제안되었고,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외환위기를 대비한 국가 간 통화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14일에는 ‘한국 및 아시아에서의 역동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날 세미나’가 개최되어 6개 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 특히, ‘동북아 경제 중심 실천 전략 축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란 주제도 발표가 되어 세계의 투자가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 ADB 제주총회’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관광 수입 79.3억 원의 직접 효과와 해외직접투자 증가 473억 원, 국내 총생산 증가 667억 원의 간접효과 등 총 1,2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량적인 효과 외에 세계적인 신문·방송을 통하여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였고, 국제 투자가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매력을 직접 보게 했

으며, 무엇보다도 이곳 제주를 ‘와서, 보고, 가서, 알려주는(왕방강 고라주는)’ 3,300여 명의 홍보대사를 확보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제주총회와 4월에 ‘관광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번에 ‘2004 ADB 제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외인지도 제고, 도민들에 대한 세계화 마인드 교육의 기회, 국제회의 최적지로서의 제주 이미지 홍보 및 위상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회의에 봉사한 경험이 있고 언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도내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총소요 인력 1,178명 중 477명이 유급 고용인력으로 충당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둘째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도내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외국인들의 소비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쇼핑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각료급 회의가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더욱 높일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 제주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극복하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우리에게 파랑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5.19.)

교수회 활동에 거는 기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대학의 교수회가 드디어 출범하였다. 옥동자를 낳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출발이며 향후 교수회의 활동에 따라 큰 발전이 기대되기도 한다. 지금 대학사회는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즉,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방화·분권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대학교는 NURI 사업과 IT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앞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첫 발을 내디딘 초대 교수회가 명실상부한 기구로서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교수회에 바라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는, 교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교수회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수회의 최종목표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학의 민

주화가 많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개선책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교수회가 바로 서면 우리 대학교가 바로 설 것이고, 우리 대학교가 바로 서면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학내의 여러 기구들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란다. 먼저 교내 행정당국, 직장협의회, 학생회 등과 갈등관계를 만들기 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주)다음 제주지사의 교내 유치가 실패로 끝난 사례에서 보듯이 교내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또한 타 대학의 교수회 등과도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교수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켜 교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수들은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개인주의 및 냉소주의가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교수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교수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회 산하의 5개 위원회가 교수들의 참여의 장이 되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대 교수회 교수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公約)이

공약(公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는 심정으로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기를 거듭 바란다.

(2004.11.3.)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바라며

올해도 예외 없이 캠퍼스는 새내기들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아직 청소년 티를 채 벗지 못했지만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새내기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청춘이 부럽기도 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에서 매 5km마다 lap time(도중 時計)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된다. 새내기들은 그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 현재 그들의 모습이 결정되었고, 대학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 그들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내기들에게 대학시절은 더 이상 낭만의 시기가 아니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년이라는 한정된 대학시절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첫째,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병역문제, 자녀문제, 투기문제, 부정

부패 등으로 낙마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새내기 여러분도 대학시절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지킬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사는 연습을 하기 바란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존경할 만한 인생의 선배들과 많은 대화를하기를 바란다.

둘째, 뚜렷한 목표를 가지기를 바란다.

슈바이처 박사는 30세까지 공부하고 30세 이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21세에 세웠다고 한다. 경제적인 부를 이룬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확실해야 한다.

셋째, 학문을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란다.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답을 구하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항상 새로운 사고를 하며, 깊고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분야에서 배우는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여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특히, 평소에 외국어를 습득하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넷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속한 학과나 학부를 사랑하며 여러분이 재학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제주대학교가 현재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대학이며 특히, 교육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성실히 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눈을 좀더 높이 뜨고 멀리 보아 대학졸업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는 다가오고 있으며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자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濟州大學校 經濟學科 姜起春)

(2005.3.23.)

제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1.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0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3%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2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2%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전국 평균 대비 수준은 1995년 90.2%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다가 2002년 이후 반등하여 2003년 현재 전국 평균의 8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감골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명목성장률의 변동성은 8.15%로 전국보다 1.7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6.23%로 전국보다 0.7%P 낮으나 실질성장률의 변동성은

6.42%로 전국보다 1.5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인다.

한편, 제주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명목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96%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RD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1.28%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경제의 특징은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규모의 영세성,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게 나는 불안정한 경제성장,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는 역동성 상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산업고도화 방안

산업고도화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데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산업구조고도화 방안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중장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으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기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기업이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의 원천이므로 기업이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주국

제자유도시종합계획('02~'11),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08),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04~'08) 등 각종 중장기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계획의 실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강화 방안으로는 국내 민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복권 수익금의 활용도 제고, 지역혁신 체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중장기계획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3~75%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내 민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연 800억 원에 달하는 복권 수익금이 공익성, 상징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활용되어 제주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업과 협업'으로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네트워크인 지역혁신 체제가 활성화되어 제주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고도화 방안으로는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잃어버린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제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BT 산업, IT 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제주도는 “작지만 강한 세계 속의 제주(small but strong Jeju)”를 건설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오랜 연구의 결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이 선정되었으니, 관광산업 및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뷰티 생물산업 및 디지털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 및 ‘분산과 균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혁신 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 중앙 설득 논리로써 ‘분산과 균형’의 대외적 전략과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대내적 전략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세계속의 제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정책결정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vision provider), 기업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market creator),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specialized supplier)을,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위기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N자형과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듯하나 기초체력(fundamentals)을 회복하지 못하고 날개 없이 추락하는 M자형으로 분류된다. 지금 제주경제는 N자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M자형으로 가느냐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역량에 달려 있다.

(2005.9.14.)

한 권의 책

- 이야기 경제학교실 -

존 갈브레이스(John K. Galbraith)라는 저명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그룹은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경제학이 경제학자에게조차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니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경제학이 얼마나 따분하고 어려울 것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야기 경제학교실』(이웅 역, 한울, 1994)을 추천하는데 이 책은 모리스 리바이(Maurice D. Levi) 교수가 1985년에 쓴 『THINKING ECONOMICALLY : How Economic Principle Can Contribute to Clear Thinking』을 번역한 책이다.

경제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 생산, 교환 활동을 다루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어렵고 따분한 학문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가 수학, 도형, 모형 등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복잡한 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일상적인 언

어로 설명하고 있어 복잡함과 따분함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학 개념 및 이론을 먼저 설명한 후 실례를 드는 반면에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일 부딪히는 다양한 예를 먼저 설명한 후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일반인들이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얻은 결론과 경제전문가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여 얻은 결론을 비교함으로써 경제학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경제학의 한계에 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이 만능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미시경제학의 논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수요에 대한 사고, 미래에 대한 사고, 효율적 사고, 생산적 사고, 균형 잡힌 사고, 시험적 사고, 기회를 고려하는 사고, 이기적 사고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3부에서는 거시경제학의 논리에 관해 설명하면서 명확한 사고, 순환논법, 빠른 사고, 체감적 사고, 합리적 사고, 효과적 사고 등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국제경제학의 논리인 열린 사고와 경제학적 사고의 한계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인기가 부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학생이 경제학을 안정된 직장과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경제학의 법칙들이 에이즈 문제, 비

만, 테러 등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때
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
는 것은 조리법(recipe)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집에 요리책 한두 권 비치해 놓고 조리법을 배우
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경제학적인 사
고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비치해 놓고 참고하면 매우 유
용할 것이다.

(2009.10.1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출구전략의 시사점

2008년 9월 16일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보호 신청으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기순환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니라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역시 정상적인 경기대책이 아니라 파산과 실업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었다.

각국은 경제정책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확장적 통화정책의 경우 각국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G3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또한 각국은 재정수지가 악화와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한국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 국내은행의 외화 조달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 외화 유동성 및 원화 유동성도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고,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한국은행은 긴급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단기간에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2008년 10월 5.25%→2009년 2월 2.0%), 원화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민간신용 위축 방어를 위한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 지원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 실물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였는데 그 결과 2009년 4월 이후 환율은 안정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채권시장의 불안이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각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특히, 금융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물경기 급락세가 억제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되어 갔지만 각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및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들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버블 형성,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2009년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출구전략이란 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한 각종 비상조치, 예외적인 정책을 해제하여, 정상시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2009년 1월 미국 연방준비은행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성명서에서 “연방준비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와 구성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의 과다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 버블 및 금융위기를 재연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상승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주요국들은 우선적으로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최초로 시도한 국가는 이스라엘로 2009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였고,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2009년 10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하였다. 한편, G20 국가 중 출구전략을 시도한 국가는 호주와 인도인데 호주는 2008년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인 2009년 10월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0.25%p 인상하였고, 인도는 2009년 10월 일종의 정책금리인 법정 유동성비율(SLR)을 24%에서 25%로 1%p 인상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회사 유동성 공급이나 단기 신용시장 지원 등의 통화정책은 대폭 축소하였으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동성 흡수, 금리 인상, 모기지 담보자산 매각 등의 점진적인 절차를 통해 출구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있으며, 중국은 가파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통화공급을 조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자 국내에서도

2009년 7월부터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일어나 외화 및 원화의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책을 종료하였으며, 2010년 7월 한국은행은 1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0.25%p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이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물가 불안에 대응하고, 그동안 금리 인상을 막았던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인한 원화 가치 절상에 대한 부담감이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주요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신흥국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 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구전략의 최적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출구전략을 시행해 가면서도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물가 상승 압력이 경기 과열 및 유동성 과열과 같은 수요측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출구전략의 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 감소 및 국제 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출구전략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목표 간 조화를 고려하되 필요할 경우 정책의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회복 패턴 및 주요국의 출구전략 움직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산 가격 버블 방지와 내수 회복이라는 정책목표 간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어려우면 정책의 우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후 출구전략의 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Lucas 교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주변적일 뿐, 민간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출구전략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조치를 철회하는 출구전략을 실시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12.1.)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문제제기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인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1)을 수립한 이래 많은 종합개발계획과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계의 보물섬인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함에 따라 제주의 자연가치를 보전하고 관광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관광 진흥 또는 환경보전 관련 목적세 도입은 중앙 정부 차원 또는 제주도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인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관광자원 및 환경오염 유발 요인 세원화 방안 등이 검토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제한적 과세권’ 도입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안’이 검토된 바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관광 진흥을 위한 측면과 환경보전을 위한 측면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1년 제2차 제주

도 종합개발계획에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 신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동년 12월 31일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무산되었고, 동 법에서는 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관광 진흥 기여금을 도입하였다. 관광 진흥 기여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2002년 4월에 폐지되었다. 또한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2012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인 ‘환경자산 보전협력금’ 부과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철회되었고, 2013년 (가칭)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에서 환경 복원 및 환경 수용 능력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입법 문제의 애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1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관광세 신설이 논의된 이후 25년 시간이 지나갔으나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자인 관광객의 자세저항과 공급자인 관광업계의 반발 등을 들 수 있다.

외국 사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와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특정 지역에만 부과하는 경우와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첫째,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도쿄도의 숙박세,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Hotel Room Tax(숙박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의 Environmental Management Charge(환경관리부담금), 일본 교토시의 고도보전 협력세, 일본 다자이후시의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일본 후지가와구치코정의 유어세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몬테네그로의 Eco Tax(환경세), 스페인 발레아레스주의 Eco Tax(숙박세), 인도 케랄라주의 Entry Tax(입도세), 몰디브의 Green Tax(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안 평가

제주의 관광 진흥 또는 환경보전 재원 마련을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목적세 관련 제도는 과세 대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세금 부과가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제도로는 관광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들 수 있고, 세금 부과가 소비자(관광객)의 부담이 되는 제도로는 관광호텔 숙박세, (구) 관광진흥기여금, 환경기여금,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들 수 있다. (가

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제주의 탐방 예약제 시행 지역(한라산, 성산일출봉)이나 세계자연유산 지역(만장굴, 거문오름) 등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방법과 제주 전 지역에 부과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7가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도, 제도적 용이성, 조세 저항도, 도민 만족도, 관광객 만족도 등 5가지 평가기준으로 평가해 본 결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특정 지역),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도 전역), 환경기여금, 관광세, (구)관광진흥기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호텔 숙박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입 방안

대안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특정 지역)을 먼저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이후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도 전역)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는 道, 도의회, 도내외 전문가로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을 2016년 7월에 구성하여 워크숍 및 토론회 2회, 소위원회 4회, 전체회의 6회 등 회의를 하고 2017년 1월 18일 행정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워킹그룹은 세계자연유산 지구 등 특정 지역의 입장료(관람료) 도입 및 현실화 추진과 함께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적정수준의 입장료(관람료) 인상도 권고했다. 그리고 추가 검토로 관광객 대상 제도 도입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 입장료(관람료) 및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용도 명확, 관광객 및 주민 설득 논리 개발, 공영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입장료 단계적 현실화, 입장료(관람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기금 개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맺는말

제주가 그동안 논의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와 관계없이 부담금에 해당한다. 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 →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 →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법제처 법안심사 → 국무회의 →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도 전역에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도민들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도내 관광업계도 과거와 달리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정해 주셨고, 최근 제주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므로 동 제도의 도입 환경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특정 지역)이 당초 염두에 두었던 아이디어대로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의 입장료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한라산의 입장료를 신설하여 조달된 재정으로 위 지역의 환경보전 및 복원 용도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인 관광객을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확실한 논리들을 준비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3.8.)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

문제제기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에서 시작되어 5포(3포+집,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를 거쳐 N까지 즉,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세대로 확장된 청년세대의 문제이다. 필자도 청년의 때를 보냈고, 현재 청년인 두 딸의 아버지이고, 지난 27년 동안 대학에서 청년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실업으로 인해 자기 발전이나 학습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는 개인의 문제이다. 또한 실업이 존재하면 인적자본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 문제이다. 한편, 청년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의 부조화 및 사회불안이 증대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도입하였는데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올해에는 중앙정부도 1,582억 원의 예산으로 만 18세~34세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하였고 제주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에서 총 3,800억 원을 청년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 청년정책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이다. 전국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1.95%에서 2018년 20.52%로 1.43%p 하락하였고, 제주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87%에서 2018년 18.88%로 0.99%p 하락하여 제주의 청년인구 변화는 전국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주의 경우 2011년까지는 제주로 전입하는 청년인구에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청년인구의 차이인 제주 청년 순이동인구가 마이너스였으나, 2012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되어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순이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8년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전출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 훈련 기회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3.8%에서 2019년 1/4분기 4.5%로 상승하였고, 제주 실업률은 2015

년 2/4분기 2.4%에서 2019년 1/4분기 2.6%로 상승하여, 제주 실업률은 전국 실업률보다 1.1%P~2.5%P 낮게 나타났다. 전국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9.9%에서 2019년 1/4분기 9.7%로 다소 하락하였고, 제주 청년실업률은 2015년 2/4분기 8.1%에서 2019년 1/4분기 5.9%로 하락하여, 제주 청년실업률은 전국 청년실업률보다 1.6%P~6.1%P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 실업률의 변동성은 0.36%로 전국 실업률의 변동성 0.44%보다 0.08%P 낮게 나타났고, 제주 청년실업률의 변동성은 1.27%로 전국 청년실업률의 변동성 0.95%보다 1.32%P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및 제주 모두 청년실업률의 변동성이 실업률의 변동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의회에서는 2016년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도정에서는 2016년 7월 청년정책 담당과 일자리정책 담당을 신설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제주청년 종합실태 조사를 하고 「제주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고, 2018년 4월에는 「2018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2019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이러한 청년정책에 따라 추진된 과제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소득, 자립, 청년 참여·활동, 문화·여가 등 4개 분야 61개 과제에 총 356억 3천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4개 분야 98개 과제에 총 592

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에서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90억 3천5백만 원에 달한다.

기금 설치 필요성

지금까지 여러 부서·기관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개별적 추진하여 유사·중복·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도정에서는 청년정책 담당관이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26개 부서 소관 98개 사업 총 593억 원에 달하는 청년 관련 사업 및 예산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청년정책 예산은 청년 활동,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비 등 다양하고,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청년정책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 담당관의 정책적 수단으로 기금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관리 방법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한 방법이 있다. 일반회계는 조세 등 일반 세입으로 일반 지출을 수행하는 기본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이 가능하다. 2019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

치된 기금은 지역 개발기금 등 23개에 총 9,311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

기금은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가능한데 예산 수립, 재원 조성, 지출의 자율성 및 탄력성이 있고, 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의 양(저량) 및 변동(유량)을 통해 연속적인 기금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금 간 재원 이동이 제한되어 ‘칸막이식 재정 운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금 설치 방안

청년정책 관련 사업 추진의 융통성(flex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의 설치는 지방 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가능하며, 동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 민간인 출연, 부담금, 기금 운용수익, 기타 수입, 지방채 등으로 할 수 있는데, 동 기금의 성격은 자체 기금, 사업 관리기금, 청년 지원, 직접/위탁 관리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 영광군과 충남 서천군이 청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영광군의 경우 2017년 6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60억 원 조성을 예상한다. 서천군은 2018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5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맺는말

청년 문제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칭)제주청년지원기금이 설치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성과 평가가 쉽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금 수혜 청년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 지원 내용 이력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제주청년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기금설치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주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지렛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9.5.15.)

제4차 산업혁명과 제주 중소기업생태계 조성

제4차 산업혁명이란

지금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준비와 실행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1차 산업혁명(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2차 산업혁명(전기 동력으로 대량생산 혁명),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 혁명)이 그동안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장·제품의 지능화 혁명이다.

1,2,3차 산업혁명이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품을 창출하는 하드파워 중심의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상상 및 아이디어를 투입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창의적 교육, 개방형 혁신, 융합적 사고와 문화,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등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인터넷(Mobile Internet) 등 데이터 활용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AI)

등 지능정보 기술 간 융합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줄여서 ICBM이라고 한다. 이들 기술은 정보 취합(IoT) → 정보 전송(Mobile) → Data 분석·축적(Big data, Cloud) → 판단·추론(AI)의 과정을 통해 가상 세계(online)와 현실 세계(offline)를 연계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가능성, 융합 산업의 선도자 제주’를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산업+기술’의 융합, 전 산업의 지능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도민소득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미래 제주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을 키워드로 요약하면 혁신전략, 신 하이테크 전략, 재흥(再興) 전략 등인데 이러한 전략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조업의 부흥과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제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제주지역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 중소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현황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형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은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99.89%지만 제주는 전체 52,886개(2016년 기준) 사업체 중 대기업 16개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이다. 종사자 수의 경우 전국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27%지만 제주는 이보다 8.27%p 높은 98.54%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의 경우 전국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51%지만 제주는 이보다 34.3%p 높은 88.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중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형 기업인데 제주지역의 혁신형 기업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108개(2018년 기준)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9%인데 제주지역 중소기업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44%(2016년 기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Inno-biz 기업은 70개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9%에 불과하고, 경영혁신기업은 79개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7%에 불과하다.

2010~2017년 기간 중 제주지역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국

제조업의 성장률보다 8.73%p 낮은 증가를 보임으로써 제주지역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전국과 성장률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격차의 요인을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산업구조 요인은 제주가 제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 증가분을 나타내고, 경쟁력 요인은 제주경제가 지닌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낸다. 제주지역 제조업은 산업구조 요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경쟁력 요인은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 제조업 비중은 3.28%(2017년 기준)로 전국의 30.3%와 큰 차이를 보여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국적인 성장요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지역 중소제조업의 사업체당 주요지표(2014년 기준)는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의 경우 전국은 20.5명이지만 제주는 12.1명으로 전국 평균의 59.0% 수준이고, 생산액의 경우 전국은 60억 5천만 원인 반면 제주는 28억 5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46.4% 수준이며, 부가가치의 경우 전국은 21억 3백만 원인 반면 제주는 10억 4천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49.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주요 지표도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의 경우 전국은 2억 9천 6백만 원인 반면 제주는 2억 3천2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78.4% 수준이고, 부가가치의 경우 전국은 1억 2백만 원인 반면 제주는 8천6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8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생태계 조성

그러면 제주지역 제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기업은 조직 내 지식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원과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CEO부터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증폭성, 보편성 등 제4차 산업혁명형 리더십을 갖추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기술력, 소프트파워,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며, 구성원 상호 간에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 창출→공유→학습 및 활용→축적→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남들과 차별화된 일을 하는 조직, 남들보다 뛰어난 일을 하는 조직,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는 제주형 스케일업(scale-up) 지원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스케일업이란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개년 이상 고용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초과하는 고성장 기업을 말하는데 기존의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서 스케일업의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진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고성장 기업 수 증감 순위는 전국 11위, 고성장 기업 수 순위는 4위이며,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고성장 기업 수 증감 순위는 5위, 고성장 기업 수 순위는 16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 스케일업 생태계 육성을 위

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정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공유 및 공조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관계기관으로 (가칭)제주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도내 대학 등 다양한 중소기업 관계기관이 있다. 이들 관계기관의 기능 또는 지원 프로그램 재조정을 통해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거나 관계기관 간 공동 연구 또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2019.9.11.)



경제학보

경제학과 식구 됨을 고하며

1993년 3월 1일 자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의 한 식구가 되었다. 나의 강의를 들은 대부분 학생은 나에게 대해 익숙하겠지만 나의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일부 학생과 동문은 생소할 것이다. 지면을 통하여 상견례를 하고자 이 글을 쓴다.

나는 1960년 5월 2일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섬인 경남 남해에서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태몽은 어머니가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 줄기 빛이 있어 집어 보니 금반지였다고 한다. 아버님은 양복점을 경영하셨고 어머니는 여러 가지 장사를 하셨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님의 근면·성실하심과 어머니의 아량 있으신 넓은 마음을 보며 자라났다. 어린 시절에는 골목대장을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우리 동네(북변동) 친구들을 모아 축구팀을 만들어 다른 동네 아이들과 내기 축구 시합을 하였던 일이다. 지금의 프로축구로 말하면 구단주, 감독 겸 주전 선수였다. 이러한 나의 前歷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정받아 당시 남해군 축구의 명문인 해양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포워드(forward)로 명 활약을 하였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시합 도중 골을 넣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공부에 매력을 느껴(신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 축구로 밥벌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별레같이

공부하였다. 미국 유학 시절을 빼고는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중학교에 들어가면 머리를 완전히 깎아야 했는데 머리를 깎기 싫어 중학교 입학식 전날 많이들 이발을 많이들 하고 했다. 그러나 나는 12월 6학년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머리를 깎고 겨울방학을 비상 체제로 선포하고 일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였다. 남해중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학교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청운의 꿈을 안고 부산 배정중학교로 전학하였다. 부산으로 전학하여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적록색약으로 판정이 되어 당시 부산에서 최고로 유명한 김안과에서 확인을 마친 후 어릴 적부터 되고 싶었던 의사를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고 교수가 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부터 주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수가 적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고등학교는 추천으로 금성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지만, 당시 학교에서 치른 입학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 덕분에 연 4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지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후원자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힘든 일도 겪었다. 당시 금성고등학교는 부산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 진학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로 유명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매일 학교 불평만 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예비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때였다. 진학을 앞두고 지망학교와 학과를 결정해야 했는데 원하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또는 영

어영문학과에 갈 성적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려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은 본고사 출제경향(그 당시는 예비고사 340점과 국어, 영어, 수학 등 본고사 360점을 합하여 총점 700점이었다)이 나에게 적합했고 경제학과를 선택한 것은 분배 문제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이었다. 교수를 하려면 미국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지금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일 년 동안 송성문의 「정통 종합영어」 책을 5번 완독한 것과 영어단어를 외우느라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사용했던 일이다.

대학교에 들어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기로 생각하고 영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와 영어 공부를 병행해서 공부하고 방학 때는 주로 영어 공부에 전념하거나 영어 공부 겸 전공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기도 하였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나는 경제이론보다는 방법론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이론은 하나의 가설이며 그 가설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이용된다. 미시경제이론이든 거시경제이론이든 도표를 이용하여 이동의 방향만을 표시해 주는데 나는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인(또는 현실적인) 이동의 크기를 알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는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먼 훗날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며 나의 기준으로 바람직한 교수상을 가진 교수님을

찾아보았다. 그 당시 나에게 가장 좋은 교수상을 남긴 분은 국제무역을 가르치신 서상철 교수였다(지난번 12.21 개각 때 보사부 장관으로 입각한 서상목과 서강대 세상용 교수는 서상철 교수의 아우로서 세분 모두 경제학 박사이다). 철저한 강의 준비와 여유 있고 인자한 강의는 당시 명강의로 유명하였다. 그 후 입각하여 동자부 장관으로 재직 중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사건으로 작고하셨다.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 보람은행의 前身인 금성투자금융에서 1983년 1월 4일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3년 반 동안만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최초의 근무지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였다. 1983년 2월 27일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고 당초의 생각대로 1986년 6월 30일 자로 퇴직하였다. 1986년 7월 27일 당시 임신 중이던 wife와 함께 미국으로 향하였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는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뜨겁게 솟아올랐다.

내가 다니던 아이오와 주립대학(Iowa State University)은 미국 주정부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어 학교를 설립하게 한 미국 내 11개의 land grant 대학 중의 하나이며 24,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에임스(Ames)市는 인구가 5만 정도인 미국의 전형적인 대학도시이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촌 주로 콩과 옥수수가 많이 나는데 여름이 되면 어디를 가나 쭉쭉 자란 옥수수를 볼 수 있다. 아

무리 달려도 지평선만 보이는 엄청난 땅이다. 1992년 1월 20일 경제변동 분야의 「경기순환의 부문적 분석:총체적 충격과 부문 충격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5년 반 동안 공부하였는데 나의 학문적 취향은 이론보다는 방법론이었다. 학부 때부터 방법론에 관심이 있었고 또 준비되어 있어 대학원에서도 나는 통계학과와 경제학과를 오가며 통계학의 여러 과목과 경제학 중에서는 거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미국에 있는 동안 나는 크게 3가지를 얻고 3가지를 잃었다. 3가지를 얻은 것은 나의 귀여운 두 딸(세라, 세리)과 학위와 교회·사회활동을 통한 유익한 경험이며 3가지를 잃은 것은 학위 취득 한 달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것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았던 머리카락이 빠져 빛나리 아저씨(?)가 된 것과 오른쪽 눈 망막에 눈물 2방울이 생겨(retinal tears) 레이저로 수술하였으나 깨끗한 시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1992년 2월 7일 귀국하여 2월 20일부터 동양경제연구소에서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는 임무를 받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학위 취득 후 첫걸음에 교수가 되는 꿈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다. 언젠가는 학교로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잠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제주대학교에서 교수 채용이 있어 여러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품어오던 꿈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의 지난 두 학기는 참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 가르치는 일이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열심히 하였다. 1학기에는 5과목(총 130명)을 가르치고 2학기에는 4과목(총 210명)을 가르쳐 학기 중에는 거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름방학에는 연구에 전념하여 2편의 논문을 완성하였다. 하나는 제대논문집(제37집)에 나올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1993년 3월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과의 만남도 참으로 좋았다. 경제학과 M.T 때 떨리던 목소리로 ‘제비’와 ‘사랑이여’를 부르며, 경상대학 축제 때 씨알 광장에서 ‘가고파’를 불렀던 일, 경상대학 체육대회 중 여자배구 결승 경기 때 채신머리없게(?) 응원했던 일 등 여러 가지가 기억난다.

이상으로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끝으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되 승부욕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싶다. 흔히들 인생을 100m를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고 42.196k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한다. 즉, 단기에 승부를 내지 말고 꾸준히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가지고 살라는 뜻일 것이다. 나도 여기에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마라톤에서도 5km마다 lap time(도중 時計)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이 좋지 못하면 신기록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두그룹에서도 낙오된다. 따라서 마라톤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5km마다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lap life가 있다는 말이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각 lap life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특히 여러분은 청년기 중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4년 안에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시간은 흐른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승부를 걸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있어도 승리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을 가진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The sooner, the better).

둘째는, 경제학도로서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경제학적인 사고로 훈련된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가가 될 수 있다. Maurice Levi는 그의 저서 「Thinking Economically」에서 다음의 4가지 경제학적 사고를 말하였다. ①실증적 사고(Thinking Positively. 주관적 가치의 개입을 배제한 논리적인 사고: 계량경제학) ②미시적 사고(Thinking Small.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시경제학) ③거시적 사고(Thinking Big. 경제환경 변화에 국가 전체는 어떻게 행동하나?: 거시경제학) ④개방적 사고(Thinking Aloud.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국제경제학).

셋째는, 경제이론 및 분석 도구(framework)를 열심히 습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 경제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키우라고 당부하고 싶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으로서 학문적으로는 경영학에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다. 기업체에서는 경제학보다는 실용적인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대학 정원도 경영학이 경제학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경영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경제학과 교육 내용이 그동안 현실 세계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이론에만 치우쳐 지식 놀이만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경제학의 교육과정도 경제이론과 현실 문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하겠으나 학생들도 경제이론의 단순한 습득에만 만족하지 말고 현실적인 경제 현상을 습득한 경제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채시장의 고금리 현상과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을 미시경제학의 수요-공급 분석 도구로 설명할 수 있으며 채근의 신경제, 금융실명제, 제2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 등 경제정책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IS-LM이나 총수요-총공급의 일반균형적인 분석 도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가지가 준비된 학생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보다 개인적인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승부도 물론이고 장기적인 마라톤 경기에서도 남보다 앞서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993년 경제학보 제6호)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Economists

(성공적인 경제학도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

최근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Stephen Covey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김영사, 1994)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성공에 관한 수많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승리를 위한 습관,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습관, 자기 쇄신의 습관으로 각각 나뉘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의 습관을 경영학적 개념과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는 경제학부 편집부장으로부터 경제학도를 위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주스 1상자를 원고료로 미리 받아 다 마셔버려 큰 부담(?)이 되었다) 이 책의 제목(최근에는 부자가 되는 습관(Habits of Wealth)이라는 책도 나왔다)에서 힌트를 얻어 「성공적인 경제학도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로 하였다. 성공적인 경제학도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7가지 외에도 더 많은 또는 더 중요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다. 단지 이 글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쓴 글이며 가능하다면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을 뿐이다. 이러한 제목의 글은 아직까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작에 불과한 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 주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경제학도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전공에 대한 확신(Belief)을 가져라.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분명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학이 과연 공부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경제학을 시작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노벨경제학상 심사위원장인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Assar Lindbeck 교수는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고 경제학은 정치학에 필요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학을 끝을 내지 못하여 아직도 경제학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보호무역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선구자인 미국 Duke 대학의 Anne Krueger교수(女)도 정치학으로 시작했으나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이 경제학이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경제학자가 되었다. 합리적 기대학파의 대부로 노벨상을 수여할 때마다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나 아직 젊어서 받지 못한다는 미국 시카고대학의 Robert Lucas 교수도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나 경제학을 배우면서 다른 학문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경제학은 이해가 되지 않아 경제학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겠다고 시작한 것인 유명한 경제학자가 된 것이다. 고도의 수학이 요구되는 일반균형과 게임이론의 연구로 유명한 미

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Hugo Sonnenschein 교수는 또 다른 경제학자인 Kenneth Arrow가 유명한 경제학 저널(Journal)인 Econometrica에 실은 논문을 보고 매력을 느껴 수학에서 경제학으로 전향하였다. 그 외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경제학을 택하게 된 학자도 많다. 197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의 통화주의 대부 Milton Friedman 교수, 미국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철폐의 업적을 세웠던 코넬대학의 Alfred Kahn 교수,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방 준비이사회의 의장을 지낸 Paul Volcker 등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되자 경제학을 택하게 되었다. 이렇듯 경제학을 택하게 된 동기는 다양하지만, 그들이 경제학자로서 성공한 원인은 사회과학의 여왕으로서의 경제학의 우수성 또는 현실의 정치·경제·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경제학의 유용성에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어떠한 이유에서 경제학을 선택하였던 경제학의 우수성과 유용성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경제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에는 경제학에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는데 4학년이 되어 경제에 관한 지식이 쌓여 갈수록 경제학이 너무 재미있다”라는 이번에 경제학과를 졸업할 K양의 말이 아직 나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둘째는,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질문(Question)하고 답을 구하라.

경제학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즉,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문제들을 발견하여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해결책이 실현할 수 있으며(feasible) 설득력이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최근 인천 상륙에 이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세금 도둑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세금 도둑은 분명히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접근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제학자가 분석적이며 실증적인 경제학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와 외화보유 자유화를 골간으로 하는 「외환 제도개혁(안)」 및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부동산실명제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 전체의 모습을 먼저 파악하라. 다음으로 각 산업의 모습을 보고 각 지역의 경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겠다. 현실경제의 문제점을 질문하고 답을 구할 때 주의할 것

은 중요한 문제(important questions)를 질문하고 정확한 답(precise answers)을 구해야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중요한 질문은 제기했지만 답을 잘못 구했고,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제기하고 정확한 답을 구했다는 지적을 우리는 참고할 만하다.

셋째는, 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Learning)하라.

요즈음은 스피드 시대라 속성으로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학문의 습득은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지만 경제학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의 집적이므로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벼락치기(cramming)로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느꼈겠지만, 속성으로 공부하거나 피상적으로 공부한 것은 시험을 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거품이론(bubble theory)에 따르면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되듯이 내용이 부실하여 거품처럼 되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작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교훈으로 삼자. 지금까지 부실 공사하듯이 속성으로 피상적으로 공부해 왔다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각오로 깊고 폭넓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학의 기술적인 면은 수학, 통계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서 많이 응용하였고 경제철학이나 경제사상은 철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문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만을 공부할 때보다 더 큰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전체가 각 부분의 합보다 크게 되는 synergy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울며 씨를 뿌리면 웃으며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넷째는, 경제학적 사고의 바탕 위에 새로운 사고(Thinking)를 하라.

Maurice Levi가 그의 저서 「Thinking Economically」에서 말하고 있는 실증적 사고, 미시적 사고, 거시적 사고 및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미국 시카고대학의 Gary Becker 교수는 경제학을 기존의 틀 속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구해 오던 문제에 경제학적 사고(economic way of thinking)를 적용함으로써 경제학의 영역을 결혼, 가족, 교육, 범죄,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까지 확대한 공로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예를 들면, Becker는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아기를 가지는 문제도 내구소비재를 사는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였다. 엄마의 시간가치가 높아질수록 아이를 양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한 비용이 증가하므로 아이들을 적게 가지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30년 전만 전만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로부터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이론에 대한 실증

(evidence)을 제공해 주고 있다. 사람을 소비재로 취급한 것은 기존의 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노벨경제학상은 경제학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낸 학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하나의 이론으로 잘 형식화한 학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노벨경제학상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 노벨경제학상을 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자로서 성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경제원리 및 paradigm을 먼저 이해하고 새롭게 발전(Developing)시켜라.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조리법(recipe)을 배우는 것에 비유한다. 나는 일 년에 한 달 정도는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간단하게 보이는 요리조차도 조리 방법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대로 요리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대부분 요리사도 먼저 조리법을 배우고 그다음에는 그 조리법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맛의 요리를 만들어 낸다(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학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극대화 원리, 합리성의 원리, 기회비용의 원리, 균형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경쟁의 원리, 한계수입 및 한계비용의 원리, 국민경제의 항등식 등 경제원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intuition)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 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examples)를 많이 드는데 그러한 예를 여러분의 상식에 기초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즉,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경제주체에 이입시켜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analytical framework)인 paradigm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태분석 및 동태분석, 부분균형분석 및 일반균형분석, 수요-공급의 분석 도구, IS-LM의 분석 도구 등 일반적인 분석 도구를 잘 이해해야 한다. 경제학을 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가 서로 다른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분석 도구를 각자의 관심 영역에 적용한 것 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paradigm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paradigm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은 경제학 원리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 동물이나 사람을 이용해 그들의 경제행위를 직접 실험해 보는 분야인데 이처럼 경제학은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paradigm을 개발하고 있는 살아있는 학문이다.

여섯째는, 균형감각(Balancing)을 유지하라.

경제학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 없이(value-free)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

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이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때때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국민 정서(국민의 가치관)라는 명분으로 정치 논리로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제 논리를 압도하려고 한다. 국민 정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증을 거치지 않은 규범이 강조되면 사회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형평성은 무시하고 실증을 거쳤다고 해서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부의 분배가 왜곡될 수도 있다. 항상 실증(경제 논리)과 규범(정치 논리)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이 대립할 때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lfred Marshall은 냉철한 머리(cool head)와 따뜻한 가슴(warm heart)을 경제학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강조하였는데 냉철한 머리는 객관적인 분석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학의 실증적인 면을, 따뜻한 가슴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내포된 경제학의 규범적인 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는, 지속적으로 재투자(Reinvesting)하라.

선진국에서는 미 정착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실시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안식년(sabbatical year) 제도는 교수들이 6년을 근무하고 나면 1년간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말이 휴가이지 대부분 교수는 다른 학교에 교환교수로 방문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재충전한다.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학문은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재투자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3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일부 대학원 과목(수학, 통계학 등)의 경우 교수들도 학생들과 같이 청강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주 세미나가 열리며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교육은 교수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힘들었던 경제학과 이별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여행해 본다든지 직장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배움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와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습관화하기를 바란다. 나는 학생 때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입장이 바뀌어 교수가 되고 보니 학생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앞날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나는 느낀다. 여러분이 학생의 관점에서 교수님들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지 말고 모 가수의 노랫말처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易地思之) 교수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경제학보 제6호)

The Seven Principles of Highly Effective Life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원리)

나는 1994년 경제학보에 「성공적인 경제학도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얼마나 많은 학생과 동문이 그 글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그 글은 나의 홈페이지(<http://kanggc.cheju.ac.kr>)에 있으니 관심이 있는 학생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대부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도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창조적인 스트레스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행착오라도 할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원리란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규범을 말하므로 앞으로 논할 7가지 원리를 지키면서 생활해 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첫째,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라.
(Strict to yourself, but generous to others).

나(自身)와 남(他人), 완벽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①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②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충 봐주는 사람, ③자신이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도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④자신은 완벽하지만, 다른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용과 아량으로 봐주는 사람 등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①에 속한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라 전혀 배울 바가 없을 것이며, ②에 속한 사람들은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사람들이라 배울 것이 조금 밖에 없을 것이고, ③에 속한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이라 배울 바는 많겠지만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며, ④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윤리적이고 타인에게는 애정이 넘치는 자라 배울 바도 많고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를 생각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항상 자신을 먼저 점검하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입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는 즉,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둘째, 도전정신과 비전을 가져라.

(Have challengeship and vision)

도전정신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다. 특히, 도전정신이 없는 청년은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다. 강의하다 보면 한 시간 내내 강의는 듣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학생들을 종종 본다. 그런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또한 과제물을 내주면 다른 학생들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최근에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것은 자신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주어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한 학문의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한 학생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남이 대신 해 주면 본인의 능력은 절대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비전이 없는 자 역시 죽은 자이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졌었고 그것을 19년 만에 이루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모두 뚜렷한 목표, 즉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자위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나는 지금도 나의 현실

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성취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셋째,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The prepared deserves opportunities)

우리 일생에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온다고들 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3번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회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취업의 문이 워낙 좁은 까닭에 대기업 취업을 미리 포기하고 구체적인 설계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하는데 많은 학생이 TOEIC 성적이나 평균 평점이 모자라서 응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 생활을 충실히 준비하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고 혹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조성한 사람이므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한 공부는 결코 헛수고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큰비라도 하룻밤 만에 바위에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대학 시절에 꾸준히 준비해 놓으면 기회가 왔을 때 허둥대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천 년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도래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21세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21세기는 준비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 될 것이므로

대학에서 학문을 부지런히 갈고닦아 준비하는 자만이 21세기의 진정한 주역이 될 것이다.

넷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Think affirmatively)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다고 하자. 이를 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삼중고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한 그녀는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조차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으니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있는 경제학과 4학년 K군을 보면서 나는 그가 직장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흔히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비교를 한다.

나의 아내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아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단점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아내를 비교하면서 감사한다.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만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도를 걸어라.
(Go straight path)

나는 대학교에 다닐 때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그 의미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내 생활철학의 하나가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만을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않으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걷지 않으며, 물질적인 부(富)보다는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의미로 와 닿았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자로서 선비의 도를 지키고자 한다. 경제학자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의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출세에 눈이 멀어 배운 학문을 왜곡해 세상에 영합하는(曲學阿世)’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다. 돈이 되는 프로젝트만을 좇

아가며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복사하는 학자 아닌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섯째, 지조를 지켜라.
(Keep constancy)

조지훈은 그의 「지조론」에서 지조를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립(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조란 보통 사람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지조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처음과 나중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한 것이며, 자기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를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 정권이 바뀌자 당을 옮기는 철새 같은 정치인들, 당을 옮기면서 자기의 변을 늘어놓는 뻔뻔한 정치인들, 뇌물을 받고 검찰에 소환될 때는 결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는 고개를 떨구고 구속되는 정치인들,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는 불가사리 교수들, 부교재 채택료와 촌지를 챙기는 교사들, 피를 흘리며 싸우는 종교인들,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기업인들, 브로커로 몰락한 판검사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장성들, 규제를 이용하여 각종 이

권을 챙기는 관료들, 참으로 지금은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이다.

이 지조는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修身), 성공적인 부모가 되며(齊家),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기(治國) 위해서도 반드시 지조를 지켜야 한다. 새해를 맞으면서 나는 이제 인생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반부 나의 삶을 평가해 보니 나름대로 지조를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을 보라’라는 속담이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지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새해 아침에 하게 되었다.

일곱째,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라.

(Establish your own value outlook)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으로 분류하고 각 체질에 이로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병을 예방하기를 권장한다. 한편,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①시장의 자유에는 찬성하지만 가족, 마약, 낙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하는 보수주의자(conservative), ②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개입을 원하는 자유 지상주의자(libertarians), ③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개입을 바라고 시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에 대해 회의적인 사회주의자(socialists), ④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

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등으로 분류된다.

대학 시절은 참으로 귀중한 시절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나름대로 경제 가치관도 확고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배격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가치관들은 서로 경쟁해 가면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7가지 원리대로 생활하면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고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는 틀림없이 원리대로 살기를 잘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상황 논리에 따라 불의와 타협하는 원칙 없는 생활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원칙을 지키며 순간보다는 영원을 꿈꾸며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자만이 21세기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경제학보 제11호)

경제학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방학을 맞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과제를 하나 해결하였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 뒤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有始者必有終(유시자필유종)

有志者事見成(유지자사견성)

“일을 시작한 자가 반드시 마무리하고, 뜻을 세운 자가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수가 되기로 뜻을 세워 93년에 그 뜻을 이루었고 대학 진학 때에는 분배 문제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경제학과를 선택하였고 그 후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여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게 다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주저 없이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현상을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문(social science)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넓혀 가면서 발전하는 도전적인 학문(challenging science)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에

인기를 빼앗겼던 경제학이 다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 주목 받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에서도 향후 경제학이 예전의 인기를 회복할 것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경제학도가 된 우리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렵고 너무 이론에 치우쳐 현실 세계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음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고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비판하였지만, 이는 경제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학이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실 설명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현실 설명력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은 극대화 원리, 합리성 원리, 기회비용의 원리, 균형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경쟁의 원리, 한계수입 및 한계비용의 원리, 비교우위의 원리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정태분석 및 동태분석, 부분균형분석 및 일반균형분석, 수요-공급의 분석 도구, IS-LM의 분석 도구 등을 이용하여 현실을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음울한 학문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 설명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균형 잡힌 학문(balanced science)임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귀고 나면 금방 싫증 나는 사람보다는 사귀면 사귄수록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아직 경제학을 배워 가는 과정에 있지만 경제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참 맛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charming science)임을 때때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이며, 도전적이며, 매력적이며, 균형 잡힌 학문인 경제학을 선택한 우리 경제학도는 경제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는 경제학도의 반열에 들어서서 곳곳하게 학문의 길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경제학보도 이전에 발행되었던 학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사랑하는 경제학도들의 노력이 뭉쳐진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책장에 이전에 발행되었던 경제학보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학보가 여러분의 책장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1년 경제학보 제12호)

미래를 꿈꾸며

나는 3이란 숫자를 특히 좋아한다.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숫자이기 때문이며 특히 무엇인가를 나열할 때는 3가지 정도면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꿈(dream)과 이상(vision)과 뚜렷한 목표(target)를 가지라는 것이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최근의 음악 조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그들의 음악 속에 담겨 있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나는 부끄러워했다. 수업 시간에 종종 꿈 이야기를 많이 하듯 나는 꿈을 많이 꾸다. 물론 대부분이 개꿈이라고 믿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꿈속에서 여러 모양의 인생을 경험하기에 꿈을 꾸다는 그 자체가 나는 즐겁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대학교수가 되기로 꿈을 꾸며 살았고 그 꿈이 19년 만

에 이루어졌다. 나는 지금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성취에 대한 꿈으로 살아가고 있다. 미국 Temple대를 설립한 James Cornwell이 2차대전 중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조사해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속성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모두 뚜렷한 목표, 자기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불퇴의 인내를 가지며 살았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졸업 후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 꿈을 꾸며 대학 생활을 보내기를 바란다.

둘째는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하라는 것이다.

나는 대학교에 다닐 때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내 생활철학의 하나가 되었다.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보면서 그 말의 깊은 뜻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도 대학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확고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하여 순간순간 상황 논리에 따라 불의와 타협하는 생활이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원칙을 지키며 순간보다는 영원히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미래를 생취하기 위하여 절차탁마(切磋琢磨)하라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경제학과라는 문구가 강의실에 쓰여 있듯이

여러분들은 곧 도래할 21세기의 주역이다. 그러나 21세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 될 것이므로 남은 대학 생활은 학문을 부지런히 갈고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으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 되기 위해 최소한 다섯 가지-A(Academic:학문), B(Business:취업), C(Computer:정보 처리능력), D(Degree:학위), E(English:외국어)-를 갖추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다른 자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21세기의 진정한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경제학과지 솔메)

경제학의 부흥을 꿈꾸며

학부제 또는 학과군제 실시로 대학은 지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소위 비인기학과들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경제학과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고들 한다.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희망 학과를 조사해 보니 경제학과가 경상계열학과들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비교열위 때문이 아니고 학습 수요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무사안일 추세(easy-going trend) 때문이기에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나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조리법(recipe)을 배우는 것에 비유한다. 대부분 요리사는 먼저 학습을 통해 조리법을 배우고 그다음에는 그 조리법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어 낸다. 특색 있는 요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요리사는 성공할 수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기존의 분석 도구/framework나 패러다임을 배워 그것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설명해 보는 것이다. 학부에서는 이 과정만 철저하게 공부해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기존의 분석 도구나 패러다임의 현실 설명력이 떨어질 때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현실 설명력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학원에서 주로 배우게 된다.

경제이론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외적 일관성(external consistency)이 있다. 내적일관성이란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이 최초의 가정과 모순되지 않는 경제학의 과학적인 면을 말하며, 외적 일관성이란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이 현실경제와 일치하는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말한다.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모든 학파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현실 설명력에 따라서 경제학파들이 부침을 거듭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주도해 왔으나 대공황 이후 케인즈학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1970년대 들어 원유 파동을 겪으면서 케인즈학파는 퇴조하고 합리적기대가설 학파가 전면으로 부상하여 1980년대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경제로 인해 새로운 경제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렇듯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전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경제학은 우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여왕'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때 경제학이 새 밀레니엄을 살아갈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학과가 최고 인기 학과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미국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새천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과가 다시 인기 학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21세기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과지 슬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우리가 어느별에서 만났기에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우리가 어느별에서 그리워했기에	그대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꽃은 시들고 해마저 지는데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저문 바닷가에 홀로 어둠 밝히는	
그대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그대와 나 그대와 나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해뜨기 전에 새벽을 열지니	
우리가 어느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우리가 어느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흔들어 새벽을 깨우는가	

아라생활 32.5년: 각종 기고문

목 차

- 경제난 함께 풀자(중앙경제신문, 1992.7.22.) 493
- 교수의 경쟁력 강화(한라일보, 1994.4.26.) 496
-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지방자치 10월호, 1995.10) ... 500
- 선거와 경제(Economy 21, 2002.6) 512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518
(북제주군 의회, 제3대 의정백서, 2002.6)
- 지식기반사회와 제주경제의 미래 527
(제주공동체 회보, 제12호, 2003.9)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한국경제 531
(Economy 21, 제316호, 2006.9.4)
- 지역균형발전 전망과 과제 534
(지역과 발전 2015년 겨울호, 2016.1.1)
- JDC의 1만 개 일자리 만들기에 박수 보낸다 537
(한라일보, 2017.7.11)
- 제주포럼의 발전과 JDC의 역할 5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의 꿈, 2018.6)
-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제민일보 망중한(2014.12.28.) ... 545
- 작지만 강한 싱크탱크를 꿈꾸며-제주매일 아침광장(2015.2.10.) ... 548
- 다이어트 예찬-제민일보 망중한(2015.2.22.) 551
- 호칭에 합당한 삶-제민일보 망중한(2015.5.3.) 554

- 내가 걷는 이유-제민일보 망중한(2015.7.12.) 557
- 청정과 공존! 나의 핵심 가치는?-제민일보 망중한(2015.9.13.) ... 560
- 제주상공회의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며
-제주매일 특별기고(2015.10.28.) 563
- 나는 오늘도 뛰고 있는가?-제민일보 망중한(2015.11.29.) ... 567
-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성과를 창출하는 해를 꿈꾸며
-제주매일 아침광장(2016.1.17.) 570
- 옷장을 열면서-제민일보 망중한(2016.2.21.) 573
- 내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제민일보 망중한(2016.5.1.) ... 576
- 규제프리존 도입, 빠를수록 좋다. 579
-제주일보 제주광장(2016.5.17.)
- 한-러 극동 포럼을 다녀와서-제주매일 아침광장(2016.6.13.) 582
- 요즘 잘 주무세요?-제민일보 망중한(2016.7.31.) 585
- 기록 DNA를 활성화하자-제민일보 망중한(2016.12.18.) ... 588
- 행동하는 연구원(員), 경쟁력 있는 연구원(院)
-제주매일 아침광장(2017.1.15.) 591
- 인사유명-제민일보 망중한(2017.3.5.) 594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나아갈 방향
-제주매일 아침광장(2017.4.30.) 597
-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제민일보 망중한(2017.6.18.) ... 600
- 사칙연산(+ - × ÷) 활용법-제민일보 망중한(2017.9.10.) ... 603

경제난 함께 풀자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家計의 문제점은 과소비와 노동 의욕의 감퇴다.

과소비하게 되면 계층 간에 위화감을 만들고 또 과소비를 흉내 내게 만드는 등 사회 비윤리적인 면 외에도 물가가 오르게 되고 수입이 늘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하는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다. 또한 젊은이들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여 제조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땀 흘리며 돈 버는 제조업 대신에 손쉽게 돈 버는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국내 전체 생산액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로, 企業의 문제점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소홀과 부동산 투기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성장 정책 아래서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소홀로 우리나라의 제품이 아래로부터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제품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위로

부터는 선진국 제품과 품질경쟁에서 밀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에 걸쳐 이익이 발생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기에 이익을 내는 부동산에 눈을 돌려 업무용 토지 외에 많은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地價를 상승시켜 거품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기업의 생리가 최대 이윤의 추구에 있지만 그것은 생산활동을 통한 최대 이윤의 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로, 政府의 문제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및 민간 경제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간섭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분야 외에 금융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또한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실시의 후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수의 가진 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여도 그 정책은 신뢰를 잃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주체가 각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론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국제수

지적자 등의 경제문제 해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잘못된 경제행위는 유지하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시행과 함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돌아가는 미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家計의 구성원인 소비자는 「나 하나쯤」 어떻게 하든 우리 경제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경제윤리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기업은 생산활동에 전념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겠고, 정부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에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다.

(중앙경제신문, 1992.7.22.)

교수의 경쟁력 강화

최근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의 하나는 아마 경쟁력 강화일 것이다. 개인의 경쟁력 강화가 조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개인이 각자가 맡은 바 직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학교에 봉직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수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흔히들 대학교수의 3대 역할을 교수(teaching), 연구(research),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s)라고 한다. 이러한 대학교수의 역할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필자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들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회 조직들의 역할이 바뀌듯이 새로운 국제화의 시대, 경쟁력 강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교수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가 제대로 성숙하려면 교육과 종교가 시대를 선도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는 교육과 종교가 그러한 역할을 잘해 주었으나 60년대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교육과 종교는 시대의 요구 및 변화에 후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문민정부가 선도하고 있는 개혁의 물결 속에서도

교육 부문과 종교 부문은 구태의연한 변화만을 시도할 뿐 전혀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 대학이나 학과 평가제도, 교수업적 평가제도 및 학생의 교수 강의 평가제도의 도입 등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시대의 요구에 앞서갈 수 있는 대학교수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학생 만족(Students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교수이다.

물론 학문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판에 박힌 교수 방법에서 탈피하여 현장감 있고 현실 적용력이 있는 가르침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르침이 지적 유희로 끝나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판에 박힌 과제물 부여, 판에 박힌 시험문제 등에서 벗어나 현장실습, 과제물(mini project) 수행, 과제물의 발표(presentation), 새로운 평가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교수 방법은 교수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OHP도 없고 이동용 개인 컴퓨터도 교육용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것을 시도하기는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자 하는 작업과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교육계에도 교육간접자본시설이 이른 시일 내에 확충이 되고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겠다는 교수들의 의식 전환도 시급하다.

둘째는, 학교 만족(School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대학 교수이다.

publish or perish(논문을 발표하거나 파멸함)에서 publish and perish(논문을 발표하고도 파멸함)로 바뀌어 가는 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외국에 비하면 그동안 우리는 publish nor perish(논문발표도 안 하고 파멸도 하지 않음)라는 상대적으로 안이한 경쟁을 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교수업적평가와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국고 연구보조금 차등 지급 등으로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교수와 연구의 비중을 4:6 정도로 연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듯이 학교는 교수들의 학문적 성취를 요구한다고 보면 과거의 알맹이 없는 연구에서 벗어나 조그만 것이라도 학문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이것 역시 교수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들이 주당 6시간 강의를 맡고 연구하고 있는데 주당 12시간 내지는 15시간을 맡고 연구를 해야 하며 실험·실습 장비가 부족하고 외국의 우수한 논문집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수한 논문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대학의 교수 확보율을 높여 일 인당 강의 부담을 줄여 주고 연구 간접자본시설을 학교 당국은 마련해 주고 교수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생산해 내어야 하겠다.

셋째는, 사회 만족(Society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대학 교수이다.

대학교수들은 사회제도자로서 또는 여론의 형성자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들어 교수들의 노력 부족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수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상아탑에 안주한다고 하여 시사 토론 등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배제된 느낌이 든다. 교수들은 특히 특별강연이나 재교육 강사 등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 현실성 있는 주제, 차별화된 강연 등으로 피교육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을 만족시키고, 학교 당국을 만족시키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키겠다는 발상의 전환과 교수와 연구분야에 간접시설들의 확충이 맞물리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들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라일보, 1994.4.26.)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1. 새로운 경제환경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전개되는 국제화와 대내적으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있다. 국제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적응해 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세계화는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있다. 이를 토인비의 역사관으로 비추어 보면 국제화는 우리 경제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화는 도전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응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를 한마디로 나타낸 말이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Thinking global, Acting local)’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조금 고치거나 개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혀 새로운 틀(new paradigm)을 짜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의 원칙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틀 속에서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정책인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우리가 새로 짜야 할 경제정책의 틀을 살펴보고 이러한 틀 속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경제정책의 원칙

어떠한 경제정책이 바람직한가? 어떠한 경제정책이 올바른가? 이 두 질문은 경제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의 공평성(equity)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의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경제정책을 검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어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나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자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원배분의 계산에 근거하여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사회구성원 중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한편,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자나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공평성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방법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그러나 A. Marshall은 일찍이 이 두 가지를 경제학자가 가져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이 두 가지를 각각 ‘냉철한 두뇌(cool heads), 뜨거운 가슴(warm hearts)’으로 불렀는데 이 것들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미국 Princeton대의 A.Blinder 교수 역시 이 두 가지를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각각 ‘강한 두뇌(hard heads), 부드러운 가슴(soft hearts)’으로 불렀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이 두 가지 중 최소한 하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거나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제개혁정책의 평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 있어 외형상 많은 제도개혁이 있었다. 먼저 민간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였고(총무처 발표에 의하면 정부 규제 사무 1만 1천7백15건 중 지난 2년간 2천6백59건이 규제완화가 됨),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30개 시설에 민간 자본 유치를 결정하였으며,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6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일들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금융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금리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고 외환보유 자유화를 골자로 한 외환 제도도 개혁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경제개혁의 꽃이라고 하면 1993년 8월 12일에 시행된 금융실명제와 그의 완결편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경제정책의 원칙에 따라 이 두 가지 경제정책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먼저 금융실명제를 살펴보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문

민정부의 큰 업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실명제는 돈의 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돈의 주인에게 정확하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로 함축하여 나타내듯이 우리 경제는 그동안 너무나 높은 비용을 치렀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속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을 공급해야 했고 국민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급해 왔다. 이러한 것들을 사회마찰비용(social friction cost)이라 부르는 데 금융실명제는 한마디로 이러한 사회마찰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되면 비용이 줄어들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한편, 금융실명제 그 자체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지는 않지만,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거래가 투명해져 지하경제도 줄어들고 부동산투기도 억제되면 이것으로 인해 그동안 왜곡됐던 분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로 인해 공정성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경제원칙으로 볼 때 바람직하고도 올바른 정책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하나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해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실명제의 내용 자체가 실속이 없었다는 해석이다. 어느 해석도 실증(empirical evidences)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무자료거래

가 행해지고 지하자금의 버젓이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현재 변칙 금융거래로 성행하고 있는 차명거래를 실명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 차명거래는 특히 기업의 비자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묵인하에 개인 고객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차명거래가 실명으로 유도가 안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다. 금융실명제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사채(私債)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경제 전체의 공평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모든 경제정책의 수행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러한 비용을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라 하는데 금융실명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되면 사회마찰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benefit)이 조정비용보다 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에 민자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혁 입법의 보완 조치는 조정비용만을 강조한 것으로 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안)는 금융실명제와 연계된 것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

도이다. 먼저 이 제도는 경제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는 누진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 제도는 바람직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므로 대부분 국민은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일부 가진 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91년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조세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천2백83만 가구 중 0.6%인 7만 8천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한다(그러나 지난 11일 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94년 말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종합과세 대상은 3만 1천 명 정도임). 이 들 가구의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0조 원 정도이므로 여기서 창출될 새로운 세금이 다른 계층을 위해 쓰인다고 가정하면(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 이 제도는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이 제도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금융시장 간 자금흐름에 혼란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에 대한 혈액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지면 이 제도는 올바른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자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정함에 있어 오락가락하고 민자당은 전체 가구의 0.6%가 전체 금융자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극히 소수의 가진

자를 중산층으로 둔갑시켜 그들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입법 보완 조치의 배경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 논리이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적 논리조차 어떤 객관적 사실(facts)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가공된 판단(myth)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주식시장에서의 매매차익도 예외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부정과 비리를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정책의 틀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짜야 할 새로운 틀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스케치해 보고 그다음으로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과 균형발전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NP로는 중상위국으로 분류되나 의료, 보건, 교육 분야 등에서 지표로 나타난 삶의 질은 중하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만족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경제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정책은 경제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균형성장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정책의 조화(policy coordination)-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의 조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 시장역할과 정부역할의 조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정책의 조화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대책이나 총수요관리정책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95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었으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4위로 94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입안자는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 처방에 관심을 가지기 쉬우나 경제학자로서는 장기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도 중요하다. 거시경제지표는 경제를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거시정책을 중심으로 짜여 왔다. 그러나 경제자료는 그

자체에 표본추출 과정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발표 실업률은 2%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하면 3.7% 정도로 추정됨)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거시지표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거시경제지표는 우리에게 무엇인 가를 말해 주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시정책은 경제 각 부문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 역할과 정부 역할의 조화도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복잡해지고 거대화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하고 시장실패를 감시하며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 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과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정부 정책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이 국세로 된 전화세의 지방세 이전을 놓고 대립을 보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차별화(policy differentiation)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경제정책만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대기업정책 대 중소기업정책, 지방화 시대를 고려한 지역간 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동종 산업 내(inter-industry), 대기업 내 및 중소기업 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간(intra-industry),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측정오차로 인한 통계적 허구일 수 있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외형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실제로는 30대 그룹과 지분 관계가 있는 169개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적·수치적 허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5개 시도의 93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역총생산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간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별적인 성장 정

책-예를 들면, 지방특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정책의 일관성(policy consistency)이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선정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데서 보여주듯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물론 현 정권의 구성을 볼 때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는 자유주의 철학을 지향하고 민자당의 주류는 보수주의 철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그룹과 선경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필요에 따라 금융제재나 세무조사는 수단으로 기업을 다스리거나 삼성의 자동차 사업진출은 승인하면서 포철의 신규 사업진출은 금지하는 등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 결정의 예는 많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있는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보다 효율적이므로 일관성·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된 경제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책(policy based on economic logic)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을 누가 입안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 처방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은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경제적 처방 대신에 정

치적 처방을 택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 처방이나 출신 지역에 유리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경제 논리가 우선하고 정치 논리와 조화를 이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틀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소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국민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강한 두뇌와 부드러운 가슴을 가진 경제정책을 찾는데 있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단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 A.Blinder 교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10월호, 1995.10)

선거와 경제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55번의 각종 선거를 치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번씩 선거를 치른 셈이니 선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경제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등 많은 선거가 있어 이 시점에서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뷰캐넌(Buchanan)을 중심으로 한 공공 선택 학파 경제학자들이 정치 역시 경제학적 도구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이후 선거는 경제학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매일 투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 중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표를 많이 얻은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그 명성을 유지하면서 오래 지속되지만, 표를 얻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사라진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역시 유권자들이 표출하는 공공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선거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학 방법론의 두 축인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에 근거하여 선거의 미시경제적 및 거시경제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미시경제적 분석이란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접근방법이므로 선거로 인한 사회적 혜택(benefits)과 비용(costs)을 비교해 보는 것이 선거의 미시적 분석이 될 것이며 거시경제적 분석이란 경제 각 부문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접근방법이므로 선거가 경제의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선거의 거시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선거의 미시경제적 분석에서 선거로 인한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는 두 개의 학파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나 행정관료들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가들의 이기심과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중재해 주므로 선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뷰캐년을 중심으로 한 공공 선택 학파는 정치가와 정부 관료 등 정치적 비즈니스맨 역시 권력의 극대화과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동물로 보고, 이들이 노조, 협회, 기업 등 이익집단들의 치열한 로비나 정치적 압력을 받아 가면서까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선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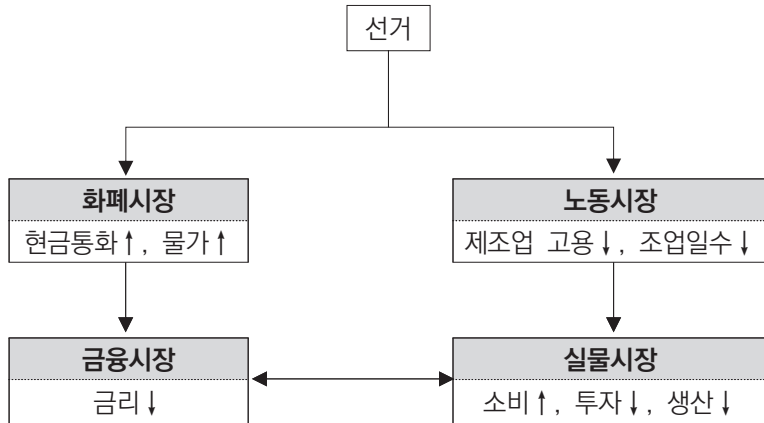
가능성은 작아서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비즈니맨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이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선거의 미시경제적 분석에서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이 있다. 먼저 돈으로 직접 계산해 낼 수 있는 명시적(회계적) 비용을 필자가 계산해 보니 올해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최소한 1조 5천억 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시적 비용 외에도 직접 산출하기가 어려운 잠재적 비용으로 기회비용이 있다. 기회비용이란 각종 선거에 투입된 자금 또는 시간이 다른 용도에 쓰였을 경우 유발할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말하는데 올해 있을 두 번의 선거 공휴일로 인한 기회비용은 3,1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유권자가 적합한 후보자를 찾거나 후보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투자하는 탐색비용,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감시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과 선거기간 이전에 지출한 비용, 전국구의원의 헌납액,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정치인의 비자금 등 음성 비용이 있으며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추측되나 추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선거의 거시경제적 분석은 선거가 경제의 여러 부문 즉, 화폐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실물시장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들 시장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선거가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며 그 영향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선거의 거시경제적 분석에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는 국내경제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분산적이다. 지방선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며 집중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 대통령이 국부를 증대시켰을 경우 국부의 일부만이 해당 지역에 돌아가겠지만 지역주민이 올바른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그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했을 경우 그 혜택은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먼저, 선거가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선거기간 중에는 현금통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금리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며 유동성이 소비 부문으로 흘러 소비는 증가한다. 또한 선거에 따른 운동원 차출 및 조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과 생산이 감소하고 선거자금으로 생산자금에 압박을 받아 투자가 감소한다.



이러한 논리적 추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성립하는지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대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14대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에 현금통화 증가율이 확대되었고, 회사 채수익률로 측정한 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산업생산은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미미하게나마 상승하였고, 물가는 선거로 인한 인플레이션기대심리로 선거전에 미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리적 추리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15대 대선의 경우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충격으로 선거와 거시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선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 경우 지방선거와 지역의 거시경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보면 된다. 한편, 여기서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경제에 전념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1998년 실시되었

던 제2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6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현재 까지 5명이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역 별로 물가상승률, 실업률, 부도율, 산업생산 증가율 등 4가지 지표로 작성된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가 있는데 제2대 지방 선거 이후인 1999년과 2001년의 지역별 경제적 고통지수를 비교해 보니 자치단체장이 구속되었거나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경제적 고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선거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와 경제는 양분된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방 이후 5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 13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따라서 올해 있을 선거들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성공적인 선거가 되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이 선거로 인한 경제적 비용보다 커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 Economy 21, 2002.6)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1. 문제제기

작년 11월 세계 8위의 무역국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신청한 지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다. 1950년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 맹국을 탈퇴하면서 회원국 자격을 잃었던 중국이 1986년부터 회원국으로의 복귀를 추진하였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작년 6월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이 타결되고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1970년대 말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이 중국의 제1차 개혁·개방이라면 WTO 가입은 제2차 개혁·개방이라고 할 만큼 중국의 장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 전문기관들도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개혁·개방이 가속화되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및 무역의 확대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 한국경제 및 제주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출범한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

중국이 제1차 개방·개혁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간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국내총생산 규모는 18배, 1인당 국민소득은 14배로 증가한 경험이 있기에 제2차 개혁·개방이 가져올 경제적 성과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먼저 WTO 가입이 향후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단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실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불안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선진 경영기법을 갖춘 외국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중국 내 한계기업들의 퇴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업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율 인하로 외국 고가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적 위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의 가속화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며, 외국인투자 자유화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성장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정량화시켜 살펴보면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00년 4,743억 달러에서 2005년

에는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실행액 기준으로 2000년 408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쟁력 강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확대로 중국경제는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5~0.6%포인트 높아져 향후 20년간 연평균 7~8%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경제에 위협과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의 접근성이 쉬워짐으로써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쟁력 변화가 우리 경제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수 있겠으나 미시적·부분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적·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중국의 4번째 교역대상국일 정도로 1992년 양국 간 수교 이후 교역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액 규모는 2000년 31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의 9.4%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 평균 15.3%에 달하고 있는 관세율을 5~6%포인트 인하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측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중국 수출액의 7-10%가 추

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 18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50~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수교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흑자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시장에서는 섬유, 의류, 신발, 완구 등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저가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저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이들 상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시장에서는 새로이 개방되는 첨단산업 분야나 서비스업종에서 세계 일류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6.1%와 3.3%였으나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8.2%를 기록하였고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2.3%를 기록하였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출 증가로 인해 한국제품의 수출이 감소해 온 것처럼 앞으로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이 향상된 중국산 제품과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중국에 비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포함한 중국의 저가 농산물과 천연섬유 등의 국내수입이 급증할 것이며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신발 및 완구 등은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색가전 제품의 경우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가전제품에서도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예상되며 현재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조선은 향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로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당분간은 우리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 제주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의 경제는 과거 30년 동안 농업과 관광산업을 두 축으로 하여 높은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더라도 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제주도의 주도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그 영향은 ‘혼합된 축복(mixed blessing)’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감귤, 감자, 당근, 마늘 등의 중국 생산량 규모가 제주

지역 생산량의 수백 배에 달하고 있어서 대규모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면 제주 농산물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5천만 명에 달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여행 가능 인구가 소득증대로 인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제주의 관광산업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WTO 가입이 제주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인 지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중앙정부는 지난 4월 1일 자로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분산시키려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지정학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역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역경쟁력이란 한 지역의 경제주체가 가진 총체적 역량을 의미하는데 지역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지역 경제력, 지자체 행정서비스, 지역금융 환경, 지역 과학기술 수준, 주민 삶의 질, 지역의 세계화, 지역의 기업 및 산업, 지역 하부구조, 지역 인적자본 형성, 지역사회 화합력 등이 있다. 제주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역경쟁력의 결정요인에 따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지역 경제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요소를 제거하여 시장을 더욱 경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일괄 행정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지역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저축증대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 자산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해양생물 및 자생식물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복지 및 보건위생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지역 기업 및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사업화가 필요하고, 지역의 하부구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과 제3 섹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화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자원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협력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적자본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산업혁명과는 대조적으로 지적자본이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신산업 분야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극미세 신소재) 등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주지역을 해양생물·식물의 첨단기지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이 1차 산업에 응용되어 생명공학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제주도의 제조업도 활로를 찾을 수 있고 1차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 역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함께 비즈니스 관광과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5. 맺는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하부구조의 구축 및 재정적 지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을 배분할 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효율성의 원칙이다. WTO의 출범으로 정부가 「농어촌 발전 대책」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에 57조 원을 투입하였고 IMF 경제체제로 156조 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을 배분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 해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한편,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기업 및 가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가, 근로자, 농어민, 관광종사자 등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 및 제주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띤 ‘혼합된 축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을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추락하는 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와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

(북제주군의회, 제3대 의정백서, 2002.6)

지식기반사회와 제주경제의 미래

지금 세계의 화두는 지식이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 역사상 3번째 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혁명이 1990년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

과거 산업혁명에서 탈락한 어느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했듯이 디지털혁명에서 뒤지면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지금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식 강국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아니면 지식 국가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영원한 이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극미세 신소재) 등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확정하였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두 축으로 발전해 온 제주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이며 제주의 1인당 지

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8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1년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7%이며 3차 산업은 무려 79.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산업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지식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 하에 창조, 활용, 공유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산업기반이 확충되어 지역경쟁력이 향상되는 지식 지역의 관점에서 제주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현재 연구 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연구소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지식 창출 부문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위, 지역 협력 센터, 기술혁신센터, 산업재산권,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을 기준으로 한 지식공유 부문에서는 12위, 기술창업 및 지원 벤처기업 수 등을 기준을 한 지식 활용 부문에서는 16위를 차지하는 등 제주지역의 혁신역량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한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켰는데 7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광과 컨벤션 산업 등이 활성화되면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제주 관광은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의 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제주도와 협력하여 제주지역을 해양생물 및 식물의 첨단기지로 육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생명공학 기술이 1차 산업에 응용되어 생명공학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제주도의 제조업도 활로를 찾을 수 있고 1차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70%, 벤처기업의 85%, 연구 개발 투자비의 75%, 연구 개발 인력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는 지역의 피폐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 혁신 체제 구축’, ‘지방대 육성’, ‘과학의 지방화’ 등 획기적인 지역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반드시 오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이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적 하부구조와 법과 제도 등 소프트웨어(software)적 하부구조 및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휴먼웨어(humanware)적 하부구조의 구축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제주도는 제도개혁을 통해 제주의 미래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제주도민들은 의식의 대전환을 하는 등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둥이 개혁(the twin reform)이 있어야만 한다. 제도개혁을 ‘겉모양’ 구축에 비유한다면 의식개혁은 ‘속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무임승차(free ride)하지는 않겠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모든 도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제주공동체 회보, 제12호, 2003.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한국경제

국가 발전전략이면서 제주발전의 그랜드 디자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가 2002년 4월 출범하여 4년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주도에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가 분권 실험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G10 in Y10 즉, 향후 10년(Y10)이 한국경제가 선진 10개국(G10)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세계의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제주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3%(2004년 기준) 밖에 되지 않고, 생산, 고용, 금융, 재정, 외부거래 등 지역경제의 양적인 규모를 측정한 총량 경제력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인 0.8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에 영향

을 주는 소위 집산효과(collective effect)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와 지리적으로 고립된 경제의 특성 상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linkage effect)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제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한국경제에 증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국가 이미지(image)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88 올림픽’, ‘대~한민국’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전쟁’, ‘분단국가’, ‘부패한 정치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최근 한류를 통해 문화 분야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도시’와 ‘평화의 섬’은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관광과 평화를 대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경제정책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세수 감소와 본토 기업의 제주 이전을 통한 국내경제 교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제주지역을 통해 추적해 보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 및 특소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 면세제도나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규제완화 등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국가 발전의 지렛대(leverage)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국민소득 2만 불 또는 3만 불 달성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이 분업과 협업을 잘한다면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 논리가 아닌 차별화 전략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으니, 성과관리협약에 따른 철저한 성과평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conomy 21, 제316호, 2006.9.4)

지역균형발전 전망과 과제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요소의 지역 간 차이를 완화해 한 국가 내 여러 지역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 격차의 완화는 지역 간 경제적·재정적 균등성을 가져오고 선진지역과 낙후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때문에 한 국가 내 지역 불균형은 물론 한 지역 내 지역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HOPE라고 불리는 지역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둔 반면에 HOPE는 ‘지역경쟁력 강화’ 외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가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격차가 과거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사업공모를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고용 여건이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하는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사업과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이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행정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19개이다. 2015년에 선정되어 2016년에 추진될 사업은 총 9개인데 문화예술 사업, 체험교육 농장 사업, 특용작물 재배 사업, 숙박모델 개발 사업 등 모두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사업들이다. 물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향 방식을 통하여 발굴되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 지역 내 현안 및 주민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점을 인식하고 행정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행정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 주도의 전략사업은 숲을 봄으로써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의 중심은 사람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역량 강화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이 강화되면 정부 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역과 발전 2015년 겨울호, 2016.1.1.)



제 9456호

표 창 장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강기춘

귀하는 2021학년도 제1학기 강의평가
우수 교수로 선정되었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월 3일

제주대학교총장 송 석 언



JDC의 1만 개 일자리 만들기에 박수 보낸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직과 카드 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애는 공부 잘할게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한 구절로 취업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인 11.2%를 찍었다고 하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사실 지금까지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 온 JDC가 향후 5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해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JDC는 ‘JDC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했다. 앞으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을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유치, 국제학교 유치, 항공우주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한다.

올해만 약 3,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로 말이다. 요즘 국가적으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고민에 골몰하고 있는 이때, 우리 제주에서 JDC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아무쪼록 JDC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 극심한 취업난에 걱정한 제주의 청년들이 밝고 희망에 찬 당당한 모습으로 제주 발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라일보, 2017.7.11.)

제주포럼의 발전과 JDC의 역할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고,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한·소 정상 회의 이래 양자 혹은 다자간 정상 회의가 6차례 개최되는 등 국제회의와 정상회담 개최지이다.

외국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는 문화외교, 지식 외교, 미디어 외교 등이 있다. 지식 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 구축해 가는 포럼 외교(forum diplomacy)가 큰 관심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인 물리적 영향력(hard power)보다는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발적 동의나 행위를 끌어내는 능력’인 부드러운 힘(soft power)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부상함에 따라 강대국을 중심으로 국제포럼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인다. 국제포럼의 출발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한 ‘유럽 경영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이

후 ‘유럽 경영 포럼’,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보스포럼’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매년 1월 연차총회가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휴양지 보아오에서 열리는 ‘아시아를 위한 보아오포럼’을 들 수 있다. 국내에도 몇 개의 국제포럼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나 규모 면에서 볼 때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포럼(당시에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됨)이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포럼의 의의와 성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래 2011년 제6회 포럼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었고, 제6회 포럼부터 명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하고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5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제주포럼 주제의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동아시아→아시아로 관심 지역이 확대됐고, 평화와 공영→상생과 공영→신뢰와 화합으로 관심 범위는 더욱 구체화했다. 참가자를 살펴보면 외국의 현직 인사로는 장관이 몇 명 참석했었고, 전직 인사로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직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제1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제2회와 제4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참가자 수는 제1회 350명에서 제12회 5,500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국가 수는 제1회 9개국에서 제12회 81개국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참여기관 수나 전체 세션 수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포럼의 과제와 새로운 기회

지난 16년 동안 12회에 걸쳐 제주포럼이 보여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은 국제포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최근 남북 및 북미 간 화해무드의 조성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이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을 한 중국 보아오포럼만 하더라도 국가 주석의 참석 여부가 포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제포럼에서 국가수반의 참석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최국 국가수반의 포럼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국의 고위층 수준이 결정된다. 과거 3차례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이 있었지만, 내년 부터라도 대통령 참석이 관례화되어 제주포럼이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와 번영’의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주포럼의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

가 필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시기에 제주포럼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되던 초기 10년의 기간에는 ‘평화’를 화두로 던졌으나, 연례 개최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평화’와 ‘번영’을 모토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평화’만으로는 제주포럼의 장기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의제는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기후변화,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 등 5개 분야로 확장되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화두가 ‘평화와 번영’이었으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향후 제주포럼의 정체성이 ‘평화와 번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제주포럼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실행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4회 제주포럼에서는 그 결과물으로써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제주프로세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포럼은 냉전 시대 유럽지역 국가들의 긴장 상태를 관리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과정인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에서 논의되어 온 다자안보협의체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제주프로세스’의 산실이 되었다. 향후 제주포럼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국제 및 국내 포럼과 연계하여 분업 및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다보스포럼 및 보아오포럼과 연계하여 교차

참석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약칭 ‘제주 군축회의’)와 연계하는 방안,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포럼사업과 분업 및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포럼 발전을 위한 JDC의 역할

제주포럼은 참여기관들이 직접 주제를 개발하고 세션을 운영하는 소위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포럼의 후원기관으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세션 운영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제주포럼 JDC 세션의 주제를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현재와 미래’ 등 주로 JDC가 통상적으로 해 오던 국제자유도시의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 그러나 제13회 제주포럼 JDC 세션의 주제를 살펴보면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공공의 새로운 역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도의 발전 방안’, ‘지역의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JDC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등 국제자유도시의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시

키기 위해 ‘성숙한 개발’을 모토로 한 JDC의 신 경영방침에 따른 바람직한 변화로 이해된다. 향후 단회적인 주제 선정으로 끝나지 말고 큰 그림 하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제주포럼의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 아래에서 JDC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의 꿈, 2018.6)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지난 12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일을 제주발전연구원 제2의 개원일로 생각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라’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에 창업의 마음으로 부응하자고 저도 결의를 다졌고 연구원 식구들을 독려하였다.

12월 5일 연구원 연찬회에서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Let our hearts beat again)”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도전(change and challenge)’을 화두로 제시하였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제품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나 다시 애플로 복귀하면서 직원들을 향해 던진 일성이 “예전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심장이 뛰었었는데 제가 다시 애플로 돌아와 여러분을 보니 심장이 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첫 직장에 처음 출근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회고해 보면 ‘내가 언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초심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첫사랑에 느꼈던 감정을 회고해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다. F.M. 알렉산더는 “일상의 모든 사소한 행위들을 마치 그것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진보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민과 제주 후손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한책임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등산가가 산에서 산화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듯이 연구자는 연구의 현장에서 ‘혼을 다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우문현답(愚問賢答)’ 즉,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현명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연구자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문현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대학교에 22년 동안 봉직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제주도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수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깊은 성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200m 고지인 산에 주로 살다가 가끔 속세로 내려올 때는 느끼지 못했던 치열한 긴장감을 속세로 이주하면서 뻗속 깊이 느끼며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라틴어에 걸으면 해결된다(Solvitur Ambulando)는 말이 있

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매일 5km씩 걸어 왔으므로 산적한 난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걸어야 할 길을 걸을 때 문제는 풀린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을미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민일보 망중한(2014.12.28.)

작지만 강한 싱크탱크를 꿈꾸며

작년 12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으니 어느덧 두 달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만나는 분마다 요즈음 바쁘시죠! 라고 첫인사를 건네신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는 익숙해 있던 터라 물리적 계획을 소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다양한 일들을 새로이 경험하느라 나날이 긴장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취임 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목표는 본인이 대학 재직 시절인 2012년에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5주년 세미나에서 연구원 경쟁력 강화의 목표로 제시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질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연구 역량이 강한 연구원,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는 정책 영향력이 강한 연구원,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연구원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본인의 바람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SC & UP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면 ESC 키를 눌러 문제를 해결

하듯이 연구원이 도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제 자료 및 증거에 근거한(Evidenced-based) 정책연구를 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장을 중시하는(Site-oriented) 정책연구를 하고, 도민, 집행부, 도의회 등 고객에게 집중하는(Customer-oriented) 정책연구를 하자는 전략이며, 이를 통하여 연구원이 제주지역 발전에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하여 최고 및 일류의(Ultimate and Prestigious) 연구원으로 도약해 보자는 전략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창출해 내는 싱크탱크(Think Tank)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전문가들이 국방전략을 논의(Think)하던 안전한 공간(Tank)을 의미하는 합성어로 싱크탱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지식정보사회로 진화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제주지역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이 높아야 하고, 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연구원은 도민과 후손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큰 실

망감을 안겨 주었으나 새로운 감독 슈틸리케를 만난 후 asi 안습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는 팀으로 변모되었다. 슈틸리케 감독이 히딩크에 이어 한국 축구 부활의 새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국민은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라고 하면서도 대표팀이 더욱 발전하는 데 필요한 3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연구원 운영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연구원도 최신의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섬세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연구원도 연구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더 섬세하게 디자인할 것이다. 셋째는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구원도 연구결과의 적시 제공을 통해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반전 스토리가 제주발전연구원의 스토리가 될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 제주매일 아침광장(2015.2.10.)

다이어트 예산

2009년 12월 9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제주로 이사 오면서 살림살이를 많이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왔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방이 세 칸이었던 집에서 두 칸인 집으로 이사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전반부가 모으는 삶이었다면 후반부는 정리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2010년 3월 11일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신 이후 스님의 ‘무소유’ 책을 사기 위한 소위 ‘무소유’ 소유하기 열풍으로 책이 고가에 거래되고, 품귀 현상이 벌어진 ‘무소유’ 1993년 판은 인터넷 옥션에서 110만 5천 원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소유의 정신을 소유하려고 하기 보다는 ‘무소유’의 소장 가치를 소유하려고 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347년 로마 제국의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난 성 요한 크리스스토무스는 그의 저서 단순하게 살기(On Living Simply)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무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시대를 관

통하는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2010년 7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23kg을 감량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라는 어느 식품회사 사장님의 광고 멘트가 곧 나의 답이다. 다이어트와 함께 매일 5km씩 걷고 근육운동도 하니 모든 건강지수가 상승하였다.

다이어트의 부수 효과는 소유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아니며 이 땅에 잠깐 머물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용 가치가 떨어진 물품을 사용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운동으로 e-다이어트, 켄(錢)-다이어트, 어(語)-다이어트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e-다이어트는 컴퓨터, TV,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절제하고, 절제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친구와 관계 회복을 위한 문자 나눔과 편지 쓰기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켄-다이어트는 무분별한 소비와 커피, 기호식, 간식 등 불필요한 과소비를 절제하여 친구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어-다이어트는 잘못된 언어 습관과 언어폭력을 줄이고 상대방을 칭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해 환경으로 인해 날로 황폐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의 삶이 건강해질 것이다.

무소유, 단순하게 살기, 다이어트 모두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옷장

을 열어 보고 신발장을 열어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저 옷을 다
입어보고 저 신발을 다 신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을미년에는 단순하고 슬림하게, 그러나 강하게 사는 삶
(simple and slim but strong life)이 되기를 다짐해 보면서
설 연휴로 인해 불어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다시 운동장으
로 달려간다.

- 제민일보(망중한)(2015.2.22.)

호칭에 합당한 삶

각양각색의 백화가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의 계절이 되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떠오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서 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호칭에 걸맞은 존재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다. 필자 역시 아빠, 교수, 장로, 원장 등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다. 두 딸의 아빠가 된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육아에 참여했고,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두 딸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매주 30분씩 화상통화를 하고 있어 두 딸과 좋은 부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빠를 존경한다고 하니 아빠로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존경받는 아빠로 남기를 다짐해 본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었던 교수의 꿈이 1993년에 제주대학교로 오면서 이루어졌다. 교수를 천직으로 여기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운동하였고, 그들의 행사에 참여하여 소통을 많이 하였다. 1999년 방문 교수로 미국을 가게 되어 많은 학생이 내게 카

드를 주었는데 기내에서 한 장 한 장을 읽어 가며 그들의 진실한 고백에 크게 감동하였고, 생일에 학생들의 축하 메시지가 적힌 롤링 페이퍼를 선물로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하였고, 카톡으로 보내오는 학생들의 메시지는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청량제가 되었다. 교수로서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 정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본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1986년에 서리집사가 되었고, 1989년에 안수집사가 되었다. 그 이후 장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이리 저리 피해 다니다가 2014년에 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되면서 겸손, 섬김, 화해, 위로 등을 다짐하였으나 아직도 내 안에 장로임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어 장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자평하면서 65세 정년까지 매일 매일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기대해 본 적이 없었는데 2014년 12월부터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제주도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수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깊은 성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각오로 일하고 있지만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자평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

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라는 연설로 행동하는 사람 (Man of Action)으로 불리셨고,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는 소신을 죽기까지 몸소 실천하셨으며, “실패는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남기는 법이야”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故 이종욱 박사 (1945-2006)는 나의 꽃이 되고 있다. ‘꽃’의 다른 구절인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를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 제민일보 망중한(2015.5.3.)

내가 걷는 이유

직립 인간(homo erectus)이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걷기 결핍으로 다양한 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처방전인 규칙적인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걷기’이다. 나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16년째 매일 5km 이상을 규칙적으로 걷고 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스마트폰의 걷기 앱을 확인해 보니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11km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운동이 열풍인데 사람들이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하다.

첫째,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걸으면 비만, 요통, 고혈압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의 경우 5km를 걸으면 체중은 500g 감소하고, 10km를 걸으면 1kg 감소한다. 허리가 아플 때는 집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운동장으로 나가 걸으면 빨리 요통이 사라지는 것을 매번 체험하고 있다. 언젠가 바쁘다는 핑계로 걷기에 소홀히 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걸으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둘째, 걸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라틴어 중 solvitur ambulando라는 것이 있는데 직역하면 ‘걸으면 해결된다’이다. 규칙적인 산책으로 유명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걸을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였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걷기가 창조적인 생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걷는 것과 앉아있는 동안의 창조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걷는 동안 창조적인 내용이 평균 60%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걸으면서 미팅한다고 한다. 나도 걸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각종 회의에서 해야 할 말에 대해 생각한다.

셋째, 걸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신문을 느긋하게 보거나 TV 뉴스를 들을 시간이 없다. 아침에 걸으면서 라디오로 아침뉴스와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매일 고전으로 배우는 경영을 듣고 주말에는 국내 저명 강사들의 경제특강을 들으면서 연구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넷째, 걸으면 다른 사람을 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학교 대운동장 트랙을 걷는데 나 외에도 두 분이 더 걸으신다. 그중 한 분은 자주 걸으시지만 매일 걷지는 않

으신다.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걸을지 걷지 않을지 같듯이 생
길 때 운동장에 나가면 내가 걷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걸으러 나오신다는 것이다. 그 말씀 때문
에 나도 더 큰 책임감으로 걷고 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걷는 시간은 소모되는 것
이 아니고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지식 축적을 위해 투자되
는 것이다.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걸어야 한다. 나는 은퇴
전에 걸어 보고 싶은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제주의 올레
길을 모두 걸어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보는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의 남은 인
생을 설계하고 싶다. 걸으면 해결되리라.

- 제민일보 망중한(2015.7.12.)

청정과 공존! 나의 핵심 가치는?

서양 사람들이 가문을 나타내는 방패나 문장에 기록한 문구를 모토(motto)라고 하는데 살아가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조로 삼는 말로 가문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통된 좌우명이므로 가문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 명문가들의 모토 중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는 보일(Boyle) 가문의 ‘미덕은 죽음 뒤에도 남는다’, 크로스비(Crosby) 가문의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커리(Curry) 가문의 ‘용감하고 관대하라’ 등이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보면서 콘로이(Conroy) 가문의 ‘역사는 시간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라는 모토와 퀴란(Quinlan) 가문의 ‘최후까지 진실로’라는 모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진 모토라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시대의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그 시대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섬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핵심 가치는 종교개혁운동으로 촉발된 개혁 정신(프로테스탄티즘)이며, 황량한 신대륙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은 순례 시조(Pilgrim Fathers)에 의해 시작된 개척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은 새마을 정신이며, 오늘의 제주는 수놓음 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라고 하여 부강, 애국, 문명 등 12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국굴기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인 제주 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1)을 수립한 이래 많은 종합개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2조 6,740억 원에서 2013년 12조 6,640억 원으로 4.7배 증가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원희룡 도정은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주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올해 말에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도민(청소년)계획단이 6차례의 열띤 논의를 거쳐 제주 비전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선정하였다. ‘청정’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여 가치를 키우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제주’를 의미하며, ‘공존’은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의미한다.

도민(청소년)계획단에서 만든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도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이나 개인의 핵심 가치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에 기초하여 가훈이나 좌우명을 만들어 보거나, 가훈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에 비추어 점검해 보거나 해석해 보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 개인의 핵심 가치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든 ‘꾸준하게, 성실하게(堅持·誠實, 견지·성실)’이고, 필자 가족의 핵심 가치는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寬人嚴己, 관인엄기)’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과 남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 제민일보 망중한(2015.9.13.)

제주상공회의소 창립 80주년을 축하하며

제주상공회의소가 창립 80주년을 맞게 됨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주상공회의소의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민들은 공동으로 자본 투자를 통해 제조업, 운수업, 상업의 분야에서 다수의 법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935년 임의단체인 제주상공회가 설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52년 공법인으로 위상을 강화한 제주상공회의소는 상공진흥 사업, 회원 서비스사업, 연구·건의 사업, 조사 사업, 국제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06년 7월 제주상공인들의 전당인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제주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대표 단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경제시대에 진입하면서 제주상공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지구촌은 누비는 제주상공인을 초청하여 4회에 걸쳐 ‘글로벌 제상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로써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대내

외에 알리고 제주상공회의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지역기업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 애로 해소 종합지원 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특허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위해 ‘제주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으며,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산업계 스스로 지역 인력 및 훈련에 대한 수요·공급 조사를 통해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제 제주상공회의소는 “성공 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를 미래 비전으로 삼고 창립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 결승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직의 기능 강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부고객을 만족시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고, 기존 회원사와 잠재 회원사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어 신규 회원 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고객 및 회원사들의 결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주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제주상공회의소 부설 연구소인 지역경제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조사 및 연구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좋은 연구 자료가 있어야 좋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제주상공회의소는 많은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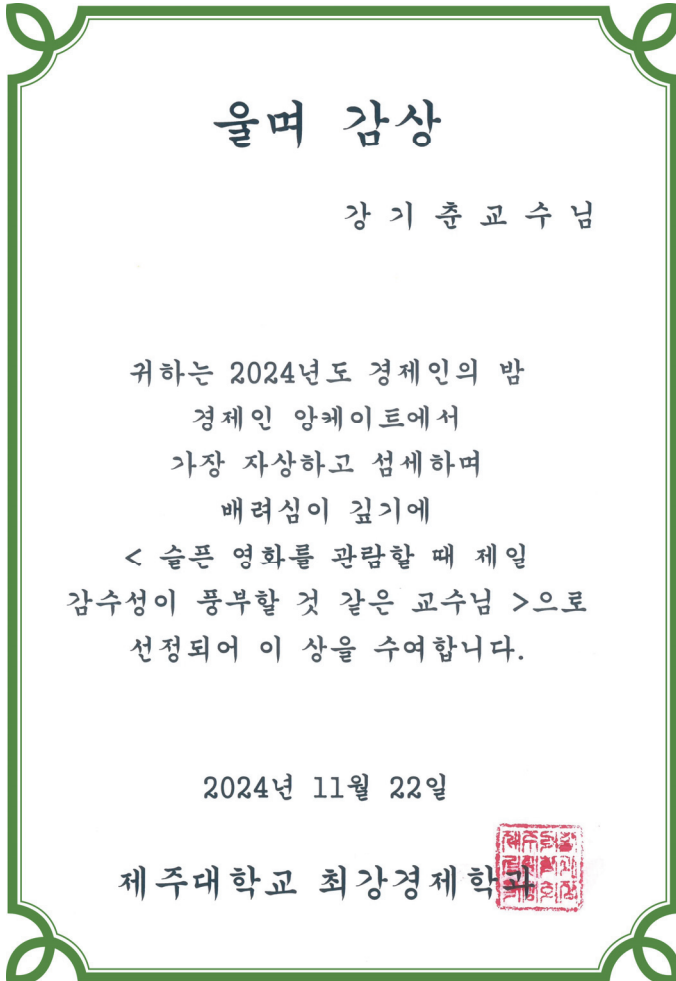
셋째, 제주상공회의소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해외 정보 수집 및 도민 공유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상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되살려 제주 경제의 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제주인 대회’를 반드시 출범시키고 지속시키기를 희망한다.

지금 기업들은 중국발 경제위기 등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기업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위기라는 단어를 ‘하나의 위협하다’라는 뜻이고, ‘하나의 기회다’라는 뜻으로 말했다. 위험한 가운데서 기회를 잡은 자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상공회의소도 작금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또 다른 100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창립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점에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계의 가장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주상공회의소를 기대한다.

- 제주매일 특별기고(2015.10.28.)



나는 오늘도 뛰고 있는가?

최근 서울공대 교수들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한 책이 발간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선진국에 밀리고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성장과 경쟁력의 위기에 몰린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등 문제의 속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개념설계’ 역량의 부재로 진단하고, 새롭게 접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해법으로 제시해 보고,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의 축적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열심히 해도 제자리를 지킬 수 없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은 엘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하고 뛰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상대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을 ‘붉은 여왕 효과(Red Queen effect)’라고 한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놀다가 우유가 담긴 양동이에 빠진 이솝 우화가 있다. 한 마리의 개구리는 양동이에 빠진 뒤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였고, 다른 한 마리의 개구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다리를 움직여 헤엄친 덕분에 우유에서 변한 버터 덩어리를 딛고 양동이를 빠져 나왔다.

이윽고는 격몽요결에서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바쁜 습관에 대해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이다. 안중근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햇바닥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라고 하였다. 시빌 페트리지는 “오늘을 살자. 오늘의 가치 있는 결정과 선택이 내일도 보람 있게 함을 믿으며 살자”라고 하였다.

모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말하고 있으며, 매 순간 완전연소하는 삶을 살 것을 충고하고 있다.

핸드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아껴 쓸수록 수명이 길어질 것 같지만 잔량 없이 소진한 후 완전히 충전하고 사용하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우리도 축적된 에너지를 그날 완전히 소

진하고 휴식을 통해 100%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다음날을 죽으라고 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해지고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TV를 볼 시간이 없지만 주말 저녁에 복면가왕을 즐겨 보는 편이다. 지난 22일 저녁에 캣츠 걸, 코스모스, 귀뚜라미가 치열한 명승부를 펼쳤다. 이를 보고 가수 판정단의 L가수가 “녹화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노래하러 가고 싶다”라고 했다. 그의 말이 나에게는 이들이 펼친 명승부에 자극받아 더욱 열심히 노래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남보다 앞서기보다 제자리에라도 있고 싶다면 지금 죽어라 뛰어야 한다.

- 제민일보 망중한(2015.11.29.)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성과를 창출하는 해를 꿈꾸며

2015년 양의 해는 가고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시작되었다. 2015년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하여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평해 본다.

‘제주 미래 비전 계획’ 수립에서 도민계획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주요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고, 도내 외 정책 이슈를 파악한 ‘정책 동향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중국 관련 연구 강화를 위한 ‘중국연구센터’를 신설하여 ‘JDI China 知 Forum’ 개최, ‘China Issue Brief’, ‘China Info’, ‘China Weekly’ 등 중국 관련 정책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하는 연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JDI Omni-Studia’, ‘JDI Humanitas Colloquium’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과제를 남긴 한 해이기도 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가 수요자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도민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을 ‘수요자를 감동하게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선포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국내외 정책 동향에 기초한 브리프 형태의 제주 대응을 수시로 발간하고, 연구원 내 JDI Koinonia-Seminar'를 통해 정책논의를 체계화하여 정책의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며, 정책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JDI Omni-Studia' 운영과 주요 정책 관련 스터디 그룹 형성을 유도하여 정책연구 관련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선제적 현안 대응 연구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연구 분야별 풍부한 인력풀 운영을 위한 전문가 DB 구축을 통해 도내 외 최고의 전문가 생태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현안·미래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현안 대응 및 제주 미래 아젠다를 도출하며,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된 정기적 정책 협의회를 통해 정책연구 협의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는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연구원 내 발족한 '제2공항 연구단'을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각종 종합계획 반영 방안, 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방향 등 제2공항 건설에 대응하는 연구를 추진하며, '제주 미래 비전 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추진과 'Carbon Free Island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2014~201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첼시가 2015~2016시즌에서는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면서 사령탑이 히딩크 감독으로 교체되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팀에 공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프로가 되어 최선을 다해 팀에 공헌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연구원 운영과 연구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성과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보다 먼저 실행하는 제주발전연구원’, ‘작은 변화를 모아 혁신을 이루어 가는 제주발전연구원’,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직면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탐라국이 고려에 편입된 이후 지난 1,0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제주가 최근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의 꿈을 현실화시켜 제주의 미래를 풍요하게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여 제주 발전의 진앙이 제주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제주매일 아침광장(2016.1.17.)

옷장을 열면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옷장을 열어 보니 옷이 가득 차 있다. 어느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을 자연스럽게 골랐다.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선택되지 못한 채 한 계절 내내 바깥 구경을 해보지 못한 옷들이 많이 있게 된다. 옷을 평소에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 가끔 옷장을 정리하여 의류 수거함에 가져다 놓기도 하지만 한 계절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 많이 있다. 신발장은 어떤가? 운동화, 구두, 부츠, 캐주얼화, 등산화, 슬리퍼 등 다양한 종류의 신발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장롱 속은 어떤가? 핸드백, 서류 가방, 배낭, 여행용 가방 등이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수명이 다할 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물건을 사는데 큰 관심은 없지만 유독 볼펜 수집에 욕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할 때 볼펜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명품 볼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돈을 주고 볼펜을 사서 모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물로 받거나 선물하고 남은 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모아두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모아둔 것이 어느덧 20여 자루가 되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하면서도 볼펜 부자가 된 마음에 그냥 지나치고 했다. 작년 연말 이 욕심

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불펜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래리 버켓은 소비의 동기를 구분하고 우리가 소비할 때 소비의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구입하는 것을 필요(needs)라고 하면서 이 동기에 따른 소비는 당연하다고 보았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것을 욕구(wants)라고 하면서 이 동기에 따른 소비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사치나 자기과시를 위해 구입하는 것을 욕망(desires)이라고 하면서 이 동기에 따른 소비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물론 소비의 동기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의 필요, 욕구, 욕망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확고한 태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청빈의 삶을 살자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스스로 가난함에 이르는 영성적 가난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근검절약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소비를 줄여 이웃을 돕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옷장과 신발장과 장롱을 열어 보자. 지난 겨울 동안에 한 번도 입지 않았

든 옷이나 신지 않았든 신발들, 몸무게의 변화로 크거나 작게 된 옷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가방들을 정리하여 의류 수거함에 넣거나, 아름다운 가게나 바자회 등에 기증해 보면 어떨까?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부자가 됨을 올봄에 한 번 체험해 보자.

- 제민일보 망중한(2016.2.21.)

내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먹고 싶었던 것은 자장면이고, 하고 싶었던 것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

나라마다 목욕문화가 다르다. 스파의 원조인 벨기에는 목욕을 치료로 활용한다. 일본인들은 피로를 풀고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하여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러 가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습관이 없다. 인도는 목욕을 단순히 위생을 떠나 정신의 때를 벗기고 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목욕문화는 시대별로 변천됐다. 신라시대에는 목욕이 신체를 깨끗이 하는 청결에서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목욕을 했다. 개방 이후 대중목욕탕이 생기면서 청결과 피로 회복이 목욕문화로 자리 잡았고, 찜질방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담소도 나누고 몸의 피로를 푸는 목욕문화로 진화되었다.

필자는 매주 토요일 오후 늦게 목욕탕을 간다. 목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먼저 샤워를 한다. 샤워할 때 흘러 내려가는 비눗방울이 한 주간 동안 쌓였다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피로 덩어리처럼 보이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피로 회복의 목욕이다.

샤워하고 나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땀을 뻘뻘 뀌고 10분이 지나 온몸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면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몸속의 노폐물이 땀방울 속에 섞여 나오는 것을 느낀다. 또한 땀을 빼고 나면 혈액 순환이 잘 되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낀다. 사우나는 육체적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잡념들을 말끔히 없애주어 정신적 피로도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 치료의 목욕이다.

사우나를 마치면 다시 샤워한 뒤 때를 벗긴다. 일주일 전에 때를 모두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타월에 묻어 나오는 몸의 때를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온갖 욕심과 근심 걱정에서 찌든 모습들을 돌이켜 본다.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큰 실수나 과오는 없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저질렀던 잘못들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때를 벗기듯 마음을 정화해 본다. 정신 정화의 목욕이다.

때를 다 벗긴 후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샤워를 하면서 새로 시작될 한 주간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한다.

규칙적인 활동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모두 이로운 것 같다. 매 주일 목욕탕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마 가지지 못했더라면 필자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피폐해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청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잇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날로 무디어져가고 있는 자신을 칼날을 갈 듯 갈아 주고, 초심을 잃어 가는 자신을 처음처럼 회복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끼이고 있는 몸과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내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이다.

- 제민일보 망중환(2016.5.1.)

규제프리존 도입, 빠를수록 좋다

2015년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설정하고, 관련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제안되었고, 2015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지정,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발의로 지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산업 경쟁력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국가 발전의 두 축은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중국의 중관춘 등은 지역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한때 우리나라의 빠른 정책화를 부러워하던 일본은 20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동인으로 한 국가 전략 특구를 2014년 3월부터 도입하여 9개 도시권을 지역거점으로 조성하였다.

규제프리존이란 14개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해당 지역 해당 산업에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 지역 B 산업에만 투자, 기술개발, 창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인재 유입→지역 경쟁력 강화→국가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은 몇 가지 면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성이 있다.

첫째, 규제프리존은 지역과 중앙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역에서 원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면 중앙에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구도이다.

둘째, 규제프리존은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산업 간 유사성과 보완성을 고려한 융복합 모델이다. 기존의 정책들은 산업 간에 다양하게 얹혀 있는 융복합 분야의 규제완화를 고려하지 못하였지만 규제프리존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있다.

셋째, 규제프리존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한 확장 모델이다. 전국적 규제완화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베드이며, 테스트 베드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규제 특례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정책 시차를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두 자릿수의 고도 경제성장에서, 1990년대 및 2000년대는 4%대 저성장으로 급락하였고, 2010년 이후 2%~3%대의 초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국가 경제가 초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 지역 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저성장→인적자본 쇠퇴 및 유출→저성장의 악순환 구조로 지역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및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생법안이며 경제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프리존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의 24자 방침에 냉정관찰(냉정하게 지켜본다)이 있고 중국의 외교정책에 유소작위(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가 있다. 각 지자체가 냉정관찰과 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적의 규제 개선안을 만들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정책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규제 개혁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때마침 정치권이 원칙적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니 19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유소작위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 제주일보 제주광장(2016.5.17.)

한-러 극동 포럼을 다녀와서

제6차 한-러 극동 포럼이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어 패넬로 참가하고 돌아왔다. 7일 오후는 한-러 간 민간 차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나는 국가 간 협력에서 인프라 건설 및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하드웨어 및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휴먼웨어로 구분하고 인프라가 곧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임을 역설하였다. 리눅스 토르발즈가 공개한 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 애플이 개발하여 제공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플랫폼인 윈도우 홀로그래픽(Holographic) 등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듯이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계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시내 중심부로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로디나백화점 빌딩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에 아름다운 제주가 동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러시아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의 투자진흥지구와 유사한 선도개발 구역을 최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고,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주변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한 자유항으로 지정하였다. 8일 오전 세션에서 나는 어젯밤에 본 제주 홍보영상을 언급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소개하였다.

지난 1,0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제주가 최근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부상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제주의 특징을 핫플레이스(hot place), 최전선(front line), 테스트베드(test bed) 등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제주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 인구 증가, 해외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면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면에서 국내 최고의 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hot place), 한반도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먼저 발생하고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front line),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수행되는 지역(test bed)이라고 소개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로 2010년 이후 제주경제가 활성화되어 전국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무비자 시행으로 인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빠른 증가와 그에 따른 중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 국내 기업의 제주이전 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부진하였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추진 주체의 역량이 다소 부족한 점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

기 위해 중앙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하였고, 일부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JDC가 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다는 소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제주 크루즈 관광을 소개하고 향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중국-제주-일본-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안하자 세션이 종료된 후 극동개발부 국장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많은 국가나 지역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성공 사례(best practice)들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포럼이었다.

- 제주매일 아침광장(2016.6.13.)

요즘 잘 주무세요?

연일 지속되는 열대야로 밤이 두렵고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다. 잠이 들었다가도 이내 깨게 되고 시계를 보면 한밤중이다. 게다가 모기까지 잠을 방해하면 그 밤은 더욱 길어진다. 잘자는 것은 잘 먹고, 운동하는 것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수면시간이 부족할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고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잠을 제대로 잔다는 것은 수면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자느냐 즉,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국내 모 광고에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발명왕 에디슨이 등장한다. 수면의 시간보다 수면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결혼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별로 잔소리를 안 하던 처가 최근에 “잠 좀 자세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라고 걱정이 담긴 불멘소리를 하였다. 두 딸도 “아빠! 좀 더 주무세요”라고 걱정하며 부탁하였다. 필자는 일단 잠자리에 들면 5분 이내에 잠이 들고 4시 반이면 가뿐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시간은 부족할 수 있어도 숙면을 해서 괜찮다고 변명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숙면하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수면시간도 부족하고 숙면도 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국제수면학회가 권장하는 하루 수면시간은 성인의 경우 7시간 30분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 35분으로 미국의 7~9시간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할 때 숙면할 수 있으며,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번민이 있다는 것이므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생각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린 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지겠지만 필자는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선물, 부담이 생기면 뇌물로 구분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받고 나서 밤에 잠이 잘 오면 선물, 그렇지 못하면 뇌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비밀은 없다. 요즘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빅 브라더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물론 건전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일을 사생활이라는 구실로 숨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이 투명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다.

‘맞은 사람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하고 투명한 생활로 두 발 뻗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될 것이다. 요즘 잘 주무세요?

- 제민일보 망중한(2016.7.31.)

기록 DNA를 활성화하자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 최초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전체 285건 중 13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생활사를 엿볼 수 있을 뿐만 각종 역사 관련 창작물의 플랫폼이 되고 있고, 승정원일기는 글자 수가 2억 4천여 만 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역사 기록으로 현재 약 10% 정도만 번역되어 있지만 향후 스토리텔링 소재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하니 기록문화는 우리 민족의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기록문화를 가진 선조들의 DNA가 유전되어 서인지 필자도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유용함을 누리고 있다.

첫째, 직업과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20여 년 전에 개인 홈페이지(<http://kanggc.iptime.org>)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강의록, 강의 동영상, 기출문제, 연구논문, 기고문, 각종 데이터, 직접 부른 애창곡, 사회활동 내용 등 모든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 지난번 제주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홈페이지 정보를 보고 특강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다.

둘째, 건강 관련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7년 4개월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였는데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월별로 분석하기도 하고, 199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 자료들을 엑셀에 저장하여 각종 건강지표의 추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다이어트 전과 후의 건강검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혈압이나 간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일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음식 조절을 하므로 요요현상 없이 몸무게를 잘 관리하고 있다.

셋째, 재정 관련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3년에 제주대학에 부임한 이후 급여명세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퇴임할 때 급여 추이와 경제지표의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 외에 각종 수입에 따른 십일조와 교회에 바치는 각종 헌금을 엑셀로 관리함으로써 교회에 바쳐야 할 헌금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각종 대출금과 저축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자동차 관련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언제, 몇 킬로미터에, 무엇을, 얼마에 수리했는지 등 자동차 수리 명세를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할

오일이나 부품 등의 교환 시기를 사전에 알 수 있다. 또한 차를 매각할 때 구매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

다섯째, 자녀들 성장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부모들은 모두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신기해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두 딸을 키우면서 디지털카메라가 나오기 전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큰딸 2,000여 장, 둘째 딸 1,300여 장 되고, 또한 12편의 동영상을 찍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 선물로 줄 계획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기록 DNA로 자신만의 기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 제민일보 망중한(2016.12.18.)

행동하는 연구원(員), 경쟁력 있는 연구원(院)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선제 대응을 위한 연구를 하였고, 특히 ‘제주 미래 비전 실행 연구단’, ‘제2공항 연구단’, ‘카본프리 아일랜드 연구단’ 등 3개 중점연구단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과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제주도정과 정책협의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창의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매주 원내 Koinonia-Seminar를 통해 토론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설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재정사업 투자심사·타당성 검토·예비타당성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과제를 남긴 2016년이기도 했다. 2017년은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성과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창의적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첫째, 제주도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제주 가치 구현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와 제주경제의 주기적 평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창출하며, 현안 정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 미래 아젠다를 도출할 것이다.

둘째, 중점연구단 운영 강화와 미래 신산업 발굴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주거, 교통, 쓰레기 등 도시 3대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도시 3대 문제 개선 연구단’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발굴 연구단’을 구성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산업 발굴과 산업간 융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연구원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것이다. 현안 대응 전담 인력과 빅데이터센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연구, 정책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며, 많은 분의 도움으로 확정된 연구원 청사 증축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것이다. 특히 청사 증축은 연구원 공간 확보를 넘어 제주 연구자료관 및 미래 교육 공간 운영 등을 통해 도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국제회의실 및 글로벌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유명 석학과 함께하는 연구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작지만 더욱 강한’ 연구원으로 비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왔던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제주발전연구원과 모든 연구원은 남들과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무엇을 앞서고 있는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것이다.

중국 고어에 ‘모두가 장작을 주워 오면 불꽃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고, 주역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은 쇠도 자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즉, ‘실천이 말보다 낫다’라고 했다.

원장이 솔선수범하여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붓고 구성원 모두의 장작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행동하는 연구원(員), 경쟁력 있는 연구원(院)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다.

- 제주매일 아침광장(2017.1.15.)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호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인사유명)’는 옛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윌리엄 보덴(William Borden)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필자의 결혼생활과 연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덴은 188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1913년에 26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부호여서 세계일주여행을 보덴의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주었다. 보덴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하였다.

보덴은 미국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하기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정리하면서 ‘No Reserve 즉,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기록하였다.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가업을 이어 달라는 연락이 가족한테서 왔지만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는 각오로 ‘No Retreat 즉,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기록하였다.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러 이집트로 갔으나 넉 달 만에 척수뇌막염에 걸렸고 그 이후 한 달도 못 되어 죽었다. 그의 유품이 미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성경책에 ‘No Regret 즉,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보텐의 삶의 철학은 필자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No Reserve는 ‘비밀 없기’로 적용하고 있다. 처가 모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도 처에게 비밀로 하지 않는다. No Retreat는 ‘후퇴하지 않기’로 적용하고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잠시 쉬어 가더라도 절대로 후퇴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한다. 갈등이 생기면 처를 변화시키려고 설득하기보다는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처의 단점을 보는 눈을 감고 장점을 보는 눈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No Regret는 ‘후회하지 않기’로 적용하고 있다. 인생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처를 감동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텐의 삶의 철학은 연구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No Reserve ‘혼을 다하기’로 적용하고 있다. 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연구를 수행할 때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No Retreat는 ‘후퇴하지 않기’이니 한번 시작한 연구는 연구보고서가 인쇄되어 나올 때까지 일보의 후퇴함도 없이 전력으로 질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No Regret는 ‘후회하지 않기’이니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연구 활동을 결산하면서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텐은 요절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 중국 감

숙성 난주에 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병원(The Borden Memorial Hospital)을 세워 중국의 무슬림들을 치료해 주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삶은 어떻게 기억될까?

- 제민일보 망중한(2017.3.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나아갈 방향

5월 15일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된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최고의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면 JDC는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한다.

먼저 지난 15년 동안 JDC가 이룬 성과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점, 제주도정과 협업이 부족한 점, 보존보다는 개발에 치중한 점, 양적 성장에 치중한 점,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또한 1차 계획기간(2002~2011년) 중 JDC가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54.1%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이 비율이 14.9%에 불과했으며, 2차 계획기간(2012-2021) 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 JDC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 역시 41.4%로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작년 11월에 취임한 이사장 체제에서 제주도정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비전과 상통하는 환경, 생명, 문화 등 제

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성숙한 개발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한 점은 국가나 제주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JDC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과 성숙한 개발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JDC의 기능 및 사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를 점검하고, 민간 영역에 침범하여 시장을 구축(crowding out)하거나 민간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여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각종 정책계획의 지침계획이 되는 제주 미래 비전이 2016년 수립되었고 또한 최고의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JDC는 2012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변경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므로 동 계획에서는 지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JDC가 향후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JDC와 제주도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유가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의 예로는 제주 자연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JDC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 자산관리 신탁공사와 제주공항공사의 설립 또는 운영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국가 발전전략이면서 동시에 제주 발전전략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JDC와 지방공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 관광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면서 JDC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의료관광이나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들 수 있으며, 사람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JDC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조성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사무 공간·주거 공간·협업 공간이 결합된 ICT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투자자 매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ICT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해야 하며,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의 플랫폼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코딩스쿨인 S/W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기초교육 및 융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제주매일 아침광장(2017.4.30.)

Think different, Act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는 애플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애플 제품에 사용한 광고 문구로써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된 지 12년 만에 애플로 돌아왔을 때 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다.

평소 개혁과 혁신에 관심이 많아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을 산다. 지난 3월에 책장을 스캔하다가 몇 년 전에 산 혁신에 관한 책을 발견하였다. 책을 읽어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아 연구원들에게 일독을 권한 적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과 기업들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한 결과 개인과 조직이 생각을 다르게(Think different) 하려면 행동을 다르게(Act different)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에서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저스와 같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 많은 혁신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시쳇말로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은 뛰는데 행동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가 1년여 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M.tree라는 비영리단체 최영환 대표의 이야기는 이 시대 청년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감동적이고 우리의 손발을 꿈틀거리게 할 만큼 피부에 와 닿는다.

그는 한동대학에 다니면서 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가!(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에 도전을 받았다. 인터넷도 휴대폰도 되지 않는 최전방 군대에서 청년들에게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우유곽에 편지를 써서 명사들에게 강의를 요청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28인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청년들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가 담긴 강연을 엮어 ‘우유곽대학을 빌려 드립니다’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는(Think global, Act global) 것이었다. 1년에 1개월만 한국에서 일하고, 6개월은 뉴욕, 3개월은 파리와 런던, 2개월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전문 인력의 재능 기부를 받아 개발도상국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꿈을 가지고 무일푼으로 뉴욕으로 날아가서 M.tree를 설립하였다.

2011년 서아프리카의 베냉(Benin)에서 붓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 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최초로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염색이나 스케치 등의 패션 디자인 교육 프로젝트, 흙과 재생용품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기법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축 프로젝트, 노래를 가르치는 오페라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00년 동안 한반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제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진원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추

진 중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다르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여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 제민일보 망중환(2017.6.18.)

사칙연산(+ - × ÷) 활용법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연산 기호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14세기경부터 17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간단한 사칙연산조차도 활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구구단을 외우고 활용하고 있지만 수학과 IT 강국인 인도는 십구단을 외우고 활용하고 있다. 덧셈과 뺄셈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게에서 7,400원어치 물건을 사고 만 원을 주면 만원 빼기 7,400원은 2,600원으로 계산해서 거스름돈을 주지만 미국에서는 7,400원에서 시작하여 더하여 만원을 채운 후에 그 돈을 거스름돈으로 준다. 사칙연산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요즘은 전자계산기와 POS 단말기의 발달로 사칙연산도 무디어져 계산 실수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칙연산 기호를 생활에서 재미있게 활용하는 사례들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더하기(+)는 새롭게 추가했으면 하는 것, 빼기(-)는 중단되거나 삭제했으면 하는 것, 곱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 나누기(÷)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베풀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 여행사가 여행 마일리지를 홍보하면서 마일리지 +, 여행 갈 때 -, 기쁨 두 배 x, 여행 부담 ÷ 등 사칙연산 기호를 마케팅 목적으로 포스터에 활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여행하면서 마일리지 적립하고(+), 적립한 마일리지 여행 갈 때 사용하니(-), 기쁨이 두 배가 되고(x), 여행 부담은 줄어든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일자리 더하기(+), 지역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빼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창조경제 곱하기(x), 삶의 질을 높이는 희망 나누기(÷)로 압축하여 제시한 바 있다. 사칙연산을 활용하니 정책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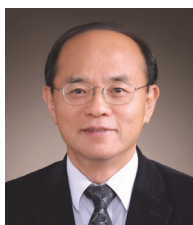
필자는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는 공동 연구(+), 공동 연구, 융복합 연구, 분업 연구에 장애가 되는 닫힌 마음, 닫힌 눈, 닫힌 귀 포기하기(-),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같이하는 융복합 연구(x), 연구자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연구하는 분업 연구(÷)를 연구원들에게 제시하고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도 사칙연산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정당한 일에 적극 참가하기(+), 정당하지 않은 일이나 불로소득과 관계된 일은 포기하기(-),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이웃을 돕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x),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일 연습하기(÷)를 사회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연산 기호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칙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실천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한다면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제민일보 망중환(2017.9.10.)

履 歷



個人身上

- 姓名：姜 起 春(Kang, Gi Choon)
- 住所：濟州市 齊州大學路 64-29 아라인빌 D-102
- 電話：064-754-31680(연구실)
010-5417-3168(모바일)
- E-mail：kanggc@cjejunu.ac.kr
- Homepage：http://kanggc.iptime.org

學 歷

- 1976年 3月 - 1979年 2月 釜山 錦城高等學校
- 1979年 3月 - 1983年 2月 高麗大學校 政經大學 經濟學科
(經濟學士)
- 1986年 8月 - 1992年 5月 美國 Iowa(아이오와) 州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博士)

最終 學位

- 수여일자: 1992년 5월 16일
- 논문제목: The Sectoral Analysis of Business Cycles:
The Role of Aggregate and Disaggregate Shocks
- 지도교수: Peter F. Orazem
- 전공: 거시경제 및 계량경제

經 歷

- 1983년 1월 - 1986년 6월 하나銀行(前 金星投資金融)
- 1988년 1월 - 1991년 12월 Iowa 州立大學校 講義助教
(Teaching Assistant)
- 1992년 2월 - 1992년 11월 東洋證券(前 東洋經濟研究所)
責任研究員
- 1993년 3월 - 1995년 3월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專任講師
- 1995년 4월 - 1999년 3월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助教授
- 1999년 3월 - 1999년 12월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學科長
- 1999년 4월 - 2004년 3월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 1999년 12월 - 2000년 8월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2000年 9月 - 2001年 2月 Iow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01年 3月 - 2002年 12月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學科長
- 2002年 10月 - 2002年 12月 濟州道 自治經濟局 經濟政策
課 地方契約職(비전임)
- 2004년 4월 - 2005年 12月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教授
- 2004年 6月 - 2004年 8月 韓國銀行 金融經濟研究院 客員
研究員
- 2005年 9月 - 2005年 11月 濟州大學校 大學院 副院長
- 2005年 12月 - 2008年 12月 濟州大學校 休職
- 2005年 12月 - 2008年 12月 監查院 監查研究院 社會·行
政評價研究팀長(3級 契約職)
- 2008年 12月 - 2014年 11月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
科 教授
- 2012年 3月 - 2014年 2月 濟州大學校 觀光과 經營經濟研
究所 所長
- 2014年 12月 - 2017年 11月 濟州研究院長 / 濟州特別自
治道平生教育辰興院長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 제19대 회장 역임
- 2017年 12月 - 現在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教授
- 2023年 3月 - 2024年 2月 Delaware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賞 勳

- 2001年 12月 제주도지사 표창패(제4820호)
- 2010年 9月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감사패(제2010-242호)
- 2010年 12月 31日 제주대학교총장 표창패(제5066호)
(2010년 제1학기 강의평가 최우수교수)
- 2012年 5月 25日 제주대학교총장 표창패(제5711호)
(2011년 제2학기 강의평가 최우수교수)
- 2013年 5月 제주대학교총장 공로패(제6226호)
- 2013年 7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패(제895호)
- 2019年 5月 24日 한국산학기술학회 우수 논문상
(제19-218호)
- 2020年 12月 17日 한국수산경영학회 남곡학술상
(우수논문상)
- 2021年 12月 16日 한국수산경영학회 남곡학술상
(최우수논문상)
- 2022年 1月 3日 제주대학교총장 표창장(제9456호)
(2021년 제1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수)
- 2024年 5月 제주대학교총장 공로패(제10302호)

研究論文

1. 다부문 실물경기이론에 대한 실증분석-1970년부터 1992년 12월까지의 한국자료를 이용-, 강기춘, 1993.12,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7집.
2. 경기변동의 이론 및 실증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강기춘, 1994.6,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8집.
3. 산업별 생산변동에 있어서 총체적 충격과 부문충격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1970년부터 1992년 12월까지의 한국자료를 이용-, 강기춘, 1994.12,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9집.
4. 지역총생산(GRP)의 장기 지속성 및 공동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강기춘, 1995.8,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11집.
5. 실질환율의 추세 및 순환요인의 분해, 김진옥·강기춘, 1996.3,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연세경제연구 제3권 제1호.
6. 구조VAR모형을 이용한 고전적 이분법에 대한 실증분석, 강기춘, 1996.8,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제12집.
7.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변동에 있어서 충격과 전파과정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강기춘, 1996.12,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제7집.
8. 거시경제충격이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IS-LM모형을 이용-, 강기춘, 1998.8,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

전연구 제14집.

9. 금리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강기춘, 1999.2,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제13집.
10.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전력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강기춘·양상돈, 1999.2,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산경논집 제13집.
11. Measuring Persistence of Shock by Industry Using the Multisectoral Model, Gi Choon Kang, Spring 1999, Journal of Island Studies Vol II Number 1.
12. 지역별 산업생산의 경기순환적 특징, 강기춘, 1999.8,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제1집
13. A Study on the Sectoral Business Cycles in Korea and Taiwan using the Multi-sector Model, Gi Choon Kang, Summer 2000, Korean Economic Review Vol.16 Number 1.
14. 제주지역 토지거래와 지가의 관계, 강기춘, 2003.2.25,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 제13권 제4호
15. 노동공급과 복지프로그램 참여의 공동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강기춘, 2003.3, 한국경영경제학회, 한국경영경제연구 제3권 제1호.
16. The Relative Importance of Aggregate and Disaggregate Shocks in Korean Business Cycles, Gi Choon Kang and P. F. Orazem,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4.3, May-June, 2003.

17. 산업별 생산에 있어서 충격의 지속성 및 전파 측정, 강기춘, 2003.8,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산경논집 제 19집.
18. 쇼핑아울렛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강기춘·고성보, 2003.12, 제주경제개발연구소, 경제개발연구 제6권 제1호.
19. 지역경기변동의 충격과 전파과정에 관한 연구, 강기춘, 2004.3, 한국경영경제학회, 한국경영경제연구 제4권 제1호.
20. 제주도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길·강기춘, 2004.6,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25집.
21. An empirical analysis of joint decisions on labour supply and welfare participation, Gi Choon Kang, Sonya Huffman and Helen Jensen,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11 No.14, November, 2004.
22. The Implementing Strateg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Gi Choon Kang, 2004.12,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26집.
23. 독점력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경주·강기춘, 2005.3, 한국경영경제연구 제5권 제1호.
24.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의 개발, 고성보·강기춘·임소진, 2005.6, 한국지역경제연구 제5집.
25.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강기춘, 2005.6,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26집.
26. 제주경제 생산구조 현황 및 특징, 강기춘, 2009.7,

GRDP 통계로 본 제주경제 현황 및 특징(2009년 상반기 제주경제 리서치세미나 자료집, 한국은행 제주본부).

27.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 따른 출구전략 논의의 시사점, 강기춘, 2009.12, 제주발전연구 제13호.
28. 제주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춘·이경주, 2011.2, 한일경상논집 제50권.
29. 제주지역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최종수요부문을 중심으로-, 강연실·강기춘, 2012.8, 산경논집 제29집.
30. 제주지역 경제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고봉현·강기춘·강연실, 2012.12,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4권 5호(제74집).
31. 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현민철·강기춘, 2013.2, 산경논집 제30집.
32. Japanese Yen Behavior since 1980, Jin-Ock Kim and Gi Choon Kang,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14 No.3, December, 2013.
33.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참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강기춘·김진옥, 2013.12,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5집.
34.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한 종합지표 작성 및 적용, 강기춘·김명직, 2014.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35. 공급사 모니터링이 현장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부연·강기춘·현민철, 2014.1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36. 제주지역 경기변동의 특성 연구, 강민서·강기춘, 2018.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37. 우리나라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춘·김명직·하태현, 2018.11, 산경논집 제38권 제4호.
38. 종합지표 작성 방법 및 적용: 우리나라 지역별 좋은 일자리 지수, 강기춘, 2019.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2호.
39.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 관계, 강기춘, 2019.1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40. SWOT-AHP 분석을 통한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강석규·강기춘·황진욱, 2020.9, 수산경영론집 제51권 제3호.
41.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지표를 이용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사례, 강석규·강기춘, 2020.12, 수산경영론집 제51권 제4호.
42. 경제적 충격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강기춘, 2021.8, 지역개발연구 제53권 제2호.
43. 표준화 방법에 따른 지역산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스마트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강기춘·조부연, 2022.9,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12권 제3호.
44. 제주지역 주택 유형별 가격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양영준·강기춘, 2023.3, 부동산학연구 제29집 제1호.
45. 연근해어업의 지역별 경쟁력 지수 및 유형-강석규·강기춘,

2023.9, 수산경영론집 제54권 제3호.

46. Dynamic Relationship Among Eeducation Expenditure, Economic Growth, and Human Capital in the Provincial Regions: Application of Standard Research Methodology and Suggesstion, Gi-Choon Kang and Youngsik Kwak, 2023.12, 표준인증안전학회지 제13권 제4호.
47.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관광산업생산지수 개발 연구, 강영준·강기춘, 2023.12, 지역개발연구 제55권 제3호.
48.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쟁력 지수 및 유형-강기춘·강석규, 2024.12, 수산경영론집 제55권 제4호

著書 및 譯書

1. 자본주의의 이상(아인 랜드 저, 강기춘 역)(자유기업센터, 1998년 5월)
2. 경제학의 교훈(헨리 해즐릿 저, 강기춘 역)(자유기업센터, 1999년 2월)
3. 한국의 국제경쟁력과 10대 도시의 지역경쟁력 연구총서(강기춘외 4인 공저)(산업정책연구원, 1999년 4월)
4. 경제학개론(박상수·강기춘 공저)(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년 3월)
5. 계량경제학: 이론과 실습(강기춘 저)(온누리, 2010년 5월)
6. 제주물산업총론(김원형·강기춘 공저)(내하출판사, 2011년 4월)
7. 경제동학이론(미하우 칼레츠키 저·강기춘 역)(한국문화사, 2014년 2월)
8. 알기쉬운 경제학 입문(박상수·강기춘 공저)(진샘미디어, 2015년 2월)
9. (JRI 재직 중 기록) 광야생활 3년(강기춘 저)(제주연구원, 2017년 10월)
10. R 기초 및 통계분석(강기춘 저)(신아문화사, 2019년 1월)
11. R 응용 및 계량경제분석(강기춘 저)(신아문화사, 2019년 1월)
12. Excel 및 R 활용 경제데이터분석(강기춘 저)(제주대학교 출판부, 2020년 1월)
14. R과 Python 활용 계량경제분석(강기춘 저)(한경사, 2025년 2월)
15. R과 Python 활용 통계분석(강기춘 저)(한경사, 2025년 2월)

其他 刊行物

1.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0년 9월)
2.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2011-2020(공저)(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11월)
3. 제주생활문화 100년(공저)(제주문화원, 2014년 12월)
4. 제주상의 80년사(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5년 4월)
5. 2014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5년 2월)
6. 2017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7년 12월)
7. 2018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8년 12월)
8. 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공저)(한라일보, 2019년 8월)
9. 2019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19년 12월)
10. 2020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20년 12월)
11. 2024 제주경제백서(공저)(제주상공회의소, 2024년 12월)

研究報告書

1. 제주도와 오키나와현간의 해양생물 및 양조산업 협력사업
(공동연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년 9월)
2. 환경친화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전략 수립(공동연구)(과학기술부, 2002년 10월)
3. 내국인면세점 개점에 따른 제주도내 관련업체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조사연구(공동연구)(제주도, 2003년 3월)
4. 선진국 바이오사이언스파크 벤치마킹 연구(책임공동연구)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전략산업기획단, 2003년 7월)
5. 제주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공동연구)(제주도, 2003년 7월)
6. 제주대학교 혁신역량 강화방안 연구(공동연구)(제주대학교, 2003년 9월)
7. 제주도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공동연구)(과학기술부, 2003년 11월)
8. 제주도내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제주도, 2003년 12월)
9.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의 개발(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3년 12월)
10. 제주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공동연구)(제주도, 2004년 7월)
11. 제주국제평화센터(구, 제주밀레니엄관) 관리운영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공동연구)(제주도지방개발공사, 2005년 1월)

12. 제주도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공동연구)(제주도, 2005년 2월)
13. 제주도 과학기술진흥계획(제주과학기술혁신로드맵)(공동연구)(과학기술부, 2005년 2월)
14. 제주지역인적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5년 6월)
15. 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직업훈련 수급 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연구(공동연구)(제주지방노동사무소, 2005년 11월)
16.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공동연구)(제주도, 2005년 12월)
17.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소비지표 변경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5년 12월)
18. 제주지역 경기선행종합지수의 개발(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5년 12월)
19. 동북아 관광·휴양·지식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제주도 발전전략 연구(공동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년)
20. 제주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공동연구)(제주시 21세기 발전위원회, 2005년 12월)
21.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공동연구)(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년 9월)
22. 지방공기업 경영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공동연구)(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년 12월)
23.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모형 연구(공

- 동연구)(감사원 평가연구원, 2007년 12월)
24.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한 종합지표 작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강기춘·김명직)(감사원 평가연구원, 2007년 12월)
 25. 국립대학 운영실태 비교분석(공동연구)(감사원 평가연구원, 2009년 2월)
 26. 국책기관 등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공동연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09년 10월)
 27. 제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0-2014)(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12월)
 28.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개편에 관한 연구(고봉현·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 2009년 12월)
 29. 제주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공동연구)(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0년 6월)
 30. JDC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연구(공동연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0년 7월)
 31. 제주지역 경기에측모형 구축 I(고봉현·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 2010년 12월)
 32. 친환경 향장품 소재 산업화 촉진 및 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공동연구)(지식경제부, 2010년 12월)
 33. 제주대학교 윤리경영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공동연구)(제주대학교, 2011년 4월)
 34. 제주지역 음료제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전략 도출 연구(공동연구)(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2011년 5월)

35. 골목상권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공동연구)
(제주상공회의소, 2011년 10월)
36. 제주지역 경기에측모형 구축 II(고봉현·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2011년 11월)
37. 제주지역 특화형 기업지원모델 개발-BT산업 및 IT산업
중심으로-(공동연구)(제주테크노파크, 2011년 12월)
38. 제주지역산업기술개발(R&D)사업 성과분석(공동연구)
(제주테크노파크, 2011년 12월)
39. 제주음료제조업체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연구(공동연구)(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2012년 2월)
40. 제주물산업연구센터 운영전략(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개
발공사, 2012년 3월)
41.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총괄계획서(공동연구)
(제주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 3월)
42.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방안(고철수·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6월)
43. 기후변화 건강영향 조사·대응 체계화 방안 연구(공동연
구)(국립환경과학원, 2012년 8월)
44. 제주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공동연구)(제주테크
노파크, 2012년 10월)
45. 제주 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공동연구)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2년 11월)
46.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2011-2020(공동연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12월)

47.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12월)
48. 제주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한승철·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12월)
49. JDC면세점 매출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공동연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2년 12월)
50. 제주광역경제권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년 12월)
51. 2012 제주 지역산업기술개발(R&D)사업 성과분석(공동연구)(제주테크노파크, 2012년 12월)
52.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연구(공동연구)(제주테크노파크, 2012년 12월)
53. 제주 천연염색산업 중장기 발전방안(공동연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2년 12월)
54.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마케팅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공동연구)(제주 슈퍼마켓협동조합, 2012년 12월)
55. 감귤정유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공동연구)(서귀포시 감귤정유 클러스터 사업단, 2013년 1월)
56.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보고서(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2월)
5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매뉴얼 연구보고서(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2월)
58. 제주 산업경쟁력지수 및 경제행복지수 개발 연구(공동연구)(제주상공회의소, 2013년 2월)

59. 2013년도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평가보고서(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6월)
60. 제주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세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제주관광공사, 2013년 5월)
61. 제주지역 제조업 발굴 및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62. 2013년도(2012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10월)
63. 천연유래물질 기반 제품 고객만족도 및 테스트 마케팅 조사(공동연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3년 12월)
64. 서귀포 법환마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공동연구)(한국문화원연합회, 2013년)
65. 자연의 색 제주천연염색(공동연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3년)
66. 제주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67. 제주 첨단제조업 발굴 및 산업별 육성전략 연구(공동연구)(제주테크노파크, 2013년)
68. 제주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활성화 전략 연구(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69.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수요분석 연구(공동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3년)
70. 힐링서비스 링크센터 구축사업(공동연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4월)

71. 천연유래물질 기반 제품 고객만족도 및 테스트 마케팅 조사(공동연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4월)
72.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조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5월)
73. 도심형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입지에 관한 연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2014년 5월)
74. 2014년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표본설계(공동연구)(제주관광공사, 2014년 6월)
75. 2014년도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평가보고서(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7월)
76. 2014년도('12~'13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4년 10월)
77. 승마시설 사고발생 예방 개선방안 및 보험활성화 연구(공동연구)(한국마사회, 2014년 11월)
78. 천연염색 체험마을 컨설팅(공동연구)((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천연염색사업단, 2014년 12월)
79.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 및 크루즈 관광객 설문조사(공동연구)(제주관광공사, 2015년 1월)
80. 동문재래 야시장 영향조사 용역(공동연구)(제주시지역경제과, 2018년 5월)
8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진단 연구(공동연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8년 8월)
82. 2018년도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경제성 및 사업성과 분석(공동연구)(한국수자원관리공단, 2019년 3월)

83.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활성화 계획 수립
(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6월)
84. 제주 역내의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발굴연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12월)
85. 제주화장품원료산업화지원센터 자립화 방안 수립 용역(공동연구)(제주테크노파크, 2019년 12월)
86. 서귀포시 야시장 조성방안 연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9년 12월)
87. 울진·영덕 대게 산란서식장 경제성 분석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공동연구)(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서비스코리아, 2020년 8월)
88. 바다숲 국가관리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공동연구)(한국수산자원공단, 2020년 8월)
89.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수립 학술 용역(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0월)
90. 제주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연구(공동연구)(제주상공회의소, 2020년 11월)
91. 유희공간 및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1월)
92. 지역 간 연계협력형 제주 해양바이오 생산기지 및 소재개발 연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12월)
93.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공동연구)(한국수산자원공단, 2020년 12월)
94. 동해시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및 사후

- 관리계획 수립(공동연구)(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서비
스코리아, 2020년 12월)
95. 2020년도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경제성 및 사업성과 분석(공동연구)(한국수산자원공단, 2021년 1월)
 96.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0월)
 97. 제주지역 수용력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공동연구)(제주연구원, 2021년 11월)
 98. 제주관광기념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주천연염색산업 육성 방안(공동연구)((사)제주문화관광산업진흥원, 2021년 11월)
 99. 스마트관광 아일랜드 구축을 위한 제주 스마트관광 육성 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 12월)
 100.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공동연구)(제주시, 2022년 7월)
 101. 2022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분석: 근해어업(공동연구)(한국수자원공단, 2022년 9월)
 102. 서귀포시 유통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공동연구)(서귀포시, 2022년 10월)
 103.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공동연구)(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 2022년 11월)
 104. 2022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분석: 연안어업(공동연구)(한국수자원공단, 2022년 11월)

學術研究費

1.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1994년 9월~1995년 8월
 - 연구과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변동에 있어서 충격과 전파과정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2.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1997년 4월~1998년 3월
 - 연구과제: 다부문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충격의 지속성 측정
3. 자유기업센터 번역 연구비 수혜
 - 연구과제 및 기간: CAPITALISM: THE UNKNOWN IDEAL(1997년 4월~1997년 12월)
 - 연구과제 및 기간: Economic in One Lesson(1997년 11월~1998년 10월)
4.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1997년 10월~1998년 9월
 - 연구과제: 다부문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대만의 산업별 경기변동 연구
5.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해외파견
 - 파견기간: 1996년 12월~1997년 2월
 - 파견학교: Iowa State University(Visiting Scholar)
 - 연구과제: 한국·미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와 가격·생산의 지속성 및 공동변화 비교연구

6.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해외파견
 - 파견기간: 1999년 12월~2001년 2월
 - 파견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 Iowa State University(Visiting Scholar)
 - 연구과제: 한국·미국의 산업별 경기순환 연구
7.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육성지원 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2001년 12월~2002년 11월
 - 연구과제: 지역경기변동의 충격과 전파과정에 관한 연구
8.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 수혜(공동)
 - 연구기간: 2003년 6월~2004년 5월
 - 연구과제: 독점력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9.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 수혜(공동)
 - 연구기간: 2004년 6월~2005년 5월
 - 연구과제: 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10.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산학공동연구 연구비 수혜(공동)
 - 연구기간: 2010년 8월~2011년 4월
 - 연구과제: 제주지역 음료제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전략 도출 연구
11.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산학공동연구 연구비 수혜(공동)
 - 연구기간: 2011년 9월 - 2012년 1월
 - 연구과제: 제주음료업체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연구
12.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2011년 9월 - 2012년 8월

- 연구과제: 경제동학이론-자본주의 경제에서 순환 및 장기 변화에 관한 논문--(Michal Kalecki)

13. 제주대학교발전기금 연구비 수혜

- 연구기간: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연구과제: 엑셀 및 R 활용 경제분석

學內奉土活動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전산실습실 주임교수
(1994년 3월~1997년 3월)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학과장
(1999년 3월~1999년 12월, 2001년 3월~2002년 12월)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운영위원(2001년 10월)
-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논설위원(2001년 10월)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운영위원(2001년 11월)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위원(2004년 2월)
-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운영위원
(2005년 9월~2005년 12월)
- 제주대학교 평의회 평의원(2009년 4월~2011년 4월)
- 제주대학교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 부센터장 겸 기획조정부장 (2009년 9월~2011년 5월 31일)
- 제주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2010년 6월~현재)
- 제주대학교 언론·미디어센터 운영위원(2010년 9월~현재)
- 제주대학교 타라문화연구소 지리산업분과 연구위원
(2011년 4월~2013년 4월)
- 제주대학교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 제주위터글로벌 브랜드화 트랙장 (2011년 6월 20일~현재)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학과장, 대학원 경제학과 주임교수,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주임교수
(2011년 10월~2013년 10월)

-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장
(2012년 2월~2014년 2월)
- 제주대학교 특성화계획 수립 TF팀
(2012년 8월~2013년 7월)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2018년 3월~현재)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운영위원회 위원
(2018년 6월~2020년 5월)
- 제주대학교 연구비감사위원회 위원
(2020년 3월~2022년 12월)
-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위원
(2020년 4월~2022년 3월)
- 제주대학교 관광서비스 교육연구단 연구위원
(2021년 2월~2022년 12월)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학과장,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주임교수, 경영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주임교수
(2022년 3월~2022년 12월)

社會奉土活動

- KBS제주방송총국 경제한마당 경제해설
(1994년 11월~1995년 3월)
- 제주일보 논설위원(1998년 4월~2005년 12월)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1998년 4월)
- 제주 풀뿌리 경제연합 자문위원(1999년)
- 국제자유도시추진 실무위원회 위원(1999년 7월)
-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2001년 3월)
- 제주극동방송 경제칼럼(2001년 10월~2002년 5월)
- 제주채신청 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위원(2001년 11월)
-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자율추진위원회 위원(2002년 3월)
- CBS제주방송 경제칼럼(2002년 10월~2003년 5월)
- 제주채신청 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 위원(2002년 10월)
- 제주경실련 경제분과 위원장(2003년 2월~2003년 12월)
- 제주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 자문협의회 위원(2003년 6월)
-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주준비위원회 위원
(2004년 2월)
- 한국학술진흥재단 패널심사위원(사회분과)(2004년)
-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2004년 5월)
- 제주경제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위원(2004년 6월)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
(2004년 6월)
- 제주시 50년사 집필위원(2004년 8월)

- 제주체신청 제3대 고객대표위원과 우체국서비스현장 심의
위원(2004년 10월)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기구유치 T.F팀 위원(2005년 4월)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연구위
원(2005년 4월)
-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2005년 4월)
- 제주시 디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위원
(2005년 6월)
- 시장경영지원센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자문단 자문위원
(2005년 10월)
- 감사원 감사연구원 자문위원(2009년 2월~2010년 2월)
-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문교수
(2009년 3월 12일~2015년 3월 11일)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2009년 5월)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인대회 조직위원회 위원(2009년 9월)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2009년 10월 26일~2013년 10월 25일)
-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위원
(2010년 1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관리대책본부(위원, 운영위원, 실무위원)
(2010년 2월)
- 제주권 광역유관기관협의회 위원(2010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2010년 7월)
- 제주테크노파크 친호나경 향장품 소재 산업화 촉진 및 국

- 제도시조성 방안 연구 기획위원(2010년 9월~2011년 1월)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2010년 10월~2012년 10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 협의회 위원
(2011년 2월~2013년 2월)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2011년 3월)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2011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자문교수(2011년 5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자문위원회(위원, 부위원장, 운영
위원장)
(2011년 7월 21일~2014년 6월 30일)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운영위원회 위원(2011년 7월)
 -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제주맥주’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2011년 9월~2013년 6월)
 -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2011년 11월 25일~2013년 11월 24일)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2년 2월 15일~2014년 2월 14일)
 -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2012년 2월 13일~2014년 2월 12일)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소상공인포럼 정책위원회 위원
(2012년 3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
(2012년 3월 13일~2014년 3월 12일)

- 제주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
(2012년 4월 5일~2014년 4월 4일)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촉진 T/F팀 위원(2012년 5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 자문위원
(2012년 12월)
- 감사원 감사연구원 자문위원(2013년 2월~2014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 위원
(2013년 3월 4일~2013년 6월 30일)
-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정책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
(2013년 9월)
-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2013년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FTA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014년 4월 4일~2016년 4월 3일)
- 제주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
(2014년 5월 19일~2016년 3월 31일)
- 제주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단
(2014년 11월~2015년 12월 31일)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이사(2014년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위원
(2014년 12월 9일~2016년 12월 8일)
- 제주상공회의소 8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위원
(2014년 12월 30일)
- 제주상공회의소 80년사 발간 집필위원회 위원
(2015년 1월 3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2015년 2월 13일~2017년 3월 12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
(2015년 2월 25일~2019년 2월 24일)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15년 2월 28일~2017년 2월 27일)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원
(2015년 2월 28일~2017년 2월 27일)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2015년 4월 14일~2017년 4월 13일)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5년 6월 12일~2017년 6월 11일)
- 지역경제 활성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위원
(2015년 7월 1일)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5년 7월 8일~2017년 7월 7일)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
(2015년 9월 21일~2019년 9월 20일)
- 제주창조경제협의회 위원(2015년 9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위원(2016년 2월 2일~2018년 2월 1일)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자문위원
(2016년 5월 3일~2018년 5월 2일)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발전협의회(위원, 부위원장)

- (2016년 6월 3일~2018년 6월 2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책전략자문위원회 위원
(2017년 1월~2018년 12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7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2017년 6월 12일)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17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칭)국제인재개발원 추진위원회
위원(2018년 5월 11일~2018년 12월 10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회적가치 추진 위원회 위원
(2018년 12월 17일~2020년 12월 16일)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자문관
(2019년 4월 26일~2021년 4월 25일)
 -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2019년 5월)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위원, 위원장)
(2020년 2월 21일~2022년 2월 20일)
 - 한국은행 제주본부 외부연구용역 심의위원
(2020년 2월 10일~2022년 12월 31일)
 -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문교수
(2018년 3월 30일~2023년 3월 29일)
 - (사)제주산학융합원 이사
(2017년 5월 2일~2023년 6월 29일)

- 제주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부원장, 연구위원)
(2018년 4월 29일~2024년 4월 28일)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 제2공항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2019년 3월 27일~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상생전략 자문위원(2019년 6월 3일~현재)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위원, 위원장)
(2022년 9월 7일~2024년 9월 6일)
-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출제위원)
(2025년 2월 12일~2025년 3월 31일)
- 2025년도 한국은행 제주본부 외부연구용역 심의위원
(2025년 4월 7일~2025년 12월31일)
- 제주상공회의소 9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위원
(2025년 4월 23일~2025년 12월 30일)

學術發表

1.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1994년 2월
(산업별 생산변동에 있어서 총체적 충격과 부문충격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1970년부터 1992년 12월까지의 한국 자료를 이용-)
2. 한국금융학회 월례토론회, 1994년 10월
(거시경제충격이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
3.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학술발표회, 1995년 2월
(지역총생산(GRP)의 장기지속성 및 공동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4.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월례발표회, 1997년 3월
(경기순환이론의 연구과제와 방법론)
5.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논문발표회, 1999년 10월
(지역별 산업생산의 경기순환적 특징)
6.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1999년 11월
(A study on sectoral business cycles in Korea and Taiwan using the multi-sector model)
7.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및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학술발표회, 2003년 10월 (산업별 생산에 있어서 충격의 지속성 및 전파 측정)
8. Islands of the world conference VIII, 2004년 11월
(The Implementing Strateg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9. 제25회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대회, 2010년 8월 19일
(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10. 국제지역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2012년 6월 2일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prices and
macroeconomic variavles : The evidence from
Mongolia and Korea)
11. 종합지표 작성 방법 및 적용 : 좋은 일자리 지수, 2018
년 11월 2일 (2018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 학술대회)
12.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및 고용간 관계, 2019년 5월
24일 (2019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發表

1. 월례발표회(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7년 3월
(경기순환이론의 연구과제와 방법론)
2. 정책토론회(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 2002년 11월
(제주개발과 토지)
3. 상공인 세미나(제주상공회의소), 2003년 5월(쇼핑아울렛
사업에 따른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4. Korea Day Seminars(37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ASIAN DEVELOPMENT BANK),
2004년 5월 (The Implementing Strateg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5. 지역경제세미나(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발전연구원), 2005
년 6월 (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6. 2009년 상반기 제주경제 리서치세미나(한국은행 제주본
부), 2009년 6월 (제주경제 생산구조 현황 및 특징)
7. 2009년 3분기 경제동향간담회 발제(한국은행 제주본부),
2009년 9월 (신지역발전과 제주특별광역시경제권 발전전략)
8. 2009년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문교수 초청세미나(한국은행
제주본부), 2009년 11월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한 종합지
표 작성 및 적용)
9.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고용포럼(제주상공회의소),
2009년 11월 (제주지역 청년실업 현황 및 대책)

10.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성과보고회(제주선도 산업지원단), 2011년 5월 (제주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11. 아태정책연구원(APPRI) 제223 외교통상정책연구 이벤트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APPRI), 2011년 6월 (동북아(한·중·일) 경제협력과 제주의 역할)
12. 조세연구원(KIPF)-제주대학교 공동 학술세미나(KIPF·제주대학교경제학과), 2011년 8월 (제주의 경제 및 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13. 지역순회세미나-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년 2월 (제주권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동향)
14. 제주 소상공인 포럼(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2년 3월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과제)
15.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제주발전연구원), 2012년 5월 (제주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16. 제주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2년 5월 (제주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2년 5월 (지역발전정책과 제주지역 균형발전 전략)
18. 제4기 세정대학과정 하계 워크숍(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년 8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19. 2012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2012년 9월 (중고령자

일자리지원 및 실업자 재취업 방안)

20. 제41차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정책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의회), 2012년 9월 (제주형 제조업 육성 전략 및 정책 방안)
21.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형 민생정책 방향과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 2013년 1월(새정부의 민생정책 방향과 제주의 대응과제)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 제4차 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3년 2월(제주지역 소득 역외유출 현황과 과제)
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산업과 일자리창출’(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아시아뉴스통신 제주본부), 2013년 6월 (제주물산업 성과와 과제)
24. 제5기 세정대학과정 하계 워크숍(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 제고의 성과와 과제)
25. 국회지방살리기포럼 5차 현장세미나(국회지방살리기포럼), 2013년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과제)
26.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2013년 10월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방안)
27. 제주의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 현황과 방안(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2014년 6월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28. 2014년도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역경제세미나, 2014년 9월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9. 제66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2015년 1월 20일 (제주지역 발전과 Think Tank의 역할)
30.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제대토론회, 2015년 2월
12일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31. 성공적인 제주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5년 8월
26일 (제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32. 2015 제주고용포럼, 2015년 10월 22일 (노동시장 선진
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33. 제주 NIA 글로벌센터 오픈 기념세미나, 2015년 10월
29일 (제주의 변화 및 NIA(글로벌센터)의 역할)
34. 제주미래혁신산업 포럼 Keynote Speech, 2015년 12월
23일 (제주지역 신성장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35. 2016 Annual Conference for Think Tanks of
Emerging Economies,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CIRD), 29 October, 2016(The
Building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and
the Role of Jeju Island)
36. 2016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 2016년 11월 1일
(K-MOOC(계량경제학) 운영 사례)
37.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 위한 전문가 토
론회, 2016년 11월 4일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중심으로-)

38.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 위한 워킹그룹 회의, 2017년 1월 18일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중심으로-)
39. JDC 창립 15주년 제주형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 2017년 4월 26일 (제주형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JDC의 역할)
40. 국제화 촉진을 위한 JDC의 역할과 방향 세미나, 2017년 8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화 현주소 및 향후 과제-JDC의 역할을 중심으로-)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글로벌 투자유치 세미나, 2018년 12월 12일 (제주 FDI 현황과 과제)
4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금 설치 조례 제정 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5월 10일((가칭) 제주청년지원기금 설치 방안)
43. 제주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9년 5월 24일(4차 산업혁명과 제주중소기업의 역할)
44. 포스트코로나19, 경제세미나(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2020년 10월 27일(AC시대, 제주경제 발전방안)
45. 2021년 지역경제세미나(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상공회의소), 2021년 9월 28일(산업 대변혁 시대, 제주기업 대응 전략)
46. 2021년 JITC 경제개발 국제워크숍(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2021년 12월 1일(Economic Diagnosis and revitalization using Big data : The case of Jeju)

47. 2022년도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Keynote Speech,
2022년 10월 14일 (제주지역 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48. International scientific-practical conference,
Samarkand branch of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Uzbekistan, 19-20 May, 2023
(Data-Based Economic Diagnosis and Revitalization:
A Case Study of JEJU)

學會活動

- 한국경제학회 회원
-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원
-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원
- 아태경제학회 이사
- 한국융합학회 이사
- 한국감성과학회 이사
- 한국경영경제학회 편집위원
- 제주경영학회 사무국장
- 한일경상학회 편집위원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편집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위원
- 국제지역학회 이사
-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편집위원
- 한국경제연구학회 이사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부회장

論文審查

- 경제학연구
- 국제경제연구
- 계량경제연구
- 한국경영경제연구
- 지방행정연구
- 산업혁신연구
- 해운물류연구
- 통계연구
- 감사논집
- 사회과학연구
- 해양정책연구
- 탐라문화
- 제주도연구
- 환경정책
- 경제연구
- 아태경상저널
- 지역개발연구

特 講

1. 1993.3.20 방송통신대 제주학습관 특강
(경제학의 주요내용과 경제학도의 자세)
2. 1993.6.7 제주대 특강(최근의 우리경제와 신경제로의 도약)
3. 1993.6.30. 제주교육대 특강
(최근의 우리경제와 신경제로의 도약)
4. 1993.8.20 제주대 특강(신경제의 발전방향 및 금융실명제)
5. 1993.8.27. 제주교육대 특강
(신경제의 발전방향 및 금융실명제)
6. 1993.10.8 탐라교육원 특강(한국경제의 현안 및 극복과제)
7. 1994.1.19 탐라교육원 특강(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8. 1994.10.6 제주병무청 특강(우리나라의 경제현실)
9. 1994.12.15 제주대 특강(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10. 1995.9.29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11. 1995.10.12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 남부지부 사장단 세미나
특강(WTO체제하의 중소기업인의 대응방안)
12. 1996.5.16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특강(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13. 1996.10.25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한국의 국제경쟁력)
14. 1996.12.12. 제주대 특강
(정보화 추진전략 및 국가경쟁력 강화)

15. 1997.2.26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신입생 특강
(대학생활:새로운 도약의 시기)
16. 1997.3.26 전국 미용사 협회 제주 세미나 특강
(위기경제와 소비전략)
17. 1997.9.26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18. 1998.4.14. 남원로타리클럽 특강
(IMF체제와 지역경제의 미래)
19. 1998.9.18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20. 1998.11.28 국제와이즈멘 한국제주부지구 특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와이즈멘의 역할)
21. 1999.8.25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주도지부 특강
(금융구조조정과 지역금융의 역할)
22. 1999.10.22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Internet 특강)
23. 2001.9.21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미래)
24. 2002.9.12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디지털 경제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25. 2003.9.5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어업경영자
과정 특강(지식기반시대 제주경제의 진로)
26. 2003.10.23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지식기반시대 제주경제의 진로)

27. 2004.3.3.,5,17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특강
(제주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28. 2004.5.20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동북아 경제중심 실천전략 축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
29. 2004.7.30 공통과학(생물교사) 하계 직무연수 특강
(디지털 경제시대 한국 및 제주경제의 진로)
30. 2004.10.28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CEO 연수회 특강
(디지털 경제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31. 2004.10.29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어업경영자
과정 특강(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32. 2004.11.26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CEO 연수회 특강
(디지털 경제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33. 2005.4.7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국 속의 제주경제)
34. 2005.9.16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어업경영자
과정 특강(세계속의 한국경제, 한국 속의 제주경제)
35. 2005.10.14 재외동포재단 제8회 재외동포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특강(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36. 2005.11.2 2005 경기도 경제활성화 연찬회 특강
(시장경제와 한국경제의 진로)
37. 2007.4.26 감사연구원 감사전문심화과정 특강
(평가자료 분석기법)
38. 2008.5.1 감사연구원 감사전문심화과정 특강
(평가자료 분석기법)

39. 2009.3.19/5.21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실물경제과정
특강(실물경제의 기초원리 및 응용)
40. 2009.3.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 의정세미나 특강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
41. 2009.5.8 지역경제교육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
(제주 지역경제현황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42. 2009.5.9 제1기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
(제주 지역경제현황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43. 2009.6.4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및 제주경제의 진로)
44. 2009.6.11 감사연구원 감사전문심화과정 특강
(성과분석기법)
45. 2009.7.7.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특강
(제주경제 현황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46. 2010.1.27. 제주여자고등학교 특강
(광역경제권, 제주물산업, 그리고 경제학)
47. 2010.3.13 제2기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
(제주 지역경제현황과 경제교육의 필요성)
48. 2010.5.3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실물경제과정 특강
(실물경제의 기초원리 및 응용)
49. 2010.6.4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세제정책역량과정
특강(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세경쟁력 강화방안)
50. 2010.6.10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제주국제자유도시와투자유치)

51. 2010.10.14 제주지역 제5차 펀드매니저실무과정 특강
(거시경제분석)
52. 2010.11.25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 특강
(제주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53. 2010.12.1. 제주여자고등학교 특강
(제주국제자유도시, 광역경제권, 제주물산업, 경제학)
54. 2011.2.21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새내기 특강
(대학생활: 새로운 도약의 시기)
55. 2011.3.4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전략 과정 특강(제주경제의 과거와 미래전략)
56. 2011.5.26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제주물산업의 현재와 미래)
57. 2011.6.14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정대학 특강
(제주물산업의 현재와 미래)
58. 2011.6.16 서귀포 올레시장 상인대학 특강
(자기경영 성공학)
59. 2011.10.8 제주민속오일시장 상인대학 특강
(자기경영 성공학)
60. 2011.8.4 20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글로벌
마케터 교육과정 특강(거시 및 세계경제의 이해)
61. 2012.2.3 김포시 공직자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특강
(지역자료에 대한 이해)
62. 2012.5.1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정대학 특강
(제주의 경제 및 재정 현황과 과제)

63. 2012.6.4 서울동노회 구리시찰회(통합) 연찬회 특강
(세계경제동향과 한국경제)
64. 2012.6.7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특강
(제주지역 경제 및 재정 현황)
65. 2012.6.20 제주서문공설시장 상인대학 특강
(자기영영 성공학)
66. 2012.6.22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지역경제분석 및
활성화 전략 과정 특강(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전략)
67. 2012.6.25 김포시의회 연찬회 특강
(통계를 활용한 지역의 이해-김포시-)
68. 2012.7.30 2012년 제주지역 중등 사회과교사 및 초등교사
직무연수(경제학의 이론과 실제)
69. 2012.9.12, 9.23, 10.9, 10.10, 10.18, 10.19 2012년
제주시 하반기 “손에 잡히는 시민경제교육”
(손에 잡히는 경제이야기)
70. 2012.10.15 2012년 하반기 의원세미나(서울시의회 보건
복지위원회) 특강(세계경제동향과 한국경제)
71. 2012.10.30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특강(제주지역 경제 및 재정 현황)
72. 2012.11.9. 농협 '12년 대출심사역 권역별 리더 협의회
특강(최근 경제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73. 2012.11.14 제주서문공설시장 상인대학(심화과정) 특강
(전통시장의 매력)
74. 2012.12.10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2기 제주미래산업

과정 특강(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전략)

- 75. 2013.1.10 2013년 초중등 교사직무연수(한국경제의 이해)
- 76. 2013.1.22 서귀포시청 지역경제국 직원 워크숍 특강
(2013년 경제전망 및 제주의 발전전략)
- 77. 2013.3.13, 3.29, 4.2, 4.8, 4.15, 4.16, 4.29, 4.30,
5.1, 5.2 2013년 제주시 민방위대 교육
(나도 지역경제 전문가)
- 78. 2013.4.16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정대학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
- 79. 2013.5.30 한라도서관 2013년 독서 아카데미 특강
(경제와 친해지기)
- 80. 2013.6.13 한라도서관 2013년 독서 아카데미 특강
(신문으로 배우는 생활경제)
- 81. 2013.6.3 제주시 탐동 유니코 상인대학(기본과정) 특강
(상인정신)
- 82. 2013.6.13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
- 83. 2013.6.20 한라도서관 2013년 독서 아카데미 특강
(가정의 상비약 경제상식)
- 84. 2013.6.24 제주시 탐동 유니코 상인대학(심화과정) 특강
(전통시장의 역사)
- 85. 2013.6.27 한라도서관 2013년 독서 아카데미 특강
(현실경제 따라잡기)
- 86. 2013.7.2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미래예측과 신성장

산업 과정 특강(미래예측방법 및 분야별 미래예측)

87. 2013.7.4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미래예측과 신성장
산업 과정 특강(제주산업예측)
88. 2013.7.6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시민경제대학 특강
(제주경제의 이해)
89. 2013.7.10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인대학(기본과정) 특강
(상인정신)
90. 2013.7.1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대학(기본과정) 특강
(상인정신)
91. 2013.8.1 2013년 하계 초등교원 경제교육 직무연수 특강
(제주경제와 투자유치전략)
92. 2013.8.8 2013년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특강
(재이 있는 경제 이야기)
93. 2013.8.2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대학(심화과정) 특강
(전통시장의 역사)
94. 2013.8.21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인대학(심화과정) 특강
(전통시장의 역사)
95. 2013.8.27 제주서중 교원연수 특강(제주경제의 이해)
96. 2013.8.27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특강
(제주경제의 이해)
97. 2013.9.27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2013 제2기 지역
경제분석 및 활성화전략 과정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전략)
98. 2013.10.16. 서귀포시감귤주명품화사업단 특강

(제주경제 및 향토산업의 이해)

99. 2013.10.29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미래예측과 신성장 산업 과정 특강(제주 미래산업 : 예측과 대응전략)
100. 2014.2.21 2014년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특강(제주경제 및 향토산업의 이해)
101. 2014.3.18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2014 제1기 미래 예측과 신성장산업 과정 특강(세계경제의 변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102. 2014.3.27 강원도 횡성군 모범 공무원 세미나 특강 (제주경제 사례로 배우는 횡성군 발전방안)
103. 2014.5.23 미래에셋 제주도 투자 세미나 특강 (제주경제의 이해)
104. 2014.7.28 제주지방기상청 2014년 대국민 기상교육 기상 교육 책임자 과정 특강(기상과 경제)
105. 2014.8.11 2014년 하계 중등교원 경제교육 직무연수 특강(제주경제의 이해)
106. 2014.12.26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 CEO포럼 특강 (제주경제동향 및 균형발전)
107. 2015.1.8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 전문위원회 워크숍 특강(제주지역발전의 이해)
108. 2015.3.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립 20주년 도민 토론회 기조강연(제주의 성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 공사의 역할과 책임)
109. 2015.3.20 제주 헤리티지 아카데미 특강(중국 경제와

- 제주 경제, 중국자본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110. 2015.5.9 2015년도 제1차 대정부포럼 특강
(제주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대정부 발전방안 모색)
 111. 2015.5.28 국립기상과학원 2015년 상반기 R&D사업
공유를 위한 워크숍 특강(제주지역 연구개발(R&D) 현황
및 과제)
 112. 2015.6.11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특강(제주경제의 이해)
 113. 2015.8.3 2015년 하계 초중등 교원 경제교육 직무연수
특강(경제학의 이론과 실제)
 114. 2015.8.21 2015년 서귀포고등학교 학부모 설명회 특강
(성공적인 자기관리)
 115. 2015.9.5 제1기 도서관 대학 특강
(제주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16. 2015.11.24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점포대학(심화과정) 특강
(상인정신)
 117. 2016.3.30 제주 리더스 아카데미(JLA)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18. 2016.5.17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세정대학과정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19. 2016.6.3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특강(성공적인 자기관리)
 120. 2016.7.2 제2기 도서관 대학 특강
(제주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21. 2016.9.3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연찬회
특강(제주경제, Quo Vadis?)
122. 2016.9.8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특강(제주경제, Quo Vadis?)
123. 2016.9.22 강원발전연구원 시·군 기획실(과)장 초청 합
동 워크숍 특강(제주의 꿈, 제주의 미래)
124. 2016.10.20 2016 한국철도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
대회 특강(제주, Quo Vadis?)
125. 2016.11.1 2016년 하반기 HRD Korea 리더스 워크숍
특강(제주, Quo Vadis?)
126. 2016.11.22 2016 고3 수험생 경제 교육 강의(대정고)
(재미 있는 경제 이야기)
127. 2016.11.23 2016 고3 수험생 경제 교육 강의(신성여고)
(재미 있는 경제 이야기)
128. 2016.12.13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특강(제주의 미래, 청정과 공존)
129. 2017.4.27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
특강(제주국제자유도시, Quo Vadis?)
130. 2017.6.3 HRA 10기 특강
(제주경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31. 2017.11.3. 경기·경북·전북 미니클러스터 상생 협력을
위한 초광역 워크숍 특강(제주경제, Quo Vadis?)
132. 2017.11.10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특강(제4차 산업혁명시대 생존전략)

133. 2017.11.15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17 하반기 경영
특강(제주경제 포용성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134. 2017.11.17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제주경제와 물류, Quo Vadis?)
135. 2017.12.7 국립기상과학원 2017년 응용기상 연구성과
발표회 초청강연(차별화된 경쟁력 : 창의성, 우수성, 선제성)
136. 2017.12.19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발전연구원 역량강화
워크숍 특강(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지역 연구원의 자세)
137. 2018.5.4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 특강(실물경제의 이해)
138. 2018.6.26 / 6.27 EXPLO 2018 제주선교대회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특강(직업과 진로)
139. 2018.11.19 연세대학교(원주) 경영학과 브랜드관리론
특강(Personal Brand 구축 및 관리-창의성, 우수성, 선
제성 그리고 지속성)
140. 2018.12.12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제주경제의 이해)
141. 2019.10.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특강(제4차 산업혁명과 제주해양수산업의 미래)
142. 2019.11.22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학문분야별*대학별
대학원생 논문작성법 특강(경상계열 논문작성법)
143. 2019.12.12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함덕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4. 2019.12.19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 (제주중앙여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5. 2019.12.20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제주여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6. 2020.8.13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제주제일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7. 2020.8.25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삼성여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8. 2020.8.28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제주여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49. 2020.9.4 찾아가는 교수특강 ‘제대로 가는 길’ 특강
(제주사대부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50. 2020.9.25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특강(제4차 산업혁명과 제주해양수산업의 미래)
151. 2020.10.27.~29, 11.2~4 한국국제교류재단 재1차 신남방·
신북방 차세대 한국어교육자 집중 연수 특강(한국경제
및 제주경제)
152. 2021.9.17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과정 특강(제4차 산업혁명과 제주해양수산업의 미래)
153. 2022.5.20. ‘2022 프리칼리지(Pre-College) 프로그램’
특강(대기고)(4차산업혁명시대, 다시 부상하는 경제학)
154. 2022.5.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미래발전전략 워크숍
특강(도민이 바라는 JPDC의 현재와 미래)



姜 起 春 (Kang, Gi Choon)

• 이메일 : kanggc@jejunu.ac.kr

학력

高麗大學校 經濟學科(經濟學士)

美國 Iowa(아이오와) 州立大(經濟學 博士)

경력

하나銀行(전 金星投資金融)(1983.1~1986.6)

유안타證券(전 東洋證券 東洋經濟研究所 責任研究員)

濟州大學校 經濟學科 教授(1993.3~2025.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1999.12~2000.8)

Visiting Scholar, Iowa State University(2000.9~2001.2)

Visiting Scholar, Delaware State University(2023.3~2024.2)

韓國銀行 金融經濟研究院 客員研究員(2004.6~2004.8)

濟州大學校 大學院 副院長(2005.9~2005.11)

監査院 監査研究院 팀장(2005.12~2008.12)

濟州大學校 觀光과經營經濟研究所 所長(2012.3~2014.2)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제19대 회장 역임

濟州特別自治道平生教育振興院 院長(2014.12~2017.11)

濟州研究院 院長(2014.12~2017.11))

저서 및 역서

경제학개론(제주대학교 출판부)

알기 쉬운 경제학 입문(진심미디어)

Excel 및 R 활용 경제데이터분석(제주대학교 출판부)

R과 Python 활용 통계분석(한경사)

R과 Python 활용 계량경제분석(한경사)

자본주의의 이상(자유기업센터)

경제학의 교훈(자유기업센터)

경제동학이론(한국문화사)

아라生活 32.5年

발행일 : 2025년 5월 30일

발행인 : 姜 起 春

발행처 : 도서출판 신아

* 비매품

ISBN 979-11-90748-36-0 05990



비매품



ISBN 979-11-90748-36-0

(PDF)